

제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5일(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 종합정책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가시면 회의장 오른쪽에는 공직자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다과가 준비돼 있고 위원님들을 위해서는 왼쪽에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해 봤는데 오후에 4시간을 연달아 하는 거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2시간씩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2시에 마치면 4시까지 하고 또 6시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지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기관들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만 대통령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2025년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기관 인원 현황, 최근 30년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의 집행내역, 259억 원의 예비비 청와대 복귀예산 상세 명세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대로 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로·격려 명목의 특활비라는 것이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 방법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오만한 답변 제출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결산심사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서 오늘 2시까지 다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국회가 계속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청와대에서 오늘 누가 나왔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석님 나오셨군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는 좀 새로운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치를 할 때 누구를 표상으로 정치를 하는가, 나의 사명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오늘은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띠었는데, 그 일을 한 분인데 제가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이—남군과 북군이지요—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향해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변함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편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근본적인 자기에 대한 회의와 돌아봄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 태평양 철도법을 놓아서, 대륙횡단 철도를 놓아서 미국 서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에 국립과학원을 열어서 과학기술의 기초를 쌓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모릴법을 만들어서 국유지를, 주립대학을 만들면 2000만 평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서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는 교육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홈스테드법을 만들어서, 미국 서부의 시대에 와서 5년간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면 20만 평의 땅을 공짜로 준다는 홈스테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30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자의 행렬을 만들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질문을 할 때도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장, 스스로에게 되돌아보는 마음 하나, 그 정의를 세우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담대한 제안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종합정책질의

(10시07분)

○위원장 이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연단에 오셔서 좌석 정리를 할 때까지는 시간 계산에 넣지 않도록 발언시간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8월 31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오늘은 저는 주거난, 우리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의 우리 청년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대책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니까 주로 얼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양을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에게는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 건지, 지금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주택이 공급되는 건지 그런 게 대책의 내용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2030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부담 가능한 월세나 전세나 이런 주택들이 더 공급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거고 또 막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을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내가 가능한 대상의 주택들이 얼마나 공급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정부 대책에서는 잘 보이

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설명하는 대책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소위 말하는 어포더블(affordable), 서구 유럽의 또는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 가게 되면 주택정책을 할 때 어포더블이라는 주택정책 목표가 다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부담 가능한, 적당한 주택 가격의…… 그러니까 청년들이 축적된 소득이 부족하니까 큰 빚을 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빚을 내면 살 수 있는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월세 그런 주택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딱히 그렇게 대책을 발표할 때 어포더블한,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그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한다 이렇게 정책들이 설계되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월세를 몇 명에게 얼마 이런 형태의 대책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청년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더 설명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주로 대책을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책을 만들어 내는 데만 돼 있지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은 세계적으로 RIR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자기 소득 대비 월세와 같은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냐인데 보통 한 25%에서 30%가 넘어가면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30%가 넘으면 주거 빈곤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40% 정도는 주거 빈곤층,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용의 분양주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같은 것들이 필요로 되는 데요.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주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은 분양가상한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70~80% 이런 수준으로 공급을 하니까 나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보통 많이 기다리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가 주로 남아 있고 서울 도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이런 데만 남아 있고 그거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용이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제시한 게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이번 8·13 대책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어느 정도를,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분적립형 주택 설계한 것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25%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5년 단위로 20%, 20% 계속 사 나가는 이런 방식의 것들인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마련할 때 한 25% 정도의 주택 가격만 마련을 하면 되니까 초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큰 빚을 내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서구 유럽에서도 이런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것들이 청년들을 위한 어포더블한 주택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의문을 갖고 ‘결국 몇천 호 하다가 시범사업 하다 끝날 것 아니야’ 이런 거니까 ‘어차피 이것 로또인데 나한테는 해당되는 것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거다, 기다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이런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저희가 대책을 내면서 정부에서 내년, 1년 단위 이렇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내가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에 마련하는 계획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대책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체감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도 한번 국토부와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결국 나머지는 공공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민간한테 이 사업 하라 그러면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팔아서 바로 다 수익을 회수하는 게 민간의 사업 방식인데 공공이 나머지 한 75%를 계속 한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수분양자인 청년들이 나이를 먹어 가면서 소득이 축적돼서 그걸 또 추가로 분양을 받겠다 그러면 20% 분양하고 20% 분양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가능하려면 공공이 주택이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서울에 이미 택지 같은 것들이 많이 다 밀집해서 개발이 된 상태여서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또 용산공원 문제도 그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비사업 해서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건축·재개발해서?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의 가격이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시는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김남근 위원 일단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4분의 3 정도는 있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가 일반분양을 하는 건데 일반분양가도 보통 서울에서 지금 한 15억, 20억 되는 상황인데 이걸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얘기는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이제 막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김남근 위원 아마 서울에서는 저희 성북 지역이 가장 재개발이 많은 구인데 그래서

저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정책적 도구를 조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그와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지금 영국의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그린벨트와 그레이벨트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기능이 훼손된, 예를 들면 용산공원 내에서도 보게 되면 장교 막사라든가 캠프킴이라든가 이미 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 기능들을 상실한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의 용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오히려 책임의 주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최근의 주택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본인이 빨간 펜을 딱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의 태도를 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22년에서 20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의 주거가, 주택이 한 60%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서울의 주거난, 전월세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청년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연립빌라와 같은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전월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될 서울 시장이 너무 정부 위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도 서울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좀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차관님,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협의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협조가 필요하니까 서울시의 행정이나 서울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협력만 구하겠다, 서울시에 잘 보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국토부의 행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불신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것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또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이렇게 국토부장관님하고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방식들을 한번 개선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보게 되면 10년 평균에 비해서 착공으로 58%,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한 62%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토부차관님? 한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급감한 특히 2022년 2024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21년 이후에 금융 쪽에서의, 아시다시피 레고 사태로 인해서 금융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된 측면이 있었어요.

○김남근 위원 됐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시의 주택공급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소위 얘기하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가 신통기확인 데 신통기확이라는 게 자신이 후보지 지정하고 그 지정한 후보지를 몇 년 후에 구역지정 하면, 그러면 성과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도 한 10년 걸려요. 조합설립 해야지, 사업시행계획 해야지, 관리처분계획 해야지, 착공까지도 한 10년이 걸리는데 착공을 한 후에 3~4년 또 걸리는 거예요, 입주까지.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지 지정하고 자기 것 자기가 지정하는 데만 행정을 집중하니까 구역지정 행정에 서울시의 주거정비와 관련된 행정력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의 행정이 잘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비사업에서도 주택공급이 급감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민간 공공 편가르기를 해요. 공공은 비효율이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 LH가 하는 게 17개, SH가 하는 게 14개 그 정도의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 5만 호가 넘지요. 공공 도심복합개발이라고 그래서 34개 구역에 거기도 한 5만 4000호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 오세훈 시장 시기에, 최근에 와서야 사업시행계획을 받고 있고 하지만 사업시행계획도 않고 착공도 안 됐어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 보니까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복합사업계획 승인들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만 하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해지하고 민간 도심복합개발 특별법 만드니까 민간으로 다 전환해라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공이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 10만 가까이 되는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복합개발도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이겁니다. 하나도 착공된 게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야 오세훈 시장이 저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국토부는 뭐 했습니까? 서울시가 저런 식의 오만한 행정들을 하고 저게 바로 서울시의 지금 주거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0이에요, 0.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을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이라는 것들이네요.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20년에 한 6500호 정도가 1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828호가 됐어요. 그 뒤에도 한 2000호 미만이 되면서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3년 동안 3조 9000억이나 불용했어요.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신축 매입 사업을 통해서 연립·다세대 좀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를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3조 9000억 원이나 예산을 불용하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봐 가지고는 비아파트다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그런 태도를 보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점점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도 지적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오세훈 시장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오세훈 스타일의 행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브랜드 사업만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인데, 재건축·재개발도 있고 공공정비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축, 이런 연립·다세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다음 장을 보시면 서울에 그래서 너무 서울시에 행정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병목이 되는 거야. 진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한 500세대 미만이나 이런 재건축·재개발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서울시가 틀어 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다 몇 년씩 지금 통합 심의받는데 도시계획 심의받는데 보통 한 1년, 2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또 다시 와서 진행을 하다가도 또 변경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또 서울시로 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받는 데 몇 달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 받다가 내려오는 데 또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서울시 내의 행정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 같은 거는 자치구로 좀 돌려 가지고 이 병목을 해소하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면, 국토부 이번에 법규 또 개정했잖아요. 신속인허가센터 같은 거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가 가지고 안 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해서 그런 걸 좀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위 14구역 같은 경우는 18년째 지금 계속 사업계획 승인들도 안 가고 지지부진한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서울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토부나 이런 데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데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것도 보여 줘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하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고 주로 민간이 하는 건 서울시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공공이 하는 건 LH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던진다 그래요, 대책을. 대책을 만들어 놓고 9·7 대책, 1·29 대책 그다음에 8·13 대책 하

는데 LH 입장에서는 인원은 똑같은데, 재원은 똑같은데 거기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3개 일하다가 그게 10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의 LH에 대한 대책은 축소·쪼개기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주택공급 사업이나 공익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려면 방향을 정확히 잡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해 가지고 주택공급 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게 주력이었다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LH가 그런 공공 도심복합개발 사업, 공공 재개발 이런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축 매입도 서울시에만 맡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울의 LH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해 해야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공공 도심복합개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한 사람이 6개 지구를 맡아서 일했다는 거예요, 2024년에. 그러면 맨날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끝나잖아요. 한 지구에 팀을 짜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판국인데 적어도 서너 명이 한 팀을 짜야 지혜가 모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비를 좀 현실화해 줘야 돼요. 공사비를 보게 되면, 공사비는 계속 많이 오르는데 LH에 대한 지원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쪼끔쪼끔 올리다 보니까 그 갭이 커졌어요.

그래서 2022년에 74% 정도 지원하던 게 지금 5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적극적으로 좀 늘리는, 그래서 특히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 또 기회가 있어서 따로 한번 추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의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김남근 위원님이 이걸 안 돌려놓고 가서 가지고 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보니까 장관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할 수 없이 총리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송언석 위원 PPT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랫동안 정책을 전문으로 했던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책을 할 때는—총리님, 보이지요—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왜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탐색하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까지 세우는 게 중요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먼저 그냥 던져 버립니다. 던져 놓고 보니까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 하면 그때서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뭔가 대책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문제인 정권 때 있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문제인 정권 때 무려 스물일곱 번인가 부동산 정책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일단 한번 지정을 해 놔 놓고 나니까 풍선효과로 옆이 더 올라간다 하면 거기 다시 또 규제를 하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스물일곱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태가 어떻게 보면 오류이고 실수인데 지금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죽 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어디……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송언석 위원 언제 오십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송언석 위원 언제 오십니까, 부총리?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부총리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십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오늘 하루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무효 같다, 무효.

○위원장 이광재 양당 간사님이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송언석 위원 구윤철 부총리가 25년 7월 30일 세제개편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 나타났던 것 총리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책의?

○국무총리 한성숙 ……

○송언석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제가……

○송언석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기억을 못……

○송언석 위원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때 민간에 계셔 가지고 전혀 이런 것하고 관계없었습니까? 대주주는 아니셨던 모양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내용을 알기는 하는데요. 대주주는 아니기는 했고, 어떤 내용 인지는 압니다.

○송언석 위원 중요한 것은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전횡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니까 과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날 8월 1일인가요,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됐다 해서 46일 만에 전면적으로 철회를 합니다. 재정부차관님, 맞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말씀하십시오.

○송언석 위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구윤철 장관은 세계개편 역량이 좀 문제가 있었다 해서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장관은 인정했는데도 차관이 인정 안 하는 모양이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송언석 위원 행안부장관도 안 오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국무회의 참석 중입니다.

○송언석 위원 9월 7일 날 금융 당국 조직개편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를 반 쪼개 가지고 국내 금융은 재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보내겠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서 공공기관으로 2개 다 지정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금감원 내부 반발이 심해서 아마 이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한 것 같아요.

행안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책을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더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구상했던 당초 안이었습시다.

○송언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검토 못 했지요?

이 시기에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간에 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당 대표가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사항을 하루 만에 엮어 버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고 합의서에도 그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엮어 버렸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질러 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1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대참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부위원장은 어디 갔어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신진창** 정무위 결산소위 참석 중입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 정무위 하고 있나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원래는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5월 말에 출시하는 걸로 앞당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혼란이 일어나고 급락이 일어나고 반대매매가 심화되면서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지금 저 뒤에 있어 가지고 질문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총리님, 이 정책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당시에 도입할 때에는 도입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어떤 이유였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도 출시돼서 굉장히 많은……

○**송언석 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문제의 발견, 문제의 인식이거든요. 첫 번째, 거기에 맞는 정책을 했느냐?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조치를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도 해결을 못 했어요. 결국 해외에 나가 있던 주식 자금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때 고민 사항이었는데, 고려 사항이었는데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별 영향을 못 받았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

○**송언석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뒤늦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하니까 모두가 핑퐁을 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위대로 아니다.

여기 부총리가 없으니까 질문을 하기……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부총리도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주식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자, 그런 측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보고되고 정책실장이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이 정책을 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 취지 그건 달성하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환율도 안정되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던 자금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국내주식 투자했던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총리께 이 질문 안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총리께서 해 봐야 별로 의미 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금년 7월 30일 또 세계개편안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했지요. ISA 개편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복리 효과 이런 부분이 저해 요인이 생긴다,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4일 만에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차관, 이거는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정책이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ISA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생산적 ISA를 만들고 ISA는 기존에……

○송언석 위원 그래서 재검토한다고 4일 만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 정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지금 의견을 듣고 수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수정하는 의견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이때 의견 수렴은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면 그 부작용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대변해 주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좋은 정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충분히 국회의……

○송언석 위원 차관님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이런 중요한 정책 문제에 나서는 정부 입장만 자꾸 대변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당 입장을 잘 들으시라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무처장이 왔다고 그랬어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신진창 예.

○송언석 위원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하고 회사별로 또 대출 유형별로 총량 목표를 세워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1.5%라고 했는데 금년 7월 달까지 이미 1.5%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사무처장, 맞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총리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대출 규제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6억, 4억, 2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그러면 신용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총량으로 규제를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들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면 ‘이미 그 돈은 소진되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중도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이 무산이 돼요. 돈을 떼이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치르는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나는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삿짐 싸 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떠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폐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지요. 이런 정책이야말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 보고 그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송언석 위원**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PBR 기준에 해당되면 상속·증여 주식 가치를 30% 높여서 과세하겠다고, 이 부분도 재검토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언석 위원** 이게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지지.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정부에서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송언석 위원**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 사실 아니잖아요. 동일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결혼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배우자 공제가 지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도를, 논리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 한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법 자체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가지고 중단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정부에서는 할 의지가 없습니까?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가 지금 현재 제도대로 10억씩, 10억으로 되어 있는 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 30년 됐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차관님, 지금 공직생활한 지가 30년 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차관님 처음 공직생활 할 때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 배 됐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한 10분의 1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0배 이상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상속, 배우자공제나 기초공제를 생각할 때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죽 결혼 생활하고 지내 왔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자산가치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당연히 공제금액 안쪽이기 때문에 상속을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과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상속세 낸다고 생각했지 보통 사람이 누가 상속세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국세청장님, 이 부분의 전문가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 임광현 배우자공제가 한 이십칠팔 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국세청장께서도 한때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안을 냈고 그 부분이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되다가 진행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보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님. 이게 아마 2008년도부터의 자료일 텐데 2008년도의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15억 8000,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매매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기별로 제가 한번 구분해서 봤어요. MB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입니다.

보시다시피 MB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 엄청 올랐지요. 윤석열 정부 때 다소 진정되는 듯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자꾸 변동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겠어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급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한 두어 번 발표했었지요. 그런데 그 두어 번 발표한 내용 자체를 보면 과거 정부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짜깁

기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의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물량이, 매물이 잠기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전세를 살다가 할 수 없이 전세를 버리고 다시 멀리 있는 본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새로운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최근에……

국토부장관 어디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차관 대참했습니다.

○송언석 위원 국토부차관님, 한 네댓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서너 달, 네댓 달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도 LH에서 하는 공공주택만 용적률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폐율…… 건폐율은 지금 더 이상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용적률을 조금만 완화시켜 주면 거기에 더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택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공론,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경부차관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총리님, 민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좀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민간에서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언석 위원 다양한 정책 중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먼저 우선 가격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제가 공급을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저희가 지금……

○송언석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니까 다양한 것 중에 다는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이주비 대책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

○송언석 위원 총리님, 이주비 대책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들어갔을 때 그 중간 절차 과정에서 이주비를 좀 더 빨리 지원해 준다는지 많이 지원해 주면 집을 빨리 비울 수 있고 건축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조기에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규제나 절차나 이런 것도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정한 혜택을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성숙 금융 관련해서 확대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송언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리님 답변은 그래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월세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빨간색이 전세 지수고 파란색이 월세 지수입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정부에서는 보니까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데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폭등을 해요. 젊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단 말입니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받아 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생활할 돈이 없어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시고 가시지요.

도시 근로자 월소득 지수하고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저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고 최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도 위원님이 아까 그래프 보여 주셨지만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지난 몇 년간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정부에서 오르고 내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숫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저도……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정책에 전문적으로 참여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없이 그리고 어떤 주택의 형태든 다양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주택의 형태에 맞춰서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한 반대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송언석 위원 그럴 때만 반대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 자체에 대한 부작용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라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이 정책 전문가로서 주신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반영할 부분들 살피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말씀이 길어지니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됐던, 27년이 됐든지……

○국세청장 임광현 거의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과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들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번 짚어 봐 주시고.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다음에 송언석 위원님은 어쨌든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이니까 비판이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이유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장관님, 부총리님, 국토부장관님이 한번 면밀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저도 별도로 찾아뵙고 정책 전문가로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의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역시 정책의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인철 위원 18일 날 대법관후보 임명제청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인철 위원 사전협의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존의 관례를 존중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사전협의를 했어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사전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뭐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아마 협의와 완전한 합의에 대한 개념에서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그 사전협의를 왜 할까요? 관행처럼 계속해 왔는데 해 온 이유가 뭡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서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헌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게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취지만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협의 잘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기본 헌법정신이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에서 끝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같아요. 사전협의를 안 하고 했더라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면 상대방을 그냥 쉬운 말로 먹이겠다는 이야기예요.

보통의, 저도 공무원 생활을 주로 기재부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갑 중의 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공문을 보낼 때 일방적으로 보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를 완료했을 때 그걸 토대로 한, 어떻게 보면 공문은 형식적인 결과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는 한번 엇 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도 임명제청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임명제청에 대한 촉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시다.

○**조인철 위원** 결국은 이 피해는 누가 입게 돼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만하게 제청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법원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만 제가 대법원장은 아니어서……

○**조인철 위원** 그러면 가서 대법원장님과 다시 협의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님께서 하십니다.

○**조인철 위원** 협의해 볼, 다시 상의드릴, 건의드릴 용의는 있으시냐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

○**조인철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광주 서구갑인데 광주만 해도 호남권의 대표 도시입니다. 여기에 거의 매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처음 부시장을 내려갔었는데 그때 150만이 깨졌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140만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도 보면 계속

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멀리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했고 중간중간 이명박 정부, 가장 크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구축하는 이런 정책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결과는 어떻냐라는 것을 한번 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구의 대부분, 50%는 수도권에 집중돼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에 거의 50%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GRDP도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더 심각합니다.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밀집해서 경쟁하고 있고요 500대 기업만 봐도 본사의 대부분들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70%가 넘고. 국가 R&D,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R&D 예산만 보더라도 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포함해서 자산의 격차도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배 좀 넘었던 것들이 지금은 2.6배,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고 대중교통만 하더라도 물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망이 잘돼 있어서 분담할 수 있는 교통 분담률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수도권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일단 불편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매 정부마다 추진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1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지방에 이렇게 자주 다녀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구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고.

정책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좋은 의도로 많은 정책을 편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가 있고 많은 큰 기업이 있고 그리고 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 젊은이들도 머무는 건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고 정주여건까지 가는 전체적인 생태계 구성의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새로운 부분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미래를 걸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될 일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계획하는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총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한번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대표적으로 5+2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했고 그 중심에 30대 선도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쭉 보면 하나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게 제대로 혁신도시가 형성이 돼 있느냐라

고 일반 국민들한테 여쭙보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령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말 유령도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돼 있고.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했던 이것은 거의 SOC 사업,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원 사업들을 대거 발탁해서 선정해서 그걸 지원해 줬던 그런 결과, 결국은 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누가 종합적으로 그려 준 게 아니고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총리님 말씀대로 정책 효과가 쉽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좀 속된 말로 물뿔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정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를 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 목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기능을 하나 떼다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을 떼서 지방에 내려 보낸다 이것도 굉장한 효과는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6만 명 이상이 지역에 내려갔다고 하니까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효과를 보려고 하면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다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권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생활권을 만들어 주어야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강제로 저희가 이주시키고 내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교 기준은 자기가 생활에 이익이 됐을 때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될 때 내려가려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수도권에 살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아니면 수도권에서 기업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얻는다 아니면 적어도 뽕뽕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 부처가 다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아니면 산자부의 균형정책이 거기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광역교통망, 교통망은 국토부, 교육인프라는 교육부 그다음에 의료는 복지부, 모든 중앙부처가 모두 달려들어서 다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엄마 혼자 키울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서 매달려도 잘 키울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분절적으로,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부처별로 각각 따로 따로 이루어지고 그게 종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하나 요구하는 것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 그게 마치 균형발전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지방에 가 보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수도권순환도로는 지금…… 예산처차관님, 한 3순환도로까지 돼 있나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광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철 위원 아니요, 수도권에.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수도권 지금 제2외곽순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자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일부 구간은 민자고 일부는 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부분이 재정이지요? 수도권은 대부분 재정입니다. 광주만 해도 순환도로가 하나 있는데 상당 부분이 민자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수도권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국비가 투자가 되는데 지방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돈이.

또 하나, 비근한 예로 광주공항 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공항 이전하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의 기본 취지는 ‘내 땅 가져가려면 네가 똑같은 걸 다른 데 지어 줘’ 이런 거거든요. 지방에 돈도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지어 줍니까?

반면에 수도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가로만 보면 거의 100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국유지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국유지고 그 공원 다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매년 한 몇백억씩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왜 서울에는 그것을 해 주는데 지방에는 훨씬 적은 돈, 10조도 안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지방에서 보태서 해라. 서울은 그냥…… 서울시에서 돈 일부 부담하나요? 미군기지 이전하는데 서울시가 부담했나요?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지방에 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있어도 돈이 안 오고 편의시설은 너희 돈으로 만들라고 한다면 누구도,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통합시가 돼서, 광주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이 됐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행정통합이 진짜 통합이 되려면 생활권 통합이 돼야 되겠지요? 그 생활권 통합이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뭘까요, 총리님?

교통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인프라고, 그것은 생활권 통합뿐만 아니고 기업 지원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면서 광주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고, 구축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800조가 투자되면 실제로 거기에 생활권이 통합되지 않으면 기업이 제대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물류 공간을,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것 보면 국토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광위권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아니, 지방에서 뭘 할 건지 나와 봐. 그것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주요 대광위 교통망계획, 광역권 교통망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생활권, 우리 지금 5국 3특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 내 6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대광위가 좀 나서서 종합적으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같이 만들어야 60분 생활권 구축이 완벽하게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문제 말씀하실 때도 교통이 같이 설계돼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지금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기업들 요구도 빠른 이동과 수송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은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조인철 위원 그다음, 총리실에서 지금 광주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에서 대광위랑 협의 잘 해가지고 광역교통망 계획을 충실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그 지원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자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주 열어서 실제적인 광역교통망이나 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냥 두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조인철 위원님이 좀 전에 지방 얘기 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직도 법적 기구가 아니거든요. 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할 거고 지방을 살리는 거를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게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서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김교홍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 국가가 벼랑 끝에 선 청년들에게 과연 좋은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총리실에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설치됐지요. 작년 12월 달에 됐나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김교홍 위원 그 결과 각 부처에서 9개 분야를 하나씩 발표를 하고, 보니까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부처가 시작이 돼서 그런지 경기가 한때 증시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많은 숫자가 지금 줄고 있어요. 자살자가 전년 대비 올해 보면 733명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우리 자살률이 1위고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자를 보면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암보다도 더 높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이게 보건의료 쪽,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뤘는데제가 보기에 이제는 복지의 영역까지 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의 울타리를

털어내야 자살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하루 자살자가 약간 줄어서 38명, 전에는 40명이었는데 이게 하루에 한 교실이 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요 자살을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5년도 결산을 보면 312억 원, 교통사고를 주로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은 1조가 넘고 산업재해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조가 넘습니다. 이거를 국민 1인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자살은 한 608원 그리고 교통사고는 2만 6000원이 좀 넘고 산재는 6만 5000원이 넘습니다.

자살에 대한 기금과 예산이 너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저 공단의 예산만 자살 관련 대책 예산이 아니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공단이나 산재 쪽도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을 한다든가 자동차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있는데 자살은 순수한 국가재정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가 뭐냐 하면 2003년도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때 2419억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 자살이 완전 반비례하는데 90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3500명가량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549명으로 81%가 줄었어요. 같은 기간에 자살 사망자는 3250명이었다가 지금은 1만 4000명 가까이,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예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좀 더 증액한 건 있는데 대개가 자살이 되고 나서, 실행이 되고 나서 사후에 예산 지원해요. 자살예방센터 인력 조금 늘린 것, 유가족 원스톱 지원한 것,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좀 늘린 것, 대개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9개 부처가 종합대책을 낸 중요한 이유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한 기관에서만 담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또 이유도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유 중에 사실 말씀 주신 보건과 복지 부분이지만 더 중요하게 이번 감소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부분을 좀 많이 해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면서 빚과 관련된 부분의 이윤을 좀 낮춘다거나 부채를 탕감한다거나 이런 대책들도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금융위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할 건데,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들었잖아요? 대책강화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10만 명당 25.7명, 이게 한 9년 뒤에 16.5명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한 의무와 국가 매칭사업이라는 게 잘 맞아떨어진 거고, 뒤에 행안부 할 때도 제가 질

의를 하겠지만 지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리실에서, 법대책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총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자살예방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예요. 이게 국가 정부예산만 계속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그런 수익모델의 기금이 있었고 산재도 마찬가지로인데 자살도 기금을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에서 127명의 의원들이 자살예방기금 설치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안 오시고 차관님이 오셨는데, 어찌 됐든 이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국가 출연금과 복권수익금, 주세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왜, 어떤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기금 신설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원의 규모나 설치의 타당성 그다음에 어떻게 조달할 건지 여러 가지……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것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을 복권에서 약간 떼다든가 주세에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해야…… 그렇다고 자살예방기금을 수익모델로 잡아서 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리께서 강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 해결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특별하게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말씀 잘 듣고 살피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오늘 정은경 장관님이 아마 회의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현 차관한테 제가 여쭙볼게요.

자립준비청년이 있지요, 자립준비청년? 보육원,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여기서 열여덟살이 되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에서 25년까지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한 74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자립수당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렇지요? 18세 홀로서기가 되면 지원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저기 나오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서울은 2000만 원, 인천이나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원,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방 위임사항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지방의 재정 현황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1000만 원 이상 주라고 권고만 했고.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이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것을 지방에 넘겨 버리면 지방은 자기들 재정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김교흥 위원** 이것 국가 책무로 다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김교흥 위원** 강화가…… 결국은 이것을 지방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방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방 인구 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지방으로 자꾸만 넘긴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청년들이요 22년도에 보면 광주에서 일주일 사이에 2명이 사망을 하고 2022년도에 7명이 자살 추정으로 사망을 했어요. 매년 2~7명, 8명 이렇게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나도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한 47% 된다고요. 그중에 여성 청년은 56% 정도 돼요.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우울증, 정신적 문제도 높게 나오지만 경제적 문제가 아주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지부가 주무부처니까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이 대개 보면 보호기간이 평균 12년 정도 된다 그래요, 12년. 그런데 이런 긴 시간 동안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종료 시점 불과 2~3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에 종료가 되면 통장 줘서,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주고 자립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른이 됐으니까 너 이 돈 가지고 생활해 봐라 이런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이것을 따져서 지금은 15세부터 시작을 하지만 13세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애주기별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진로, 주거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18세에 딱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22년에 법이 바뀌어서 원하면 25세까지 종료가……

○**김교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점점 늦춰져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언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 분야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희망디딤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멘토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게 개인 영역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직이나 종교계, 전현직 공무원 또 선배 자립청년까지 다 멘토의 풀을 넓혀 가지고 청년이 자기 멘토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해야 돼요, 복지부에서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래서 보호 종료, 끝나서 독립할 때 예비자립준비청년 단계부터 멘토와 연결을 미리 시켜 주는 것. 그래야 이들이 본인이 사회에, 그 험한 세상에 나갈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겠는가. 이것 하시겠어요? 어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지금 저희가 바람개비서포터즈라고 해서 선배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전담요원 그렇게 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교흥 위원 그런데 전담요원도 마찬가지로인데 한 전담요원이 30~4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상담을 한다고. 그래 갖고 되겠어요? 그거 반으로 줄여 줘야지. 그런 인원을 늘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게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소명을 정말. 부처별로 형식적으로 정책만 발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애정과 소명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교육부차관님 나오셨나요? 장관님은 안 오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차관 대참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교육부도 마찬가지로예요. 이게 10대들의 사망 원인도 자살이 1위인데 19세 이하 자살자가 2016년도에 213명에서 작년에 396명으로 45%가 10년 사이에 증가했어요.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자살한 청소년을 보니까 학교에서 관심군으로 관리하는 학생은 10~20%에 불과하고 80~90%의 자살 청소년은 정상으로 분류가 됐던 학생들이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학교에서 건강 상담을 할 때 정신건강 상담을 제대로 했는가? 그냥 단순히 문항만 해 갖고 했는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문진을 통해서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형식적인 문항 조사할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체력적인 건강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때 정신·마음 테스트를 하라고. 이것해야 돼요. 그리고 그 테스트 할 때는 전문의가 옆에서 문진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지금 모든 학생들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모든 학생이 3년마다 하는데요 거기서 많이 못 걸러 내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교흥 위원 전혀 못 걸러 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건강검진은 전체 학생이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위탁으로 됐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건강에 관해서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상담하는 Wee클래스라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게 9407개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입원 등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병원형 Wee센터가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것은 전국의 7개 시도에 센터가 17개밖에 안 돼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교흥 위원** 이것은 총리님이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형 Wee센터를, 사실은 이게 수가도 안 맞고, 청소년들 정신의 그런 수가도 안 맞고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17개밖에 안 되니까.

결국 그곳에 수용 못 하는 아이들은 다 자기 방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가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전국에 54만 명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정신병동을 늘려 줘야 된다.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지역의 교육청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자살 부분에서도 청소년 부분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진단하려면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의 전문 시설들도 필요하고 전문의들도 필요하고 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의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주신 말씀들 잘 새겨서 살펴보고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저희 지역에 이런 청소년 정신병동이 있는데 되게 열악해요.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센터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치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이 나오셨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김교흥 위원** 지금 군인도 10년간 보면 연평균 육군은 43.6건, 공군 9건, 해군 7건, 해병대 2.4건 자살이 발생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보면 병사가 조기에 전역을 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교흥 위원** 그게 5년 동안 2만 5000명, 매년 5000명으로 볼 수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교흥 위원** 이것을 군에서, 지금 국방부에 자살예방담당관은 3명밖에 없어요. 맞지요, 3명 국방부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대별로 담당자도 있고 병영생활상담관들도 있고 다수 인원들을 보직을 해서 다양한 계층별로 하는 지원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대대나 이런…… 대대급에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병영생활상담관이 최소한 여단급에 1명 정도씩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여단급? 진짜 여단급에 1명씩 있어요, 자살상담관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자살이나 부적응 등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지금 5000명, 매년 5000명 병사가 조기 전역하면 이게 기초지자체, 그 병사가 사는 지자체에 연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역하는 사람들이, 국방부가 직접 연결을 시켜 주지는 않는 데……

○**김교흥 위원**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조기 전역자의 80% 이상이 정신과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자체에 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 행안부차관도 나오셨지만 이게 행안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것도 연결해 줘야 돼요. 자료를 연결해 줘야 각 지자체에서 케어하고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5000명이 조기 전역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행안부, 재경부, 모든 분야에서 이걸 다 같이 하는데 총리께서 이걸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른의 역할을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이 사회가 함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들이 느낄 수 있게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총리 되고 했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과 유형 분석 그리고 대책까지를 내서 지속적으로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단양의 국민의힘의 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영 위원** 국무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반도의 중심, 철도와 문화관광의 도시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임태영입니다.

총리님, 단양팔경 와 보셨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임태영 위원** 가 보셨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아주 어렸을 때 가 봤습니다.

○**엄태영 위원** 최근에 더 좋아졌습니다. 꼭 한번 또 오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저는 예비비·특활비를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려서 주요 장관들도 안 나오시고 또 특히 청와대비서실장도 안 오시고, 제가 강훈식 실장 꼭 보고 싶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참 아쉽습니다.

대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엄태영 위원** 반갑습니다.

하 수석님은 강훈식 실장님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청와대에 근무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작년 6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대통령 취임부터 바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당 시절에는 예비비 예산 삭감과 내역 공개를 주장들 하시더니 여당이 되자 공개를 거부하는 내로남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님,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효능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바로 투명성, 명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항상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은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 가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이전 예비비 162억 원의 세부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은 거부했습니다. 자료 거부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유상범 수석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촉구하고 또 유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와대 이전은 잠시 돌이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저도 마뜩지 않았습다. 그런데 당선인의 의지로 인해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저희 당 윤한홍 의원이 맡았었지요. 그래서 이전이 되고 인수위가 끝나고 취임 이후에 관저 공사나 뭐니 그게 이루어졌는데, 윤한홍 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권창영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다마는 이건 답정너 기소도 아니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꼭 다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더 잘 알다 보니까 매우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차기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옮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예상대로 청와대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이전 예비비 162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본예산 65억 9400만 원과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명목의 161억 5800만 원을 배정받아 총 227억 5200만 원 중에 22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 지난해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셨는데 세부집행내역과 집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이게 제가 청와대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그러신 줄 알지만 오늘 국회 결산심사에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사전에 질문 요지도 드렸는데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하여튼 결산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일반수용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 총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셨을 때 어떤 공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수용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청와대 이전 등 운영비로 36억 2100만 원, 설계·공사·감리비 등으로 177억 5200만 원, 각종 자산취득비로 9억 5000만 원 등 대략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안보 관련 사항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보안관리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보안관리 부분은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전혀 아무 내용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식으로 직접 자료 요청해 봤는데 예비비 실제 집행내역은 답변 자료가 정말 더 기가 찹니다. 결산 사업 설명자료보다도 못한 내용으로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수석님, 단기간에 대규모 공사를 추진한 만큼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공사는 규정대로 적절히 추진됐는지 등등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도 똑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특히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계약일과 실제 지급된 금액, 사업 완료 여부, 모든 게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수석님,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국민 혈세로 구성된 예비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사용 내역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라고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다고 전혀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총액만 제출합니까?

하여튼 백번 양보해도 내부 설계도면이니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물론 제척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되게 집행은 청와대에서 하니까 그냥

국민들은 그런 줄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보면 ‘정부는 예비비에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 배정받은 예비비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내역 전체를 공개 거부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수석께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과 상의해서 결산 의결 전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저희 당의 제가 담당이라서 요청을 합니다.

다음, 하준경 수석님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야당 시절에는 정치 공세라고 하더니 여당 되자 모르쇠로 돌변한 특수활동비 공개의 문제입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야당 시절 특활비는 쌈짓돈,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결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갔는데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감액만 처리한 그런 적이 있었지요.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세부집행내역 공개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면서 특활비를 다시 살린 것도 모자라서 세부집행내역 공개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불과 2년 전에는 쓸데없는 쌈짓돈이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전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지난해 정권을 잡자마자 추정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4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에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석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임태영 위원**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개 자료 보면 언론계 여론 청취, 경제현안 청취, 사회·재계 주요인사 면담·의견청취, 위로·격려 지원 이런 것도 다 특수활동비의 지출 내역에 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안보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저희가 이 특수활동비를 좀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밀성이라는 것이 좀……

○**임태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비슷한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하여

튼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세부내역들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석님, 돌아가셔서 대통령비서실과 협의해서 역시 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임태영 위원** 이진수 차관님,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전면 거부하는 3대 특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도 국가예산 집행이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3대 특검의 예산편성액만 28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사용내역 제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 결산심사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게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국회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먼저 특별검사는 독립된 기구로서 법무부는 지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정부부처로서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에서 특활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와 정보 수집, 공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시다라는 지금 법원에서도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또 2023년 대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익명 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 이런 보호·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든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특별검사라고 하는 제도의 특수성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회에서의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심사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특별검사 측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꼭 전달해 주시고요. 역시 특활비 집행 세부내역을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구윤철 부총리님 안 나오셨지요?

하여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시중 통화량이 4200조, 4000조 초중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허장 2차관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2017~2021년 사이에 4년 만에 1100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중에 이처럼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 상황이 출렁거립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과금 뉴스만으로도 동탄의 집값이 폭등

할 정도로 시장은 아주 민감합니다.

차관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만큼 정부 경제정책도 신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임태영 위원 이미 시중 과잉 유동성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작 이재명 정부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가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경기 진작 이유로 두 차례 추경 등 역대 최대로 빚을 늘렸습니다. 차관님, 이것 괜찮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구체적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임태영 위원 어차피 차관님이 더 실무자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계인식 좀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임태영 위원 과잉 유동성에 주식 빚투 전성시대로 가면서 가게 빚이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기라는 이분법적 인식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반드시……

○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은 나쁜 투기고 주식은 착한 투자라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산성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아무튼요, 정부를 이긴다는…… 규제에 집중한 진보정권 때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총리께서는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부동산정책도 시장을 옥죄거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대통령께 자주 건의하고 말씀 올립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관련된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총리께서 너무 착하셔서 가지고 지시만 잘 받들지…… 적극 건의하는 그런 건강한 총리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제가 목소리가 차분하긴 하지만 착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임태영 위원 대통령 말씀에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실 총리가 되셔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신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제가 하여튼 꼭 유념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임태영 위원 그리고 용산 정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참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고.

용산 어린이정원에 지금 방문객이 연간 30만을 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실 자료에 의해서 지금 보도가 난 오늘 자 신문 보면 그렇습니다.

이곳을 청년주택 만든다?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해서 만들면 충분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청년주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상.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 오르고 망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는 인천 동구미추홀구의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안녕하세요. 허종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인데 질의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얼굴 표정이 다 좋아 보여요. 저도 그래서 좋은 것 좀 보여 드리려고 그러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앞바다에 제일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기는 백령도 콩돌해안이라는 곳인데요, 콩만한 돌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라 해서 콩돌해안입니다. 백령도는 콩돌해안 말고도 비행장으로 쓸 수 있는 사곶해변, 그러니까 모래사장인데 모래가 굳는 강도가 있어서 6·25 때는 실제로 비행장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런 데도 있고요, 두무진 같은 명승지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청도 서풍반이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앞바다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식으로 다 구성돼 있잖아요. 저기는 대청도. 그러니까 백령도 바로 앞에 있는 대청도의 서풍반이라는 명승지입니다.

대청도 바로 앞에 소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기는 소청도 분바위인데요, 저 분바위가 하얗잖아요. 옛날에는 저게 등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잡이하러 갔던 배들이 저 분바위를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명승지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저렇게 보이는데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서해5도가 쓰레기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것은 백령도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백령도 해양 쓰레기는 태평양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쓰레기도 옵니다. 중국·북한·우리나라 쓰레기가 몽땅 저렇게 밀려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저렇게 모아 놓고 있습니다. 모아 놓고 있는데, 저렇게 모아 놓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섬은 전체가 168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40개는 유인도, 사람이 살고요 128개는 무인도입니다. 유인도는 사람이라도 사니까 저렇게 모읍니다.

국무총리님, 무인도는 사람이 안 사는데 저것 모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어렵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허종식 위원 그러면 서해의 저 아름다운 섬들이 저렇게 쓰레기로 쌓여 가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생각에?

○국무총리 한성숙 부족함이 있구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저기는, 서해5도는 노령층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에 10억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 쓰레기 치우라고. 수거하는 데도 15억 정도 듭니다, 수거하는 데만.

그런데 저것을 수거만 하느냐? 운반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는 저걸 수거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수거장비를 움직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해에는. 백령도 정도나 돼야 그래도 사람이 좀 있지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또 인천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운반선도 필요한데 이것도 없습니다.

서해는 저렇게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저런 스티로폼을 인천으로 가져오는 데 톤당 50만 원 듭니다. 인구 2만 명도 살지 않는 웅진군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저것 어떻게 할까요? 총리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산 배정하고 필요하면 수거할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정부가 10억 지원해 줬습니다. 10억 가지고 저거 될까요, 안 될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부족해 보입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장정민 웅진군수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웅진군 예산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다, ‘쌓아 놓은 것만 인천으로 운반하는 데도 50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 쓰레기를 모아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인천에 와서 처리하는 데 연간 최소 50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웅진군은 노령층이 많아서 어렵다, 어르신들 갖고는. 장비도 움직이기 어렵고. 그러니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총리님, 기획예산처차관님……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차관 나와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다음에 기후환경부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해양쓰레기는 해수부 담당입니다.

해수부장관입니다.

○허종식 위원 해수부인데도 해수부하고 기후환경부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차근차근 부르려고 그래요, 환경부, 해수부. 이것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인천 앞바다의 168개라는 섬이 지금 다 이런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저 쓰레기 치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저게 치우면 또 지속·반복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요 똑같이 쌓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관련 부처들 한번 모아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고 그리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가지고 상의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꼭 좀 웅진군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셔서 가지고 정부하고 인천시와 웅진군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저 아름다운 섬에 들어가면 동네 한가운데는 다 쓰레기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주시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섬들이 저런 상황일 텐데 한번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또 예산 범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방안도 봐야 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우리나라에 저런 섬이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서해 무인도는 손도 대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무인도는 쓰레기가 더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인천시 균형발전정부부시장 때 인천 행정선을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와 인천시와 웅진군이 공동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서해5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유실지뢰가 발견돼서, 저것은 올해 지뢰가, 장마철 되면 꼭 지뢰가 떠내려옵니다, 인천 앞바다는.

보니까 올해만 강화도, 교동도, 주문도, 불음도 등에서 14건에 16개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되면 저렇게 딱 막아 버립니다. 출입 통제하면……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 한철 먹고사는 거잖아요, 해수욕장도 있고 또 펜션도 빌려줘야 되고. 딱 막은 다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포상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숙박도 줄취소되고 또 생합 같은 걸 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혹시 어디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허종식 위원 저것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저도 통제하고 유실지뢰 찾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 막아야 되는 건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우선 국방부에서는 우리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여름철, 장마철에 북이나 우리의 지뢰들이 유실되는 일이 있는데 주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고 동시에 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부분들도 지혜를 잘 발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서해5도에 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입니다. 병원도 없지

요. 아파서 병원에 올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헬기도 띄우고 하는데 그것 시간 못 맞춰 가지고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든 걸 피해 보고 있는데……

피해가 또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서해 최전방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올해 폭염 때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발전기 과열인데 왜 그러냐? 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입니다. 해병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 군부대 전체가 다운됩니다, 전력이.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허종식 위원 그런데 백령도에 발전소를 증설하려고 했더니, 환경부 잘 보세요.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서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심각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줄도 모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서 1년 6개월 정도가 더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여름, 그다음 여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해5도는 기본적으로 갔다 왔다 하기도 힘들지만 쓰레기든 뭐든 기본 생필품도 다 어려운데 지뢰에 전력도 없고, 정말 관심 가져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해5도 섬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섬에 살아 준 것만 가지고도 애국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올해나 작년, 올해 사이에 서해 쪽의 섬 방문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해양수산부 한 분만 갔다 오셨네.

한 번쯤 갔다 오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고요. 이런 것들 조금씩만 저희들이 신경 써 주면……

사는 데 불편을 안 겪어야 되잖아요. 총리님, 안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서해5도위원회 위원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관련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챙겨 볼 것들과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서해5도, 백령도 나왔으니까 국가유공자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어디 가서 차를 대면 감면하는데요, 1~5급은 전액 감면을 하고요 6·7급은 50%만 감면합니다. 저것 감면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기본 문제잖아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라 하는데 특별하게 50%를 감면하잖아요.

총리님 좀 해 줄 수 있지요, 저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것도 예우 안 하면서 특별한 예우라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현수엽 차관님, 그 밑의 보건소득평가 산정 제외하는 게 43만 원이었는데요. 2026년까지

지 57만 원으로 소득이 올랐는데도 노상 43만 원만 해 줍니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57만 원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쉬운 것만 두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차가 등록됐을 때 상이등급 받으신 분 50%는 내고 50%는 받고, 소득으로 수당 43만 원, 저것도 제가 2022년에 열심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외를 했는데 57만 원 올랐으면 57만 원을 제외하는 게 맞지요, 현수엽 차관님. 그렇지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한 번 43만 원으로 정해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아마 100년 뒤에도 43만 원으로 해 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엽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검토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 주시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안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훈이니까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인데요, 전국의 보훈병원 6개 중에 인천보훈병원만 응급실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하려고 봤더니 너무 적어요. 130병상밖에 안 됩니다.

병원도 아니고 개인병원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까…… 누적 적자, 의료진이 없다고 이제 응급실도 안 해요. 그러면 뭐 하러 만들었어요, 보훈병원?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보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천보훈병원 응급의료실이 없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알아보니 실제로 한 달에 응급의료실에 오는 환자 수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보훈환자들도 돌봐야 되지만 재산성이 너무나 나쁘게……

○허종식 위원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병원급도 아니고 개인병원도 아니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기본적으로 인천보훈병원은 병상이 적고 보훈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많이 못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종식 위원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면, 인천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보훈병원 못 할 것 같으면 보훈요양병원으로 하시든가 보훈요양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보훈요양원 이렇게 체계를 다 갖추서 제대로 하시든가. 뭔가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누적 적자가 많으니까 병원 줄이고 그다음에 의료진, 의사 안 쓰고 이러면 더 나빠지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하여튼 꼭 좀…… 왜냐하면 앞으로는, 보훈대상자의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흔히 말해서 납골당을 인천가족공원에 5000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보훈대상자 누구나 돌아가시면 올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서.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우리가 특별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보훈병원, 앞으로는 보훈요양병원 그다음에 보훈요양원 여기서 돌아가시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원스톱 체계를 갖추는 게 맞다.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다음에 국토부 김이탁 차관님, 오랫동안 국토부에 근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저도 오래 봤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산공원의 녹지에다가 아파트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녹지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녹지에는 짓지 않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면 용산공원 녹지에다 짓는다고 그렇게 난리 치면 녹지에 안 짓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녹지 아닌 데 짓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서울의 허파인 녹지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저 난리 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녹지에는 짓지 않잖아요. 그거 세계 좀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저걸 보시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66%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늘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가구 수가 절대적으로 느니까 당연히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주택 보급률이 떨어졌습니다.

○허종식 위원 훨씬 떨어지지요. 저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1.5~2배 정도의 집을 지었어야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런데 실제 공급량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배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갈 수밖에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보세요, 수도권 주택 4채 중 1채가 30년 이상입니다. 요새 젊은 분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산다고 할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새 아파트나 새 주택을 원합니다.

○허종식 위원 저게 전체가 25.2%입니다. 서울은 29%, 인천 31%인데, 그러니까 25%는 안 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그러면 기존 집의 25% 빼고 아까 전체 가구 수 늘어난 거 1.5배 빼면 당연히, 집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펴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주택의 멸실률까지 고려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일본 도쿄 보시면 도쿄는 저걸 계산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3만

가구, 15만 가구를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그리고 도쿄는 도심도 고밀화시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우리는 2종 주거지역은 250% 이상 용적률은 절대 안 된다, 3종 300% 이상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만 정해 놔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 부족으로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재개발·재건축도 풀 건 풀어 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좀. 절끔절끔은 하나 마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저희가 이번에 8·13 방안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그러니까 특히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 정도 갖고는 턱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제는 과감해야 합니다. 저렇게 집이 부족하잖아요. 서울에 집이 현재 2배나 부족해요. 2배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는데 상대 공격에 맨날 당해. ‘재개발·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빨리 하게 해 주는 게 맞지요.

용산의 녹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 이게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런데 왜 녹지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가만히 있으세요? ‘녹지에는 안 짓습니다’ 그러면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용산공원은 지금 미군 반환 부지입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원도심 특별법을 우리 국회의원 마흔일곱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기존에 있는 용적률에 묶이지 말고 고밀을 하더라도…… 기존의 원도심을 재개발·재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원도심은 개발할 것도 많지만 보전할 것도 많지요. 보전할 곳은 보전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개발할 곳은 빨리하게 해 주되 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니 200% 정도를 더 주자, 대신에 여기에 200%까지 상한선만 정해 주고 나머지 얼마 줄 건지는 지방자치한테 한번 맡겨 보자.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현실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좀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밀리지 말고.

저희 같은 사람들 20년 동안 봤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주택은, 주택시장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허종식 위원 공급을 전제하지 않는 어떠한 대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공급이 전제가 돼야 대출도 먹히고 규제도 먹히지요. 집이 없는데 무슨 규제가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허종식 위원 정부가 좀……

총리님, 과감하게 좀 하세요, 과감하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허종식 위원 아니, 방침은 필요없다니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속도 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과감하게 내자.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제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땅이 없으면 땅을 빨리빨리 마련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런데 정부 측에서 더 하실 말씀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도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토지에는 고밀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토지 개발, 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은 복합 개발, 복합적으로 집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국회에서 이게 여러 차례 논쟁적인 지점이었는데 주택은 108%가 공급이 됐는데 왜 53%밖에 자가주택이 안 되냐,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좀 전에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점하고 노후 주택률이 30년이 넘는 게 많다는 점, 서울시가 오히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원도심 특별법까지 해서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 기존 생각을 벗어나는 과감한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허종식 위원님은 인천시 부시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비교적 현실에 좀 밝으니까,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결단과 실적이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으로는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비례대표인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국회의원입니다.

이두희 차관님, 제가 국방위에 있다가 복지위로 옮기고 그러나 예결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 관련입니다.

일단 차관님에게 우리 군의 무기 획득의 전 과정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엄정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방위사업법 제15조에 각군이 제기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기 소요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행연구를 통해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과 비용 대비 군사적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소요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같은 법의 13조에 따라서 국방부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방추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데 차관님, 방위사업법에 따른 이 법률적 절차 아래 결정된 군사적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당국에 의해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소요는 만약에 수정하려면 다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다시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300억이 순증 의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백선희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라고 하는 이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 추가 확보 300억이라고 명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대 분량입니다.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중급유기 사업이 방추위 의결을 거쳐서 이미 그 소요 확정이 2대로 확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이 군사적 확정 소요로 결정된 것을 임의로 1대로 축소 발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 확정되더라도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백선희 위원 총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타당성……

○백선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비용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 당국이 어떤 수요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지 아니면 기재부 보도자료이든지 간에 방위사업법에 따라 결정된 수요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저도 본회의에 있었고 찬성표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요 이 부분이 2대에서 1대로 변경됐다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1대 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시에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진영승 합참의장과 공식적으로 이 소요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법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2에서 1대 분량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희 차관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급유기 이미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전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백선희 위원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공중급유기가 뭔가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하늘의 주유소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아마 미국의 대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사실은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이 교민과 관광객 철수를 도운 것이 바로 사막의 빛 작전에 동원된 공중급유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현재 공군이 보유한 공중급유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230대가 있고 그리고 KF-21이 실전 배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F-35A가 추가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투기 수가 370대가 됩니다. 이것은 공중급유기 1대당 전투기 몇 대이냐를 보면 90대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미국은 1 대 9에 불과하고요. 영국은 1 대 17 그리고 싱가포르도 1 대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대만으로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공중급유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증가하는 게 2대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대에서 6대 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 2대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대가 아니라 1대 분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것을 홀수가 아닌 2대를 기본 단위로 해서 짝수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1대만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공중급유기를 꼭 짝수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게 1대씩 도입하면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대수를 늘리지 않고 공중체공시간을 증가시키려면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비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 2대

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에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금 방위사업법상 군사적 소요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 맞으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지만 그 절차 이후에 얼마만큼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또 보도록 돼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방적으로 2대에서 1대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리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겠지요.

○**백선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방위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처가 현재 법에 근거해서 타 부처 국방부의 법적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방위사업청이 2대로 확정된 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최초 총사업비 협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대 말고 1대 분에 대해서도 협의요구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23년에 KIDA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는 이미 했었고 그리고 2023년에 조사해서 이 부분은 전력화 시급성을 인정받아서 2대 분의 사업화가 추진됐었던 것입니다. 2년이 조금 넘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분석 대상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정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장관님,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비용분석 최종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있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사업은 원래 14년부터 10년에 걸쳐서 1차 사업 4대를 도입했고 그때는 1대당 3000억에서 4000억 들었습니다. 총 1조 3000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2차 사업으로 말씀하신 2대가 1조 2000억 정도 든, 그러니까 1대에 6000억이 든 것으로……

○**백선희 위원** 비용이 조금 증가해서 비용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하지요. 저희가 그 절차를 안 하면 법적…… 그 부분을 해태하는 것이지요.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1대 추가로 국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착수비가 300억이 반영됐던 것인데……

○백선희 위원 장관님, 이게 비용분석은 증가할 수도 있고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백선희 위원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분석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해야 되고요.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해야 됩니다.

○백선희 위원 이 부분의 비용분석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분석을 하는 것이지 소요량에 대해서, 2대 분에서 1대 분으로 줄이는 소요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을 다시 국방부에 넘어서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순서대로 다시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거치지는 않았습시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리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분석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전과 다르게 지금은 1대당 6000억에서 1조 1000억까지 2배가량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대 구입할 비용이 지금 다 돼 있다는 거지요.

○백선희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서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국가재정 안에서 방위력을 보는 것이지 재정 상황을 보지 않고 하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님하고 그리고 합참의장하고 상의를 하셨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요 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쭙봤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TMMR 무전기 2차 사업도 그렇고 K1E2전차 성능개량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다 묶여 있어 가지고 다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9월 초까지 올해 예산 30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을 지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급유기 사업을 올해 진행하도록 했으나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기와 관련된 것은 조금 다른 정책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도 법과 절차에 따른 규정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차관님한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이 사실은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차관님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가 2대에서 1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

다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공중급유기 소요를 2대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 확정된 것을 소요를 다시 1대로 변경하려면 예산 당국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이 합참 심의 그리고 방추위 의결 과정, 이런 소요를 수정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변경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 부분은 사업 추진을 할 때 재정 여건과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만약에 두 대분에서 한 대분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재정 당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 방위사업법에 근거해서 합참 심의, 방추위 의결 과정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아직 저희가 소요 수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나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요를 바꾸려면 절차를 밟아야……

○백선희 위원 만약에 소요를 바꾸게 되면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소요를 재결정하는, 그러니까 소요를 수정하는 이 절차 없이 예산이 바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방부차관님에게 여쭙겠는데 이 소요 수정을 두대에서 한 대분으로 소요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직 소요 수정을 검토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전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소요를 다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중급유기 도입을 사실은 그 수요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국가 안보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 대만이라도 도입하자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백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공중급유기가 올해 도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가능한 전력이 조기에 도입되는 것이 국방에 도움이 됩니다.

○백선희 위원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두 대라고 하는 것도 최소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백선희 위원 차관님께서 이 두 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전력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두 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국방부에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이 부분이 재정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소요 추

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니요, 제가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드렸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예산 당국에서 그 재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방위와, 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언제 두 대에서 한 대로 변경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백선희 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 한 대분을 작년 국회에서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전부인데 한 대분을 착수비 300억을 국회에서 배정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해 보니, 그 절차에 따라서 해 보니까, 비용분석 연구를 해 보니까 한 대당 두 배가량 뛰었더라.

○백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면 당연히 이 지침에 의거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책무입니다. 공무원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백선희 위원 그 비용분석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처에서, 재정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이 부분이 돈을 갖고, 우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두 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차관님께서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방부가 두 대분을 한 대분으로 줄일 수 있다, 소요 변경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정과 다른 특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중급유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보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전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그렇게 쉽게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그리고 국방부와 이 부분은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 만큼 쉽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총리께서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국방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국가의 안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정책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업 재추진 여부는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게 한 8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국방부 또 공군 그리고 방사청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곧 발표할 텐데 자칫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요. 저희는 핵잠수함 포함해서 또 KF-21을 포함하여……

○**백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안은 저도 봤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느 때보다도 내년도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분석을 해서 7월 달에 최종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비용분석은 확정된 소요에 대한 비용분석을 하는 것이지 확정된 소요를 변경하는, 확정된 소요가 두 부분인데 이거를 한 부분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 당국에서는 예산 당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예산 당국의 의견도 중요하기는 합니까마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절차상의 미비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요를 수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소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합참의장님하고 방추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을, 공중급유기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인지를 국방부에서는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작전적 소요에 따라서 소요 제기된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국민께 더 설명을 하는 노력을 잘 하고 필요한 전력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국민의힘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과 이틀 연속 자리를 지키고 계신 총리님, 국무위원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먹거리가 많아서 살기 좋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윤용근입니다.

먼저 수년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방제에 힘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그동안의 방제 정책이 실제 확산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법률가인 제가 뜬금없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들고 나와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한 명 정도는 죽어가는 국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나섰습니다.

참고로 저는 산림 전문가도 아니고 산을 가까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성숙 국무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의 산림이 붉게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아직은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미령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는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관련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보고받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관심이 없고 총리도 관심이 없고 장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지난 사오 년 동안 계속 붉게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마 직접 보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창 밖으로 보이는 먼 산을 한번 바라만 보시면 피해 상황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년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본수는 약 37만 8000본이었습니다.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은 66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6년에는 피해가 177만 3000본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제 예산은 25년에 134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은 2배 넘게 투입했는데 피해는 오히려 4.7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년도부터 26년까지 예산은 32배 늘었는데 피해는 129배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방제망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산림이 무더기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장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예결위가 국가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국무회의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소나무재선충병 상황 총리님께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총리님께 아직 일일이 다 보고할 기회는 없었지만 산림청이 챙기고 있는 업무고 또 지방정부가 같이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장관님은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윤용근 위원** 장관님, 23년 말에 취임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23년 12월 29일에 취임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현재 최장수 장관이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그러면 23년 말 취임 당시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106만 본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 현재는 177만 본을 넘어셨습니다.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 충남 지역의 소나무 피해는 무려 88배나 증가했습니다.

매년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서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지시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챙겨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이게 방제에 적합한 약품이 없는 데다가……

○**윤용근 위원** 챙겨 보라고만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윤용근 위원** 장관님, 지금 피해 상황을 지난 3년간 장관직에 있으면서 산을 바라볼 때마다 피해 상황이 늘어가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그런데도 그냥 챙기라고만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방법을 모색해야 하니까요. 그거를 농식품부장관이……

○**윤용근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산림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직접 주재한 대책회의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직접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문제, 국토의 산림 문제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관심……

○**윤용근 위원** 총리도 관심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장관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분이 지난 4년간 그렇게 피해가 확산 되는데 한 번도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책회의를……

○**윤용근 위원**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면 장관 대책회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해야 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윤용근 위원**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거 아니지요, 위원님.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챙깁니다.

○**윤용근 위원** 박은식 산림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여기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은 투입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데 왜 방제전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제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정립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전략 부분에서는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예산은 32배 더 쓰고 피해는 129배가 늘어납니까?

국무총리님, 이것은 지금 심각한 재난 상황에 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림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총리님 주재로, 장관님도 관심이 없으니 장관님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장관이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들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련 사항들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계획안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산림청장이 추가로 답변드릴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근 위원**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누구도 관심이 없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먼저 입법부 일부 구성원의 무분별한 아무 말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법부에 상처를 드린 점,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명확합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습니까, 조희대 씨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게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여 주는 것이, 그것이 대답 못 할 일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께 존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행정부 수장을 호칭할 때는 이재명 씨가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가리켜서 조희대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사법부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처장님, 우리가 법원 재판에서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누구 누구로 이렇게 호칭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지금 법원에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 5건이 계류 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우리 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규정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정지 사유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거기 보면 제1항에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항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처장님, 이 조문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정지가 이 규정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형사소송법에는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에……

○**윤용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묻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윤용근 위원** 의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3항에 보면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이재명이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도대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왜 중단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법원행정처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재판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의해 따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로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민사소송은 재판장이 재판을 지휘합니다. 소송지휘권 행사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함부로 재판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27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처장님 이 조문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윤용근 위원**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윤용근 위원** 재판장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단 하나, 306조 규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헌법 27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처장님 이 조문도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받을 권리, 이것을 법원이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처장님 이 조문도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십니까? 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합리적 이

유가 있습니까?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윤용근 위원 민주주의의 핵심은 최고 권력자조차 법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법원은 더 이상의 차별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처장님, 소추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추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상태입니까,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기된 상태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다라면 국어책을 읽을 줄만 아는 사람이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람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306조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306조에 의해서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법원에서는 1년 예산을 2조 2782억 6700만 원을 지출합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용근 위원 이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쓰면서,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장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담당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도 그냥 봐둡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재판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될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재판을 지원하는 조직이지 그러한 일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현안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눠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 교과서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탄핵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것 타당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정신도 있지만 그동안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관행이 중요합니까, 헌법 규정과 법률이 중요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연히 헌법이 관행보다 우월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관행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고 민주당도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24일 김민석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법관들은 이 말을 새겨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즉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십시오.

대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법 앞에 세우는 헌법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헌법이 사법부의 권한을 인정한 그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나무 문제 관련해서 농림부장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 총리님, 저도 또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업무는 산림청에서 산림재해 관련해서 3대 재해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방제할 만한 약재나 수단들이 지금 확정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기후변화가 나날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역에서의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나중에 농림부장관님께서 윤용근 위원님 방에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충북 청주 청원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땅이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역으로 지방은 빈집이 남아서 문제고 땅은 남아돌고 역으로 부동산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이 수도권 일극체제, 과밀 집중화된 수도권에 언제까지 엄청난 예산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집을 짓고 산업시설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지속가능한 경쟁력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이 국가 대전환, 지역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사업이 성공해야만 저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감한 이런 지역성장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정말 획기적인 의지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의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려면 정부가 일회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3대 메가프로젝트는 5극 3특 정책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임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권역·거점별 성장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지역의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일자리와 연계하면서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봉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육, 의료, 문화 등 교통인프라까지 이 부분이 함께 패키지로 가야 지역의 경쟁력이 스스로 형성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두의 성장 또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패키지면서 종합적인, 그리고 정주여건을 포함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부처의 역량이 아니라 전 국가적 역량이 또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메가프로젝트의 추진과 5극 3특의 성공을 위해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메가특구 특별법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국가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된 부분들은 내부 정부안은 마련을, 지금 거의 다 완성하고 있고 상임위 정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아마 통합적인 조정과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국회에서도 빠르게 통과해 주시고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누구보다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감사합니다.

○**송재봉 위원** 또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3대 메가특구 중에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전국에서 보니까 이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AI 데이터센터가 투입되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그 외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지역에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상당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어느 정도 지역투자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한 결과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한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될 여러 산업들과,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제일 좋은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봉 위원** 예, 그래서 AI 데이터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데이터센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도 같이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로만 정책이 아니고 이번 메가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체 구조와 정주여건 그리고 생활시설 관련된 부분들, 아까 기획예산처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같은 여러 시설들과 관련된 전 부처의 종합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반도체의 효과로 상당히 기대도 있고 또 희망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상당히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반도체 연관 산업과 소부장의 자금률이 우리가 30%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주셔서 사실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여러 부처들이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시면, 혹시 산업부장관이 계시면……

○**송재봉 위원** 산업부장관님 혹시 계시면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첫째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서 반도체특별회계에서 소부장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단지를 지정해서 집적 효과를 노리게 하고 그 부분의 R&D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부분의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중에 한 파트가 대구·경북권에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단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저희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송재봉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소부장 클러스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국의 그런 집적화 되어 있는 지역은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장관님, 이게 우리가 100조 정도를 조성할 것이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미래전략산업에 투자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반도체산업 특수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효과가 국민 전체에게 퍼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민생 쪽이라든가 또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4개 계정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청년계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청년 외에 나머지 소외계층 또는 민생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두텁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가 더 보장하겠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회계를 통해서도 향후에 좀 더, 내년에도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성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분배정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청년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2025년에 한 28조 2000억까지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사업의 개수는 굉장히 많고 예산은 느는데 청년들은 왜 체감하지 못하는가라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시고 계속해서 체감도가 좀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잘 보이고 전달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했습니다마는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이것이 패키지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곳곳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미래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좀 봤더니 청년정책의 수혜가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 정규직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통계나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어저께도 지적을 주시고 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아직 다 읽어 보지는 못했고요. 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타당한 지적들이어서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추가설계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관련해서 조금만……

○**송재봉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획처장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 체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런 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내년도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 설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대통령 모시고 직접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국민들께 예산안보다 미리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미래연구원의 소위 정책의 청년에 대한 귀착효과에 있어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좀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또는 오히려 체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 우리가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출시했는데 상당히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고 신

청자도 정말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신청을 했고, 실제로 한 130, 150 이렇게…… 지금도 추가로 또 받고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말씀 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청년들의 체감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지표화해서,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작업들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이 되면 좀 더 체감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말씀 짧게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 234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139만 명이 최종 계좌를 개설했고요. 저희들이 추가 모집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 정책과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청년채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현재의 청년미래적금도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라는 보완할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자산 취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고민을 하면 취업과 근속까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갈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의 경우는,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고 우대형에서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역 청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정책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서 청년이 남고 지역에서 고용도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장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방 우대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있어도 지방의 청년들을 보다 우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새롭게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산 형성의 문제라든가 일자리 또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 청년들을 우대하는 부분들이 예산안에 담길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산 형성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저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이고 당연히 지역의 청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의 그런 청년정책 전반의 평가체계를 좀 더 다듬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주거와 관련해서 보면 월세 부담에 대한, 최근에 보면 다른, 사실 집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라든가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는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직접 자가를 취득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혼부부들조차도.

월세가 그런데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월 20만 원 정도로 이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답변 주실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청년들의 그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령 역세권에 좀 더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또는 더 저렴한 방향으로 지방에 있는 질 좋은 그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내년에 저희가 촘촘히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재봉 위원** 정말 청년이 기대하는 만큼의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에 일자리가 최근에 보면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의 첫 경험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자리를 갖게 하는 데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또 기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였지요, 지난 2025년 9월에 대통령이 참여한 청년 신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논의 자리가 있었는데 일자리 확대를 요청해서 6대 우리 대기업들이 약 4만 명의 채용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총리님, 혹시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또 2월에도 10개 주요 그룹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그중에서 66%인 3만 4200명을 신입으로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 민간의 채용공고 14만 4000건을 정리했는데 경력직만 채용하는 공고가 82%였고 신입, 경력을 병행 채용하는 게 15.4%,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가 2.6%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과감하게 신입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재봉 위원** 이거는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나 처음 진행했던……

○**송재봉 위원** 재정경제부에서 해야 되나요?

현황 파악을 꼭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을 향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꼭 좀 지키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리고 추가로, 사실 일경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들의 일경험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과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아카데미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추가 사업으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꽤 좋아서 관련돼서 확정되고 있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은 추가로 더 챙겨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경험과 관련돼서도 참여 기업이 너무 소기업 중심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참여 기회를 늘리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

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송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기업의 대규모 채용 약속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하고 SK가 대규모 주주환원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차·3차·4차 벤더에는 어떤 환원들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율의 국민의힘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대구 수성구율 교육위 간사를 맡은 이인선입니다.

오늘 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보니까 여당 질의는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고, 문제는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또 망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감추고 있지 않나 또 바다 너머 불어닥칠 폭풍우를 감추고 안 있나, 수평선 아름다움만 찬양하고 있나 이런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세금 내는 국민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국정운영의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리님, 국무위원님들 또 위원님들 다 같이 미래세대 절벽으로 향하는 기차가 되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같이 발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위 간사를 맡다 보니까 정부 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교육재정 개편 문제가 아니고 재정통제의 문제 또 지방분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리님 또 우리 기획처장관님, 교육부 모두 계시니 교부금 문제를 비롯해서 재정부운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인선 위원 장관님 저랑 같이 재경위 활동을 하면서,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정말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거기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기억하시겠지요? ‘협의하고 조정하겠다,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다른 부처 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참석자는 기획처장관님 또 교육부장관님 또 행안부차관님 그리고 민간위원 14명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거는 이렇습니다. 구성 자체가 법적 구성에 따라서 해당 의제에 따른 정부위원들과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했지만 그래도 장관님께서서는 이 실체는 실은 돈을 쓰는 사람, 17개 시·도교육감, 지자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지는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협의회를 만들었나, 혼자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정부만의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꼭 하면서 나중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8일 대통령께서는 공개토론회 때 그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안 했지만 그 이후에 44일이 지나면서 바로 산식이 나왔고 그야말로 그때 토론회는 아무런 준비 없는 군불 때기였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람들은 정부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364개 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 밀실추진을 비판하면서 오늘도 11시에 전국 교육감이 소통관에서 긴급 규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계속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때 문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일방통행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빨라서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강행을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복지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합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때 의대 증원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그냥 단순히 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장관님께서서는 군불을 때고 내년도 정도에서 이걸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강행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일이 저만의 또는 이재명 정부만의 과제였겠습니까? 저도 초선, 지난 2012년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제가 22%까지 올리자고

했습니다. 나무만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급감하는 인구, 학령인구의 감소 추이 그다음에 우리 재정의 전반적 상황, 특히 고등교육이나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저투자 상황 이것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송언석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고요.

○이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서도 또 진보건 보수건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대라고 다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인선 위원 저도요, 재정위에 있을 때 장관님과 같이 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강행을 하고 가게 되면 이 많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화를 풀고 협의를 할지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은 20.79입니다. 그렇지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겠다.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넣어서 교육·인재 계정에 넣고 영유아, 고등, 우리가 말했던 평생교육에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편에서 보면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교육부장관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서로 다른 의견을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합의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돈도 교육부가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기획처가 결정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도 기획처가 할 거다, 기획처가 교육부보다 더 잘하냐,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이 오히려 기획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럼요.

○이인선 위원 나라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헌법과 그다음에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장관님 산식도 봤고요.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것 중의 하나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답만 제가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면 총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랏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고요. 우선 교육교부금은 저희가 100% 장담합니다. 지금부터 결코 줄이는 일 없다, 계속 상향한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1인당 교부금이 8.5% 올랐는데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10.1%로 오히려 올려 준다. 만약에 세수가 악화돼 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은 더 채워 준다.

그리고 지금 기금법 안에 이런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열어 놔습니다. 초·중등교육 부문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열어 놔기 때문에 이중, 삼중, 사중의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교육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그리고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집행 과정에도 국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20% 정도는 심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 하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발언시간을 드려서 국회방송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장관님,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현재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들을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아무튼 기금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그 기금은,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인선 위원** 장관님, 저하고 안다고 너무 발언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0~30%의 범위 내에서……

○**이인선 위원** 충분히 교육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것 제가 설명하는 것 마치고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PT를 보면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 과거에 세수가 많이 건졌을 때 국회 통제 없이 너무 선심성 정책에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재정조직법을 만들어서 재정적자 축소에 쓰도록 해 놔습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경우도 국부펀드에 넣고 필요한 경우는 재정준칙에 따라서 3%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쓰라고 돼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제와 무관한 일시적인 횡재성 세수라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0.8%에 해당되는 금액만 쓸

수 있도록 봉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함부로 못 쓰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회를 안 거치고 쌈짓돈을 만들까 하는 고민이 엿보이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같이 재경위 활동하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너무 형해화된다고 공무원들 앞에서 굉장히 추상같은 호통을 내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윤호중 장관님 나오셨나요? 제십니까?

장관님, 이 안에 보니까요 이번 개편안에 지방교부세도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모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모수가 변동이 되는데 내국세 19.24%가 적용되는 이 세율은 그대로인데 모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고 모수가 줄어드는 것에서 지금 시행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 셈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도 내국세 총액에서 일부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역 권리를 꼭 이렇게 시혜하듯이 바꾸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빠져나간 것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꼭 마음에 두셨다가, 원래 자꾸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대응기금이 모수가 빠졌다는 것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여건이, 중앙보다 지역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졌나 어찌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PPT를 보면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재정이 좋아지고 이재명 정부가 세수가 늘고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자유 재원 비중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정말 과연 지방 주도의 성장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어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고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법제처장 조원철** 예,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어디? 아, 뒤쪽에 계시네요.

처장님,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단 5일이었던가요? 그렇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제가 정확한 일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법제처에 이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가 40일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법 부분은 5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이것 5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짧고 간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소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예.

○**이인선 위원** 다음 PPT를 보게 되면.

총리님, 제가 여성으로서 총리까지 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AI가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교육부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하고 둘이서 이렇게 담판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처장관이 주먹을 쥐고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교육부장관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역할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교육감들이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교육부장관이 대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관련된 부분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표해서 토론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하는 각 부처가 있는 거고 그 부처 간의 조정이 돼서 마지막 정부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설명을……

○**이인선 위원** 예, 총리님 그렇게 마지막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총리님이 좀 더 일찌감치 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총리님은 안 보이고 정책실장, 기획처장관만 보여서 부처 위에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분권의 핵심은 권한과 재정이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님도 강조를 하셨고 여기에서 반드시 지방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를 항상 총리님께서 유념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쨌든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지방 몫이 어떻게 바뀌는지 빠짐없이 잘 따지면서 살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흘간에…… 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5일 입법예고해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어쨌든 교육감·지자체에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강행한다는 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한성숙 총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확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이인선 위원 위원회, 총리님 산하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잖아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위원장으로 돼 있는 데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인선 위원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인선 위원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보면 주무부처가 있는데도 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냐 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대 포함해서 10개 만들기가 7월 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될 마지막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아마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9개 권역의 국립대학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면 김대중 정부 때 4대 권역,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 경남 기계 이렇게 4대 권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시 4 플러스 9, 초광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는 5극 3특입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을 빼면 4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개 대학을 하겠다는 안이 있다는데 그게 과연 결정된 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표를 보면 지금까지 4개 권역을 나눴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표를 보면. 중부권 대학 수가 72개, 서남권 65개, 영남권에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권, 동남권이 각각 이렇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4대 권역으로 나눴는데 왜 3개 대학, 3개 권역으로 하는지…… 권역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권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대로 1, 2, 3을 자른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주신 말씀들이랑 그리고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도 내용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보고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왜 5극 3특이고, 4극이 필요하고 4대 권역인지 있습니다. 권역이 있는데……

예산처장관님, 권역이라는 게 있는데 3개 대학을 1000억씩 주겠다 이런 발표는 나머지 대학, 거점대학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키워 주려면 똑같은 못 하더라도……

프로포절(proposal)을 9개를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3개다, 5개다, 4개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권역을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제안 관련해서는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주신 말씀들, 정확하게 어떤 것 가지고 평가할 건지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잘 살필 겁니다.

○**이인선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이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단순 얼마나 많은 대학에 하나보다는 그런 우수한 인재 또 기업 유치의 기반 이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육성할까에 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대학에 나눠 주기보다는 그런 대학의 강점, 지역의 성장동력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서 확실한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게 교육부의 애초 구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지금 선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는 재정 여건이나 또 이 사업의 추진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그러면서 또 추가 집중 지원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장관님,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주셔야 되는 게 반도체연구소사업 지금 집행이 6.6%밖에 가지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을 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권역으로 딱 해서 1, 2, 3으로 하겠다는 건 9개 거점대학을 살리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포절을 7월 말에 받았을 거니까 9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왜 그동안에 지난 정부가 4극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재** 교육위 간사이신 이인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응답을 보면서 박홍근 장관님하고 이인선 위원님하고 잘 협력을 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

하게 짚고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권향엽 위원 감사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면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권향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중소벤처기업부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 주셔서 국감 때 지적하신 부분들 잘 신경써서 오픈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봤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2025년도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적이지 못했던 부분, 국정감사 할 때도, 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당시 장관님께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K-스타트허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은 SVC seoul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잘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비리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을 전부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에는 6년간 844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임차료와 관리비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때 이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부가 이 건물을 앞으로 6년 동안 임대하기로 했으니 월세 수입이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1320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기부와 기재부는 844억 원의 고액 임차료를 숨기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산안 라벨갈이를 했습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을, 건물 임차료를 그 부분과는 완전히 따로 떼어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어디에도, 글로벌 창업허브 예산에 임차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창업허브 건물 임차료를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른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들이 스타트업들 관련된 부분의 창업지원 사업들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중요한 시설이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과도한 예산과 그리고 준비 과정 중에 좀 과도했던 부분들을 작년에도 이미 말씀드리어서 재정법……

○권향엽 위원 그 과도한 것이 단순하게 과도했다라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제

가 다시 2010년도부터 최근에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오직 그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만이 유일한 사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건물 리모델링 사업과 월 임대료를 본사업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호철 감사원장님,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는 홍대 ‘더 코너’ 또는 홍대 ‘코너136’이라는 건물이 전부 임차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건물주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서 좀 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임원에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권향엽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장관한테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공교롭게도 보면 이 글로벌 창업허브를 결정했었던 KDI의…… 백 곳 중에서 세 곳을 선정하는데 마지막 세 곳 중에 두 곳은 월 임대료가 60억이었고 지금 이렇게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 이 건물은 10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선정했었던 장관이 오영주 장관이었습니다. 김강욱 전 고검장과 오영주 장관의 남편 장석명 씨하고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주 공교롭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과·특정 사안 감사에 포함해서 감사원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반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저희가 인사라든가 조직 어떤 추스리는 과정에서요 다소의 감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시군요.

이거 결산 감사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강력한 시정조치인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변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감사원의 몫입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예.

○권향엽 위원 다음은 산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시지요? 대미 통상 문제라든가 중동전쟁, 자원 위기 그리고 메가프로젝트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부 관계자들, 직원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 지난 2월 28일 날 중동 전쟁이 발발했고 산업부에서는 긴급하게 세 가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하나가 3월 13일 날 했었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

한에 관한 규정, 3월 27일 날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4월 15일에 있었던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바로 이제 내일이면 나프타 수급조정 고시하고 석유화학제품 수급조정 고시가 만료가 되는데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석유화학제품 수급조정 고시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점매석 금지 조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산업부는 이 고시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개별 기업의 석유화학제품 판매량과 재고량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각 기업이 보유한 물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 필수품목, 안보품목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창기에 적용하는 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석유와 나프타의 경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서 기업별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등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한 건데 산업부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시적인 점검이 어렵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지요. 그 첫 번째가 석유화학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기 때문에 공급이 풍부한 제품이라서 평상시에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로는 기초유분부터 각종 합성수지제품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유통 구조도 복잡해서 상시적인 수급 점검이 어렵고 그 점검을 할 경우에 중소기업체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보면 중동 사태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해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석유화학제품들 중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우선 대상이었던 품목이 이번에 있었지요. 예를 들면 국민생명·보건 품목이라든가 생활 필수품목,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한 필수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산업부가 재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축물량 기준이 마련되어서 비상사태에도 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맞습니다. 이번에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나프타와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급 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 개정도 같이 마련해서 위원님하고도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내란 사태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검찰청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제도를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정제도를 문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바탕이 돼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다른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을 이렇게 보니까 검사의 경력과 보직 등을 고려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핵심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검장급이 1급, 차장·부장급이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고위직 검사들이 1급에서 4급까지 고위 수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임용령대로 한다면 고위 간부의 100%를 검사 출신으로 충원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00%를 채워야 한다는……

○**권향엽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권향엽 위원**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서 출범한 공수처의 경우는 검사 출신의 조직장악을 막기 위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8조 1항을 보면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즉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중수청의 1급에서 4급 수사관이 출범할 때 수사를 지휘하고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 간부직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출범 초기에 이분들이,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이후에 경찰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수사관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형성된 조직문화, 인사구조 바꾸기 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검찰과 다른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사의 다양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권향엽 위원** 더군다나 중수청은 앞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또 서로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간부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면 공소청과 인적 카르텔로 형성한 중수청이 과연 공소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들을 불기소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중수청이 법왜곡죄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다양성을, 인력 배치에 있어서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사관을 임용할 때 검사 출신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

다. 오히려 검사 출신 수사관들의 인력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전문성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경력의 간부진을 구성해야 중수청이 특정 직역에 장악되는 조직으로 굳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력의 인재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왜 중수청이 출범했는지 염두에 두시고 준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 역할을 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에이전틱(Agentic) AI의 핵심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권향엽 위원 반도체 호황기가 세계 1·2위가 우리나라 기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관님,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기억에 떠오르는 숫자는 10~15% 언저리 아닐까 싶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2019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 2025년도 현재 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3%에서 2025년에 1.9%로 떨어져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를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총 여섯 차례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새로 냈는데 스스로도 정책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 설정한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팹리스의 세계시장 점유율 3%, 파운드리 20%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팹리스 점유율은 0.8%, 파운드리 점유율은 9.8%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산업부는 그 원인을 팹리스·파운드리 패키징 수요 기업으로 이어진 밸류체인 기반이 미흡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대만 TSMC를 중심으로 보면 팹리스 협업을 강화하고 패키징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시스템반도체 종합강국 1·2위를 다투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렇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전략을 보면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정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하시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

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권향엽 위원 반도체 세계 2강을 목표로 10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추진과제 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도 최근에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주문 수요 급증에 따라서 가격을 15% 인상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턴어라운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3분기에는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적인 경쟁력에 가려져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4년째 여섯 차례나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산업부 스스로도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점검도 잘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메모리 초격차를 지키는 동시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다음은 송미령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권향엽 위원 기본소득, 지금 17개 시군구에서 실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 곡성도 방문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소득의 가맹점 수만 하더라도 1만 4253개소에서 1만 6452개소, 약 2200개가 늘었고 인구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인구도 5% 정도 늘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실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소득은 좀 더 확산되어 더 늘려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각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는 비율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30%……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일부 광역단체장, 경남지사는 ‘광역단체에서는 한 푼도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전액 다 분담해라’ 해서 일부 지자체는, 저하고 가까운 지역구는 못 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단체장들도 적극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임호선 위원님이 대기 중인데 임호선 위원님까지 하고 쉬실까요, 아니면…… 하고 쉬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기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임호선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농담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진천·증평·음성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임호선이라고 그러니다.

조금 쉬운 문제부터 갈까요?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호선 위원 동해수위에서 2년 있다가 다시 행정안전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군 단위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먼저 살처분 보상금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관님 이하 직원분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올해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조류독감인 경우에는 작년의 2.3배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배가 증가를 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 피해액이 조류독감의 경우는 1132억,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88억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지난주에 지자체에 보상금을 교부했다고는 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벌써 6개월 이상 감감무소식이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7월까지 일단 지방정부에서 신청한 것을 교부를 했는데요.

○임호선 위원 763억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들이 한 게 764억입니다. 764억은 보상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살처분 규모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총 1762억 원이 보상금입니다.

○임호선 위원 부족한 게 998억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 뚜렷하게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견 추석 전에 교부를 하였으면 싶어서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전용하고 또 예비비를 활용해서……

○**임호선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예비비 확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의 과부족은 예측 불가능함, 소위 예측 불가능성의 예비비 집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 전례도 있었고요. 따라서 향후에 요구 시에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고려해서 적정 소요를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피해농민 입장에서는? 좀 부처 간에 협조를 빨리해 주셔서 현장 농민분들 애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님, 이게 지방비 20%가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략 보니까 한 284억 정도 되는데 지방비에서 매칭이,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지방정부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각 시도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도, 확보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를 열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추석 전에 농민 시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반가운 마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계속 골치 아프신 일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계란하고 닭고기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계란,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이 문제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내려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다행스럽게.

○**임호선 위원** 정부에서 이게 몇 억 개 들어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억 3000만 개 저희가 수입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루에 보통 한 1500만 개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주 단위로 조금 그때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주간 단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간 단위로.

○**임호선 위원** 그래서 안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아직은 좀 이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우리 자체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안정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선란 수입이 되고 있고 또 가공품에는 할당관세 하고 있고 이래서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그리고 달걀 일일 생산량도 비교적 증가 추세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함께 들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임호선 위원 페이스북에 제 절친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 주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사업자단체에 5억 94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임호선 위원 계란 생산·판매 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를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잘 들어 봐 주십시오.

‘계란과 닭고기에는 도매시장이 없다. 가격은 깜깜이고 대금은 사실상 외상이다. 값을 매겨 줄 저울도 때인 돈을 받아 줄 안전망도 없이 농가를 시장에 밀어 넣었다. 생산자단체의 수급 조절은 담합이기 이전에 각자도생이었다. 저울을 놓아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없는 저울을 두고 눈금을 속였다고 과징금을 매긴다. 한 부처는 저울을 만들지도 않고 한 부처는 없는 저울을 부순다’, 아픈 이야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란계협회가 말하자면 받아야 될 가격을 제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달걀 가격이라는 게 후장기 거래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이게 정보 비대칭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다른, 예컨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유통 전체를 손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유통구조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도매시장이 없는 거지요.

○임호선 위원 예,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계속 약자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은. 이분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이분들의 생산활동을 보장 못 하고 정부에서 2억 3000만 개씩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과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느냐…… 아니, 우리 정부 들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동안의 히스토리에 의해서……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희생을 딛고 현재까지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달걀뿐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달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측면만 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생산자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거나 계란유통센터에 물류비도 지원한다거나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란계 케이지의 규모화라든가 이렇게 생산 역량을 높이는……

○임호선 위원 지금 그 문제까지도 겹쳐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농해수위를 떠나와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아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가격 관련해서는 KREI에서 지금 현재의 전체량 그다음에 1일 생산량 그다음에 유통에 남아 있는 양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서 가격을 전망하는 시스템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하여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안전망을 갖춰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임호선 위원 반갑습니다.

예비비 규정·집행내역, 정부에서 제출한 것 즉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해수부에서.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 하면서 수산물 할인대전 사업은 이게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소비 위축됐을 때 시행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환급 유형이 아니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마트 할인행사에, 이것이 본예산 34억이었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35억입니다.

○임호선 위원 35억에다가…… 아, 32억. 거기에다가 예비비 30억을, 여기에다가 예비비를 썼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35억에 30억 이렇게 해서……

○임호선 위원 이게 맞습니까?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비비 사용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임호선 위원 아니,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옳지 않다는 판단……

아니,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사례 없도록 각별히 살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임호선 위원 중수청이 10월 2일 발족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임호선 위원 저는 공수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 잘 아실 겁니다. 20년 7월 15일 날 이게 공식 출범 예정일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자리해 계십니다만 공수처장님 인선이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1월 21일, 해를 넘긴 그때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수사관 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 5월 10일, 거의 1년 다 돼서야 실질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물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심으로 준비단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선 작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임명이 돼서 조직을 딱 장악하고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만 저는 기틀을 바로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좀 더 진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시간이 없어요. 장관님, 인사청문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인사청문 대상이고요. 지금 중수청장 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 제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국민 추천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6일, 내일까지 제청이 끝나고요……

○임호선 위원 10월 2일 이전에 임명이 가능하도록 좀 서둘러 주십사, 인선 절차를 시작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9월 내로 중수청장을 임명해서 10월 2일부터는 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어제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게 두 가지거든요. 아니,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농어촌기본소득이에요. 또 하나는 햇빛소득마을입니다. 아실 겁니다. 지금 86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2차 공모에 617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관심이 엄청 높아요. 나름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를 총괄해 가면서 추진단을 꾸려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금년도에 700개 이상의, 그리고 2030년 임기 말이 되면 3000개 정도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저는 각 부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임호선 위원 현재 진도로 보면 저는 가능하기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걸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86개 마을 중에서 금년 안에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데가 10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조건이 간단치가 않아요, 부지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 자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도와 계시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제가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까 자금 문제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태양광 시설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돈 들어갈 일이 많지요. 1MW 기준으로 할 때 평균 한 13억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책 용자예요. 결국 자칫 빚더미를 안을 수 있는 사업인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누구냐 하면요 태양광 업자입니다. 그것을 ReSCO 기업이라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ReSCO 기업이라고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선정해 가지고 리스트업만 해 놓은 정도인데, 그다음에 VPP라고 해서 가상 전력계통을 엮는 거지요, ESS는 마을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VPP 업자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건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조합을 만들었는데 조합 사람들의 결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그 안전망을 제대로 갖춰 놓지를 못했어요.

무슨 취지냐, 무슨 뜻이냐 하면 농민 입장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수익률 과장, 특정 시공업체 계약, 수수료나 수익배분, 비용회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농민분들이 정보가 없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임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이것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갖고는 어렵다, 통합관리플랫폼 정도를 구축해야만 공급한 사항을…… 그냥 원스톱 서비스 정도의 민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저는 자칫 사기꾼들의 낚시밥이 될까 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일이 억이 아니고요 15억 정도가 오가는 돈입니다. 이게 정책 용자하고 또 자부담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서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나뉘져 있는데, 부지 지원반만 해도 그래요. 농어촌·수자원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저희 집 앞에도 고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관심 갖는 분들은 그런 데예요. 그런데 여기 추진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금 부지 확보 협의를 하고 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시군에서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화상 회의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혀 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게 행정안전부장관님의 의지와 역량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별히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부 관련 사업 예산이 많아질 때 벌어지는 문제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지방비 부담이 있어요. 제가 추진단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게 전력기금에서 2200이라고 하는데 2200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요. 지방이 칠팔백 억 정도 얘기를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한 이삼천 억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방 요즘 돈 쪼들린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23년도, 24년도에 지방 세수결손 얼마 났습니까? 15조 이상 났지 않습니까? 도로 공사 하나도 못 했어요. 저희 음성군도 작년에 도로포장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거랑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신데, 이것은 기획예산처장관님 계시니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임호선 위원 잘 설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과 별개로도 초광역 계정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5대 원칙에 의해서 기존의 7개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대폭 확장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냥…… 지방재정 총량 보전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총량 보전이요?

○임호선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임호선 위원 아니,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보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방재정.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령에 명시해 뒀습니다.

○임호선 위원 개별 지자체별로 순순실 방지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개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행안부를 통해서 볼 텐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계속 앞단에서 연동되다 보니까 올해 내년이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74조 그리고 모수 개선으로 인해서 내년이 77.2조 예상되는데요 28년부터 확 됩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예산이 한 101조 그다음에 29년도가 117조까지 올라갈 상황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교육재정만큼이나 지방재정도 그런 담보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미래대응기금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퓨처 리스폰스 펀드(Future Response Fund)를 씁니까, Readiness Fund(레디니스 펀드)를 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영문명까지는 제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영문에서 퓨처 리스폰스 펀드로 쓰는 것 같은데요. 펀드거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펀드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국민성장펀드는 영어로 내셔널 그로스 펀드(National Growth Fund) 이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대응기금, 국민성장펀드 이게 펀드잖아요, 다 같은 영어로 쓰면. 그런데 이게 4개 분야가 있는데 AI, 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분야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겹쳐요, 일단은.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소멸기금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여 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더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중복·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설계할 겁니다.

○**임호선 위원**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이 국민성장펀드를 쫓아내는…… 구축한다 그러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민성장펀드는 당연히 이익을, 수익을 추구하는 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산은 기반의 이렇게 설계돼 있고요. 저희는 재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호선 위원** 재원 조달 방식이나 성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임호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께서서는 경찰대학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중수청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도 있고 관심도 많으실 텐데 10월 2일 개청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휴게실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으로부터 여기 왔는데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와 계신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주택 공급이나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보당의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연일 결산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세요.

2016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글을 남긴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도둑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라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만큼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는 새로운 재정 여력이 생겨서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역대급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이 되자 정부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를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 맞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AI,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청년과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사는 나라,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기반에 투자하겠다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정혜경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갈라 놓고 있는 불평등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행 진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6월 우리 경제를 뭐라고 진단했나 하면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악화됐고 소득불평등도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습니다. 소득도 최하위, 자산도 최하위인 가구 가운데서 20·30대의 청년 비중이 2020년도에는 7.9%에서 2025년에는 15.2%로 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거의 2배입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는 계층으로 더 많이 밀려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리고 아까……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진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분석에서는 보면 자산 상위 10%의 보유 비중이 1% 높아질 때마다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소비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줄고 그리고 근로 의욕과 사회적 신뢰까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불평등이 계속 커 가는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중에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역과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대응기금 기준에 하나를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평등 해소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 해소는 미래를 준비하고 돈이 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정혜경 위원 말씀하셨고. 그래서 불평등이 계속 커지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계층 이동도 어렵고 사회적 신뢰도 약해집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장관님 동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불평등을 줄이는 데 쓰는 돈도 미래를 위한 투자 맞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여러 부분에서 주신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역이나 청년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과 그리고 특정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다 동의하고 간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래서 저는 미래대응기금 관련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을 교육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래 투자 맞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정혜경 위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청년이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 때문에 취업 준비를 포기하고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국가가 한 인재 투자는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

○정혜경 위원 없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어려운 부분이……

○정혜경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청년의 능력을 키우는 데 쓰는 돈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청년의 부모가 돈이 없어 가지고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청년에 대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미래에 대한 투자지요.

그러면 저는 기후 문제도 똑같다고 여기거든요. 기후 문제도 똑같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산업시설들을 바꾸고 전력망을 보강하고 등등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폭염과 기후재난 때문에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소득이 끊길까 봐 일을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득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산으로 보면 재난대응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기후에 관련해서 폭염과 관련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지를 좀 말씀 주시면……

○정혜경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청년들에 대한 생애 첫 실업수당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기후재난 소득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 미래대응기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생애 첫 실업수당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거 맞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지금도 고용노동부가……

○정혜경 위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고용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그래야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실직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 상태인 이 사람들에게는 왜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에 좀 다르긴 한데요.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업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었을 때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말했던 것 같고 아직 취직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부분들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정혜경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국가가 생애 처음으로 국가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애 첫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희가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들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경험이라든지 여러 창업 지원이라거나 또 최근에는 참여소득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업급여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과 좀 어긋나서 제가……

○정혜경 위원 저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고.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쉬었음 청년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은 개인의 몫입니다.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있지요.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취업이 늦어져도 1년을 더 준비할 수 있고 5년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월세도 지원할 수 없고 밥값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이런 사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청년들은 바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터가 자신의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하면서 연명하면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통장 잔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하신 부분들의 전체적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혜경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처음으로 사회에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생애 첫 실업수당 이런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미래대응기금이 결국은 산업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곳으로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사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특히나 청년들에게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미래대응기금과는 별개로, 미래대응기금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청년들이 본인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경험과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그 전까지의 단계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돼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그런데 총리님께서서는 지금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대응기금도 결국은 산업과 시설투자에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청년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요.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아직은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다 넣자 말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산업으로 지원이 되고 산업만 가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응 이것이 정말 필요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기후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후재난 소득 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체감온도 38℃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건설 일용노동자가 하루 일을 폭염으로 쉬면 그 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38℃에 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위협이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러 나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국가가 그냥 멈추라고만 한다고 해서 과연 멈추어지는가, 그리고 매번 그러면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만 저렇게 후려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국가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거나 생계를 보장해 줘야 사실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입니다.

○정혜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 얼마 전에도 폭염과 또 거제의 폭우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위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와 일하는 서민들의 그 마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지금 초과세수와 등등으로 뭔가 국가가 멀리 미래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뉴스에 있는 글일 뿐이거든요. 서민들에게는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폭염을 무릅쓰고 위험하지만 나가야 되는 일자리, 이것을 해소해 주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코로나와 같은 아주 재난의 시기지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이 진짜 필요하고,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데요. 거기서도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기후재난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소득에 문제가 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정말 지키려고 하면 그 소득의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기후재난 위기를 대응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지구는 더 불타오를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도 또한 미래를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단순히 지금 당장 벌어진 폭염에 대한 대응, 재난 대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장기적으로, 그랬을 때에 생계가 좀 막막한 분들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사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고……

○정혜경 위원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들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원래 작년에 기후보험제도라는 것도 마련이 되려고 하다가 예산이 좀 짊어 가지고 안 됐어요. 하여튼 이런 거라든지 기후재난에 의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층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단계별로 확장하는 방식으로라도 기후재난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하는데요, 위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살피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총리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평등이 계속 커지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도 하셨고 그리고 청년이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기회의 격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기후 재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떠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라라고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방치한 채로 우리가 미래 대응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해 가면서 미래를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상위 10%에 계시는 그분들은 살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살기 어려운 사회 내지는 목숨까지도 위험한 사회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그리고 뉴스에서 여러 가지 초과 세수도 얘기하시고 초과 이익도 얘기하고 주식은 얼마가 올랐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은 달라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정말로 절실한 때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기 국무위원들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산업에 대한 투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사람에 대한 투자, 정말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 관점에서도 이 제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잘 새겨들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남은 시간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정혜경 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그 취지 저도 잘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미래대응기금 말씀하신 크게 네 가지 중점 투자 영역이 있는데요. 성장동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지금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K자 양극화 중에서 세대로 봤을 때 고령층이, 이제는 부자 노인들이 사회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산도 이제는 오히려 청년들이 더 적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평등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 겁니다.

○정혜경 위원 불평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동력 빼고는 지방도 정주여건, 교육인재 다 사람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K자 양극화 불평등 얘기하신 건데 방금 말씀드린 세대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지방 통해서 저희가 미래대응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분이 그러면 아마 저소득층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층 면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정혜경 위원 불평등은 그런 거잖아요. 전체 사람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K자 양극화에서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 네 가지 정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에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대·계층·지역·산업 이 네 가지가 K자 양극화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인데 그 분야를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그렇게 사람에 대한 투자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기준중위소득이 사상 최대 6.7% 인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계급여를 포함한 4대 급여와 함께 63개의 복지 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많은 보강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혜경 위원 기준중위소득도 더 올려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K자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은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지지요.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복지 조금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보면 K자 양극화 계속 심각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대구 달서구의 국민의힘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대구 달서구 윤재옥 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청장직무대행입니다.

○윤재옥 위원 유재성 직무대행 나와 계시네요.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실종사건이 체감 치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다른 사건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2008년에 실종사건 수사팀을 최초로 신설했고 또 이 실종수사팀을 여청과에 뒀다가 또 형사과에 뒀다가 몇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도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7월 실종 접수 건수가 7만 6723건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실종수사팀의 현원은 줄어들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현재 전담인력이 779명.

○윤재옥 위원 최근 5년간 보면 2021년도 848명에서 2026년 779명으로 69명이 줄었고 시도 광역수사대 소속 장기미제실종팀도 2022년 73명에서 올해 61명으로 16.4% 감소했어요. 실종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통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지시는 해 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꾸중을 듣고 고치고 책임을 묻고 하면 되지만 지금 인력이나 예산 관련 부분은 청장직무대행이 챙겨서 현장 직원들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부경장 혼자 이백몇십 건을 혼자 처리했다는데 실종사건을 직원 1명이 이백몇십 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2년간 처리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2년간, 한 건 한 건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을 한 개인이, 그러면 한 개인이 1년에 백몇십 건씩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재옥 위원 그런 데 대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경찰 지휘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재옥 위원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시고 지금 경찰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또 사건 종결과 지휘·감독 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고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총리께서도 23일 날 진상조사 지시를 했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사건이 파장이 크고 하니까 각 당에서도 TF를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쇄신안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의 해결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찰은 저 시골 파출소 순경이 경찰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청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장 공석이 지금 며칠째 되고 있는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적들을 주셨고요.

○윤재옥 위원 그런데 622일째 지금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1991년 경찰청이 개청하고 35년간 최고로 공백이 길었던 기간이 42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허준영 청장이 퇴임하고 이택순 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농민 사망사건 처리한다고 조금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왜 청장을 622일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임명 관련된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주신 부분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지금 사건이 나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고 하지만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한 명의 경찰이 담당해야 될 일의 분량과 그리고 또 너무 많은 현장에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재옥 위원 총리님, 그것은 제가 공감하고요. 저도 공감하는데, 경찰청장을 622일 동안 공석으로 두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경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위기관리조직이고 또 최일선,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의 수장을 622일 동안 공석으로 비워 둔다는 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경찰은…… 지금 지방청장들, 차장하고 계급이 같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서울하고 경기남부, 인천……

○**윤재옥 위원** 경찰대학장, 부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재옥 위원** 물론 계급은 같지만 직책이 다르니까 지휘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지휘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데 이 자리를 비워 둔 책임도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도 지금 419일째 공석이에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 국가수사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양대 수사기관의, 중요한 수사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비워 둔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위인설관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사회질서와 안전을 다루는 핵심 부처의 두 수장을 장기 궤위상태로 놔두는 것은 인사권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개혁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경찰 수장부터 임명하고 그 수장을 중심으로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0월 2일 날 중수청·공소청 관련된 부분들의 수장들이, 자리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경찰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책임 있게 내용들을 점검하고 진행하는 부분들……

○**윤재옥 위원** 아니, 국무회의 중계방송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의 디테일한 부분도 잘 챙기시면서 왜 인사권 행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명시적으로 또 서면으로 국회 예결위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내용은……

○**윤재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이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처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윤재옥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구윤철 장관님 계십니까? 차관 오셨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차관이 왔습니다.

○**윤재옥 위원** 차관님, 지방자치단체에서 20조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지방자치제의 재정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좀 힘들다고……

○**윤재옥 위원** 힘들지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라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님 청문회부터 제가 세 번이나 예산부처가 포함된 TF를 만들어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말로 하소연에 가까운 읍소를 드리고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김민석 총리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기획예산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있고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국토부에 왜 안 만드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장관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해당 부처에서 지금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기획예산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 지원 등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어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한답니다.

재경부차관님, 공적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으면 왜 참여하고 TF 만들라고 하겠어요? 마련이 안 됐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마련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답변입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TF를 만들어서 협의라도 해 보자는데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게 없어서 참여를 못 하겠다. 그거 마련하자고 TF 만들자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 너무하네요.

광주가 지역구인 안도걸 위원이 작년 예산안 심의 때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이게 사실 쌍둥이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그 당시 기재부2차관이 지금 현 국무조정실장이지요? 그분이 보완할 수 있도록 공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참 답답한데 지금 광주 군공항 사업은 대통령 직속 TF를 만들어서 기재부가 참여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달리하십니까? 차관님 할 말 있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군공항의 경우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윤재옥 위원 메가프로젝트 있기 전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점이 달라요. TF가 만들어진 게 훨씬 이전이에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TF 자체는 그런데……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메가프로젝트 있기 이전에 TF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늘 통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가재정을 추가하는 국비 보완형 구조로 추진한답니다, 광주 군공항은. 차관님,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군사적 목적이 아닌 지방의 요구에 의해서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에는 기부대양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모든 군공항은 그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다만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최근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면담 이후에 민형배 시장이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의무적 규정을 바꿀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특정 지역뿐만 아니

라…… 어떤 특정 지역만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나서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개정하면 따르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재옥 위원 예, 좋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광주전남은 통합이 됐으니까 20조 지원하면 그 돈에서도 또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대구경북은 통합도 지금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최근에 두 시·도지사님을 따로 뵈더니 한 분께서 또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윤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해요. 2028년 총선과 맞춰서 지금 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해서 같이 선거를 치르자 이런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보완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비 보완형 구조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광주만 하고 대구 군공항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부대의견 취지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대양여 원칙은 그대로 우위를 지키되 법령상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국방부 또 재정부하고 공자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니까요. 같이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윤재옥 위원 이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광주와 대구경북의 통합공항은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른 수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으니까, 특정 지역이?

○윤재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형평성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은 허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련된 법령상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신 부분들 살피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역이 함께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윤재옥 위원님, 국방부장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질문을 장관님이 저한테 왜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질문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구공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이 약간 달라서 제가 한 말씀……

○윤재옥 위원 재정 지원 때문에 제가 정부에 하소연을 하니까…… 또 비경제부처, 경제부처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관님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연합훈련 축소됐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이게 평화를 만들기 위한 큰 결정이라고 오히려 환영을 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북한을 보고 하는 메시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나요? 미사일 10발을 쏘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특수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적이면서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으르렁대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윤재옥 위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도 훈련은 정말로 더 많이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작전능력을 키워야지 전시작전권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작년에 한미연합훈련을 140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9회 합니다. 159회 하고, 축소는 됐을지 모르지만 축소 이후에 계속 연중 균질하게, 균등하게 훈련을 하기로 그렇게 한미 간에 대화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양국 정부 간의 협의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우리 측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전작권을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군공항, 대구 군공항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려도……

○**윤재옥 위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주 군공항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면 지역 간의 형평성 또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대구도 그런 적절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당연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총리님,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여기구 위원** 장관님, 차관님 또 청장님 또 각 부처 위원장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께 첫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자지천하대본야(農者之天下大本也)라고 하면서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께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철강도 생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이고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양곡관리법, 농안법 또 한우법 또 농업재해법 이런 법들 농업민생 6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법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잘 착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아직도 제가 농해수위 위원장인 줄 알고 여러 농민들께서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따듯따듯한 질문을 농림식품부장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여기구 위원** 농해수위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현장도 자주 다니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고랭지 배추가 많은 어려움에 닥쳐 있다는 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랭지 배추요?

○**여기구 위원** 예, 지금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일대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한 10일 정도 왔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막 32도, 31도 폭염이 오니까 배추가 물러서 지금 거의 단풍잎 수준으로 빨갛게 변하고 있다 이런 긴급 SOS를 저한테 쳐 왔는데, 장관님 현장 보고받으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구 위원** 아주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 가서 농민들 목소리를 잘 듣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또 근래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배추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여기구 위원**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게 발견이 돼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생배추가 아니라 포장김치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연간 우리나라에 중국산 포장김치가 어느 정도 수입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양이 최근에 늘어서……

○**여기구 위원** 상당히, 한 31만t, 30만t 이상이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자가 오염된 배추를 드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런 점 포함해서 잘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구 위원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여기구 위원 지난 8월 4일에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 해수부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

산업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여기구 위원 장관님, 어때요? CPTPP 가입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논의 단계에 있습니까?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어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요청한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여기구 위원 현재 CPTPP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데 대부분 우리나라와 양자 FTA가 체결돼 있는 국가들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일본과 멕시코와는 사실상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추가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농민들과 수산업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성토했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지요. 수출산업을 위해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농어업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CPTPP를 또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불신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농어민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그동안 쪽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장관님, 농어민단체와 진지한 논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통상 개방을 하면서, FTA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농민단체와 어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추계라든지 피해 분석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결과가 어느 정도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는데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과들은, 수치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CPTPP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라든지 농업에 어떤 피해가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직 그게 최종 결정은 아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농어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공개를 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가입 신청하기 전에 농어민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충분히 하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여기구 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님, CPTPP 가입 검토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 기금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을 건기로 하고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현재는 한 3000억 정도 조성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FTA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농어민들에게 약속한 기금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 3000억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7000억 정도가 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이거 요즘 수출도 잘되고 세수 상황도 좋은데 7000억을 세금으로 메꾸면 어쩌나 이런 제안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 협력기금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부분들의 농어촌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시고 농식품부장관도 다양한 부분에서 농어촌 부분들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딱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만 FTA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 기금 이것도 건지 못하면서 또 무슨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러면 농민들이 믿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 부분, 7000억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검토해 봤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지금 이 부분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관계부처 관련된 부분에 보완방안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농림식품부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을 걷는 데.

산업부장관님 계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여기구 위원** 산업부장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 기금을 걷는 데 산업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지요, 장관님?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업 자발적으로 걷게 하지 말고 수출로 이득 본 기업들한테 수출의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내게, 이번 법 개정하면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이게 걷히지 자발적으로 누가 갖다 돈을 냅니까? 우리 농해수위에서 많이 해 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여기구 위원 그래서 법을 할 때 강제 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래서 이번 CPTPP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 장관님들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저는 선 대책, 후 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총리님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총리님, 그리고 제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데요. 우리 철강산업 관련해서 총리님께 당부도 하고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철강산업이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산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고 국가안보와 공공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강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합니다. 생산액 116조 원, 종사자 수 10만 명이 넘고요. 수출 248억 달러 달성, 제조업 생산 6위 또 수출 7위가 바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철강산업이 요즘 많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지금 철강산업이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철강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닥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위기 극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을 철강 기업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산중위에 있을 때 옆의 산업부장관이 철강산업과 석화 관련해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 답변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조하시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말씀 많이 했던 것도 옆에서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이게 국가의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위원 반도체, AI도 중요하지만 철강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철강산업은 다섯 가지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철강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도 국내 철강 수요는 전년보다 8.9% 감소했고 국내 조강 생산도 15년 만에 최저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저가 철강제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지금 국내시장에서 외국산 철강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또 수출 여건도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가 50%를 넘어섰고 또 유럽 역시, CBAM이라고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여기구 위원 또 수입 쿼터를 축소하는 등 자국 철강 보호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 철강산업이 많은 어려움에닥쳐 있고. 또 여기에, 철강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입니다.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간 최대 75.8%나 올랐고요. 또 동시에 지금 탈탄소 바람이 불면서 탄소중립 전환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2050 탄소 넷제로, 탄소중립에 맞추어서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하면 철강업계에 장기적으로 약 37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철강 기업들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철강산업 관련된 부분, 특히 EU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대통령 순방 가셨을 때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의 조건들도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보강해서 지원해 가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 철강산업을 위해서 설비투자, 운영, R&D, 수요 창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지원이 매우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이 표에 설명이 돼 있지만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청정수소와 CCUS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유럽연합, 일본 등등 해서 수십조 원의 돈을 이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해외에서 주요국들이 철강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철강산업을 단순히 민간산업에 맡겨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서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K-스틸법을 여야 우리 의 원님들 106명과 함께 대표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힘을 좀 쏟아 줬으면 좋겠고 또 이 법 후속 법안으로 제가 K-스틸법 2.0 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법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가 저탄소 철강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투자비를 감안해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우리 철강이 꼭 포함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요. 우리 철강도 꼭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철강의 핵심 저탄소·고부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총리님께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 등 높은 에너지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산업위기선 제대응지역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좀 면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워낙 원가가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좀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셋째는 산업위기선제지역 지정기간을 산업위기특별지역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연장을 하면 된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제가 제안한 우리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런 K-스틸법 2.0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되는 부분들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강산업이 너무 위기에 닥쳐 있어서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제가 연구한, 고민한 게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원가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여기구 위원 이 철강 생산기반이 무너진 뒤에 지역경제와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판 IRA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우리 철강산업도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꼭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총리님께 애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일단 이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검토가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구 위원 내가 부총리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산업에서 철강이 제외됐습니다. 철강이 왜 제외됐는지 제가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철강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산업으로 검토되는,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AI 로봇 등에 비해서 종사자 수, 출하액, 수출액, 투자액 등에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철강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총리님.

반도체, 배터리, AI 등 미래산업을 지원하면서 정작 그 산업들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철강, 철강 없이 반도체가 있습니까, 배터리가 있습니까, AI가 있습니까? 철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강을 제외하면 이게 과연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을 살리기 위해서 전면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총리님, 최소한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저탄소철강 등 탄소중립 전환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직접 기여하는 분야부터라도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먹거리입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에 동의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관계부처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반도체만 하지 말고, 철강이 있어야 반도체가 됩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산업은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주식인 쌀? 산업의 쌀인 이 철강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입니다. 철강산업이 튼튼해야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기획예산처장관님, 부총리님 또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산업부장관님 등등 해서 철강산업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위원님, 산업부장관입니다.

먼저 산업부장관으로서 위원님의 그 말씀 진짜 200%, 300% 공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과 협조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라고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저희 민주당에서 ‘약속은 잘 지키구’의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3일 종료됐지요? 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었던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차 특검 180일, 2차 종합특검 180일, 거의 1년 간을 탈탈 털었습니다. 사실상 빈손이지요.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우리 양평군청의 공무원,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특검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양평 공무원들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됐고 황당한 의혹과 주장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검의 부당성과 당시에 가혹했던 과정을 세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바로 양평과 양평군민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김선교 위원** 아니, 양평군민과 양평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총리님이 총괄적인 그런 업무 보시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위원님?

○**김선교 위원** 뭐가 수사 중인 거 바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국무총리 한성숙** ……

○**김선교 위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국민 여러분과 양평, 양평군민 여러분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2022년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경 변경된 노선에 당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노선 변경에 제가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등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아니면 말고 식의 느닷없는 정치 공세로 착공도 못 하고 멈춰 선 사업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2025년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총리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1차·2차 특검 과정에서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김선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년 5월 대선후보 당시에 양평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속히 하라고 했고 지난 3월에 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님, 국토부2차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정무수석께서 서울-양평 사업 재개 발표를 하셨고요 지금 신규 타당성조사를 발주해서 지난주 8월 21일부터 업체가 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선교 위원 그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 시작하는 겁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새롭게 시작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기본·실시설계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선교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노선 변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용역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특검에서 하는 것은 특검대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용역업체하고는 계약 해지를 하고요.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한 10년은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일단은 최대한 늦게……

○김선교 위원 원자재값도 상승되고 모든 비용이 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무쪼록 대통령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고 또 1년간의 특검에서도 노선 변경 과정에 윗선 개입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진 것 아닙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우리 양평군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산처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 올라오면요 좀 빨리 잘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절차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중랑구에서 그쪽으로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인근?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 지역과 가까운 것을 떠나서 예산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그 절차 운영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정쟁적으로 가면 피해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총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추경 왜 합니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추경은 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대규모 이월되고 불용되고 전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분석자료를 보니까 기후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 과기부의 AI 혁신펀드—이것 추정입니다—중기부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국토부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국방부 병역 기본 지원시설,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 확충, 문체부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 이렇게 7개 부처에서 대규모 이월·불용·전용으로 줄속 추경을 했다고 보는데 공감하세요? 그게 한 1조 원이 넘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불용 나서 정말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또 출자나 펀드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중기부의 장관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보다시피,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했던 사업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 사업 잘됐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모태펀드는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 커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가 컸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저것은 제대로 챙겨지지 못했다고 보는데 잘돼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모태펀드는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가 있었고 또 모태펀드 자체적으로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속하면서 연평균 8% 이상의 수익률도 내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돈은 다 썼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투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것……

○**김선교 위원** 예?

○**국무총리 한성숙** 그러니까 쓴다는 것이 운용사들에게 출자되고 그다음에 출자된 것들이 스타트업들에게 가는 그 단계가 펀드마다 운용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성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농해수위입니다.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농림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증액된 바 있고 전통 발효식품 지원, 예산 지원된 것 있고 기술화 지원, 각 항목별로 한 세 차례씩 국회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도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올라와 가지고 또 적게 올라와 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추경에도 담아 보고 여러 가지로 애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산 지나면 바로 예산심사 아닙니까? 매년 정부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고 국회가 반복해서 증액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가령 무기질비료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안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결국은 국회 단계에서 종합적인 국민의 의견까지 담아서 아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정부에서 답아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선교 위원** 장관님이 그런 거 잘 챙기셔야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를 들어서 지방 이관으로 됐던 경로당의 양곡비·냉난방비도 결국은 그동안 국회에서 증액해 오지 않았습니까? 법률이 마련되면 가능하지요, 그것도.

○**김선교 위원** 예결위에 올라오면 증액되는 게 없어요. 증액되는 게 없다고요, 한껏 해야 한두 건.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은 중진 의원도 하셨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유관 부처랑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총리님한테 자꾸 여쭙봐서 죄송한데……

○**국무총리 한성숙**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총리님, 지금 농지 전수조사 정말 농촌 현장에……

현장 잘 나가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농지조사 하는 현장에 나간 적은 없고 요즘은 부동산 관련된 현장……

○**김선교 위원** 졸속행정이라고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농지조사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거기는 농해수위에서 제가 질의해도 되고, 그래서 총리님한테 여쭙보는 거예요. 얼마나……

○**국무총리 한성숙** 농지조사를 왜 하는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고……

○**김선교 위원**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시하다 보니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에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법 집행은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농지조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추가 인력들도 채용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교 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총리님, 한번 다녀 보세요, 현장을.

○**국무총리 한성숙** 농지조사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잘되고 있는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도 잠시 들은 바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농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 대상 중 27%가 위반이 위심된다 최근 밝힌 바 있는데요. 그것 한번 도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대상 87만 7000여 필지 중 기본조사 결과 부적합이 32만 4000여 필지, 무려 37%에 이릅니다. 이를 시군별로 하루 24건씩 청문을 해요. 단순 계산해서도 약 3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불법 임대차에 공

유지분까지 조사하던 대상은 더 늘어납니다.

조사는 올해 해 놓고 처분은 몇 년씩 걸릴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총리님, 보십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대통령께……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지금 보신 것처럼 불법적…… 인사청문회 때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신 바가 있고 저도 사실 농지법 관련된 부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겨 왔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자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의 걱정되시고 하시는 부분들은 관계 부처랑 상의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현장을 나가 보시면 지역의 공무원들조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많이 다니신다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김선교 위원 맨날 장관이 걱정 안 해도 된대 놓고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제대로 농지를 알아야,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도 개선할 수 있어서……

○김선교 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농촌지역이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어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준다고 봐야지요.

○김선교 위원 줄지요? 고령화입니까,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령화도 심합니다.

○김선교 위원 심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분들이 노후에 땅 좀 한번 팔아서 돈 좀 쓰다가 운명을 달리하겠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못 들어요, 현장 많이 다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농지 진흥지역 이런 데는 팔리지가 않으니까 걱정이지요. 농어촌 공사에다 갖다 내놓으면 몇 년 걸리는지 압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처분농지 같은 경우에는……

○김선교 위원 2년 이상 걸려요, 신청해도.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현실을 제대로 알아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김선교 위원 예산을 좀 풍부하게 세워서, 그러면 그분들 땅을 내놓으면 감정평가가 됐든 해 가지고 사 주시면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는 게 농촌의 고생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선교 위원 그래서 장관님, 제가 질의 안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김선교 위원** 총리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 이 얘기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글썄요 그게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압니까?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이에요.

해수부장관님, 요새 오징어 배 제대로 돌아갑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국산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몰라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기억을……

○**김선교 위원** 그 배 다 대출 안 받고 그냥 산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대출받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그런 것 좀 살펴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 어업인들 힘듭니다, 지금.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있을 때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인들 어업인들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 일제 조사는 정말 제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한 거지 진정으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 부분들이고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적 부분에 대한 거라는 것을 위원님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 가지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김선교 위원** 세금 많이 내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거고요. 안 되는 건……

○**김선교 위원** 양평이 전원주택지로 유명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김선교 위원** 지금 한 면에 한 100세대 정도씩 나온 데도 있어요, 매물이.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이 그래서 지금 농지조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요. 그런 것 잘, 그래서 현장을 다니서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거기서 대를 이어서 농사지은 사람들은 좀 지원을 해 주지 못할망정, 그런 것을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아까 어기구 위원님도……

○김선교 위원 예.

경찰청장직무대리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선교 위원 양평군 경찰서 인구가 인근의 여주보다도 많은데 왜 3급지지요? 2급지·3급지가 있잖아요, 경찰서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1급지·2급지·3급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과천도 2급지고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 군 단위도 2급지가 있는데 인구가 13만에 가깝게 되는데 왜 3급지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치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살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이연희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만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단이 있는 오송과 세계 최대 최신의 HBM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총리님과 배경훈 과학기술부 부총리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함께 질의를 할 텐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2026년도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올해 예산은 R&D 예산이 총 3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예산으로 정부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 그리고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랄지 아니면 첨단 연구장비 GPU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연구실과 실험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이러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R&D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필두로 해서 대구, 울산, 광주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R&D 예산 속에서 그들 연구자들이 정말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 연구 공간을 마련해 주고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방위로 후반기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마침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 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 대학원생실의 기숙사 4인실 방 사진입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원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이 저런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총리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저렇게 방을 제대로 본 것은 오늘 사진이 처음입니다.

○이연희 위원 저런 곳에서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저런 사진을 여기 과기위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정부에 계신 국무위원들한테 공유하고 우리 R&D 투자의 좀 새로운 관점,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혹시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과학기술원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모두 방문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러세요? 기숙사도 가 보셨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숙사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 사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은 2인실도 지내기 힘든데 4인실에서 지내는 것이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다시 보여 주십시오.

저것은 2인실입니다. 저것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공유하는 세탁 공간, 그런데 다 저렇게 탈락돼 있고 누수가 되고 있고 곰팡이 썩어 있고 그런 환경을 직접 찍어 갖고 온 사진입니다.

기숙사 현황 사진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전체 9개 동이 있는데 대체로 2인실이 많고 3~4인실도 있습니다. 물론 1인실도 1개동에 돼 있는데,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을 텐데 사실은 학부생과 달리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력이고 그런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논문, 연구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인실에서 연구가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2인실에서 세계적인 연구는

문 그런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연구는 주로 실험실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정주여건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좋아야지 사실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연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연희 위원 광주과학기술원을 가 보면 화장실도 같이 쓰고 목욕탕도, 그러니까 샤워도 공용 샤워장을 쓰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을 텐데 해외 사례를 보면, 스탠퍼드나 MIT 보면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의 연구 공간들이, 생활 공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특징은 침대는 혼자 쓰고 거실이나 주방 이런 것들은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침대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쓰는, 거기서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들어와서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학술지랄지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논문도 나오고 연구결과도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대학원의 석사·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4인실에서, 군대 막사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연구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R&D 투자에 35조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장비나 시설, 슈퍼 컴퓨터 이런 것 중요하지만 결국 연구도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R&D 예산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정부에서도 해외로 나간 인재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많은 유인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환경들 그리고 정주여건들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한국으로 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과기원이 저런 연구환경을 계속, 이런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들어오는 데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재정 당국하고도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결국은 대학원의 석박사,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생활 공간, 연구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규정을 너무 빡빡하게 깐깐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1인실을 다 짓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그것을 못 해서 2인실, 4인실까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저런 데 미래대응기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이고 미래 관련한 과학에 대한 투자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고, 이런 부분들을 미래대응기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과학기술원 전체를 대상으로 석박사 대학원에 1인실 확대를 중장기적인 원칙으로 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장 전원을 1인실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 예산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 과정과 장기 연

구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1인실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석박사 연구자의 개인 공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의 노후도를 조사하는 것처럼 연구자 주거시설의 노후도와 그리고 1인실 비율도 좀 조사해 주시고 과학기술인재 확보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주거·연구 환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활관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별도의 정부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대학원 석박사 연구자들의 연구 공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R&D 예산의 확장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아까 사진을 보셨는데 우리 과학기술인재들의 육성 차원에서라도 현재 대학원에 있는 과학기술원의 주거 환경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수조사해서 장기적으로 30년·50년의 미래를 놓고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수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그런 계획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말씀 주신 4대 과기원은 사실 국가가 나서서 과학기술인재를 키우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여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보니까 무엇보다 누수가 돼 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처방이 필요해 보이고, GIST만 그런 건지 다른 상황들도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부총리님, 수십억 원짜리 연구장비를 들여 놓고 그 장비를 사용하는 석박사에게는 2명·4명이 사용하는 낡은 방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R&D 투자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져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에게 방 한 칸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기숙사를 넓히는 일이 아니고 그 방에서, 그 공간에서 세계적인 논문이 나오고 또 특허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이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연구장비에 투자하는 그런 나라를 넘어서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는 그런 과학입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총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로 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나라라면 반도체 그다음에 대해서도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7대 시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서 단연코 가장 성과가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헬스시장 규모가 2031년까지 무려 22조

달러, 한화로 한 3경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이 바이오를 반도체 이상의 핵심 국가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은 의약품을 통한 증상 완화에 서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본래 기능으로 복원하는 첨단재생의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근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카티셀(CAR-T Cell)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시장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23.6%라는 폭발적인 고속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곧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낡은 규제와 경직된 행정에 갇혀서 바이오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규제 탓에 해외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국민들이 연간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줄기세포 원정치료 계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일본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줄기세포 원정치료 받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유출되는 국부가 한 3조~5조 정도 이렇게 추정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기 위해서 한국이 아니라 해외, 일본에 나가서 치료받는 일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또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얼마 전 보도가 났지만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던 한 60대 여성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냈던 분들이 다 그것을 떼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오송에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특구가 있고 소부장 특구 이렇게 두 곳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추출과 배양 그리고 치료와 인허가 이런 것들을 오송에서 다, 특구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재생의료법이 올해 통과가 돼서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됐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이연희 위원 언제까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자가 면역세포나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암이나 만성통증으로 일본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근거를 확보해서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실험하기 위해서 특구도 만들고 시도는 하는

데 이게 특구 안에서 하는 심의가 있고 또 그걸 중앙정부에서 하는 심의가 있는데 이중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 중앙정부 심의 단계에서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한 그리고 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서는 특구에 심의 권한을 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특히 희귀암이나 이런 난치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정말 이게 매우 시급한 현안인데 정부의 이런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이번만큼은 말로만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 마시고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셔서 줄기세포 치료를 내년까지는 혁신특구에서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서 관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의지와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금 충북이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자체적인 심의와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다섯 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한 건이 임상연구가 8월 20일 날 승인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지역특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만약에 메가특구가 지정이 되고 또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험도를 좀 조절하고 권한을 좀 더 많이 갖고 심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또 충북위원회와 안전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희 위원** 총리님께서도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과 규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바이오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은, 작년 10월에 사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단재생 관련된 부분의 로드맵 관련된 말씀을 이미 주셨고 아까 복지부장관 설명에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이행 절차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관련된 부분은 중기부 때도 진행됐던 부분들인데요, 샌드박스도 그랬지만 규제를 진행했던 혹은 이런 것들을 시험했던 기업들이 어떤 일정으로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풀릴지에 대한 것들도 좀 가시성 있게 만들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좀 시간이 짧은 합니지만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수 변경 없이 하도록……

12시 넘어서 하실래요, 그러면?

(「빨리 먹고 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경남 창원 성산구 허성무입니다.

총리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총세출예산 604조 7000억 중에 집행률이 97.7% 인데요. 최근 5년간 가장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집행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총리님, 지난해 결산 결과 가장 뼈아픈 수치는 본예산 대비해서 부가가치세가 8조 4596억 원의 결손이 났고, 9.7%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내수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특히 하반기부터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재정도 충분히 흑자로 돌아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도 많이 좋아졌지만 골목 경기, 서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있지만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면이라서, 또 총리님이 중기부장관님을 하셔서 서민 경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피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데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수출 중소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 과정을 보면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나왔는데요. 저거 보면 작년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정부가 4월 4일 날 파면은 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때 수출입은행에 2000억 원을 출자해 가지고 10조 원 규모의 수출 위기대응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6조 원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하게 돕겠다는 취지였는데 새 정부가 6월 4일 날 취임을 하셨거든요, 인수위 없이 바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 달 지나서 8월까지 그때 당시 통계를 보니까 531건에 1조 5600억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또 대선이 있고 이 과정에 거의 일이 안 됐던 거지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던 초기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일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의 집행이 극도로 부진했고 결국 새 정부가 8월부터 힘을 내서 열심히 했지만 연

말까지 해 가지고 1137건에 4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66.7%입니다. 그래서 58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출자된 출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정부 예산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수출입은행의 금고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그때 평가는 이렇게 해서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건전성지표인 BIS가 15.3%에서 14.8%로 하락할 것이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수출입은행이 열심히 안 한 건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건지 보수적으로 한 건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 BIS 지표가 17.7%로 수직 상승을 해 버렸어요.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그러면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면 이것 관리 감독을 누가 하시나, 재정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실시간 관리 감독을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하여튼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중소·중견은 당초에 목표가 3조 원이었는데 3조 8000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실적으로는요. 그래서 대기업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해서 대기업 쪽에 지원이 적게 나가서 집행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연말에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재정부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까지 받아서 대기업 쪽에 2000억을 또 집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원래 3조 원이었는데 2000억만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을 보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편성한 예산이 실집행이 다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11조 원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금년도 거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금년도에는 상반기 실적이 중소·중견은 4조 5000억입니다. 여기에 7월 달에 교환율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8조까지 늘렸습니다. 당초에 7조 원에서 중소·중견은 8조 원 늘리고 그중에서 상반기까지만 4조 5000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중소·중견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올해는 충분히 예상했고 목표한 것 달성하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달성하도록 저희들……

○허성무 위원 반도체 호황 때문에 굉장히 수출도 잘되고 국민들 자부심도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산업들은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철강이라든지 석유 화학이라든지 이런 전통 대기업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소·중견들 어렵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 대기업도 AI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정을 좀 현대화 한다든지 또 특수 품목을, 특수강 이런 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산업도 다시 부활을 시키자. 그리고 중견·중소기업은 어쨌거나 하여튼 이 어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R&D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부총리님 말씀 든든한데요. 걱정은 이 반도체가 너무 잘돼서 착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잘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기후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오랜 숙원 과제였던 산업용 전기료 차등 요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4개 권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차등’ 자는 없고요, 산업용 지역요금제……

○**허성무 위원** 지역요금제. 결국은 그 지역요금제가 결과적으로 약간의 차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허성무 위원** 4개 권역 그리고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같은 권역 안에서도 전기료 차등을 두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이전을 위해 차등 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이런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장관님 고충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요금의 차이가 너무 적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거고 또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수도권의 기업들이 박탈감이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적정한 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요금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산업용 지역요금제안이 우리 지도와 함께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0%까지 그다음에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줄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남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후부가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허성무 위원** 그 옆의 것을 보면 나라별 산업용 전기료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지금 공장이 모여들고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kWh당 80원이고요 중국도 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2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2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특별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경쟁에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장관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저런 문제 때문에 전기료 인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지만 어떻게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제 남부권에 한 10% 정도 인하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8원 정도 인하가 되는 거지요, 최대로. 그렇지요? 또 그 내에서도 균형발전지수에 따라서 최

대치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최대로 했을 때 한 18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만 원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에 있는 한 특수강 업체는 작년도에 보면 전기요금을 200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가 최대로 절감이 되면 200억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큰 금액은 맞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원가가 1조 3330억 원이었습니다.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10% 깎았을 때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서 또 의미가 있는데 과연 1.5% 정도, 특수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으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크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 최종안에 이런 보완을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일단 내일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기후부가 검토한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내일 공청회 때 지역별 요금에 대해서 기후부가 생각하는 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들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우대지수까지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일단 기후부 안은……

○허성무 위원 그래서 장관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산업용 지역요금제 핵심 과제가, 기후부 안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매요금은 3개 권역으로 소매요금은 4개 권역으로 해서 남부권은 최대 10%입니다. 최저는 몇 %까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권역 분리 전력망 기준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우대지수 등급별 지역 차등 추진 해서 권역 내 세부 차등이 나오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도 최대치를 받는 데가 나오고 또 그것보다 더 낮게 받는 데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산업 시설은 지역에 가도 국가산단이나 또 여러 산단을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도시 중심으로 돼 있는데 행안부의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내에서 역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특례시 역차별 방지, 제조업 집적도 및 산업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역차별을 방지해 달라, 오히려 가점을 반영해 줄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친환경이나 저탄소 공정을 도입한 공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특례를 만들어서 추가 감면의 요인은 없겠는지 그리고 도매요금뿐만 아니라 소매요금에서 송전비용 또 전력자급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반영을 해서 더 반영해 줄 수는 없겠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바가 많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송전비용, 전력자립도 또 지역균형지수 등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위 지역별 유인효과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정책이야말로, 산업용 지역요금 제라는 이것은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아주 중요한 계기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오늘 또 차관님이 나오셨네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오늘 장관님이 꼭 계셔서 장관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미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린 내용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5일 날 KF-21 출고식에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런 발언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행사 또 올해 5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첨단 항공엔진 개발 가속화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현재 항공엔진 시장은 사실상 세계 3대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독자 기술로 진입해야만 우리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지역에 우리 경남만 빠져 있어서 항공·방산과 관련해서 지정해 달라는 지적 말씀을 드렸고 그때 장관님이 흔쾌히 검토하시겠다 했고 그 절차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행해 주셨는데 어느 날 순간 멈추었어요, 저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원래는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중까지 끝내려 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사유는 차관님이 더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왜 이렇게 막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송구스럽게도 5극 3특의 성장엔진 발표가 생각보다 좀 늦어지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 사업들 연계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같이 순연됐던 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2023년, 24년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허성무 위원** 그때는 5극 3특도 없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하지도 않았지요. 그때는 그때 심사 기준이 있어서 그거 따라 한 거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방산, 항공엔진뿐만 아니라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부분도 또 추가로 하기로 의결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절차에 따라서,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 빨리해 주셔야 되지 5극 3특 성장엔진 때문에 이게 늦춰진다면 이거야말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깔아야 각 부처에서 하기로 했던 것도 빠르게 검토가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기업들도 빨리 투자계획도 생기고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펼 할 것인지.....

사실은 올 예산에 반영이 돼야 내년엔 출발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지정이 안 됐는데 올 예산에 반영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관련 예산 부분도 이 특화단지하고 지정해서 하는 것 이외에 방산이나 항공과 관련한 예산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산업부나 관련 부처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고 또 그 외에 국회 과정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같이 꼭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이라도 반영을 같이 해 주시겠다니 고맙네요.

어쨌든 그 첨단 항공엔진 방산 부분 개발을 위한 지금 계획도 좀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7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지금 28년으로 늦춰지면서 내년 1년을 더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은 꼭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남도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중국과 100인승 정도의 중형 민항기를 공동 개발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조차도 국산화를 못 하고, 시작도 못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중형 민항기 다 개발해서 한 40대 정도 국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허성무 위원 그리고 대형도 넘어가려고 하고 또 국제적 수출도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급하고 빠르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천하태평은 아니신 건지..... 이게 반도체가 중요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속도전, 전격전 다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챙겨야 될 것 더 열심히 잘 챙겨 주셔야만 그 일도 더 큰 박수를 받으면서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답변 기대하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장 출신답게 산업 정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중력이 거의 바닥나실 시간인데요. 조금만 더 집중하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부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2018년 4월부터 8년 동안 전북 남원에서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7월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옆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와 조율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의전원이 생기게 되면 교육과 또 수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수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원에서는, 제가 지역을 돌아 보니까 전북 남원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소위 발각 뒤집힌 상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거는 2021년에, 여기를 보시면 남원에 오셨을 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공공의대는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것’, ‘권한이 생기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 주요 발언한 것도 보시면 청와대 정책 실에서는 정은경 장관께서 업무보고 한 그 이후에 ‘국립의전원 서울 설립은 복지부의 희망사항일 뿐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께서도 전당대회 할 당시에 ‘국립의전원은 남원 설립을 전제로 논의되어 온 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남원 국립의전원의 그 추진은 2018년도 2월에 남원에 유일하게 대학으로 설립되어 있었던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2개월 이후에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가 발 빠르게 그해 12월에 설립 부지를 확정해 주었어요. 그 흐름이 국립의전원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숙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장관께서 발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들쭉거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 캠퍼스에서, 본 캠퍼스는 중앙에 두고 지역 캠퍼스로만 남원에 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복지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에서 관련된 의견들을 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약속을 지키셔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살펴보니깐 일부 지방 사립 의대가 인가지, 그러니까 지방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교육을 인가지에서 받지를 않고 수도권에서 받게 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지방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편법·꼼수 운영을 통해서 이것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하는 본래 취지가 굉장히 약해져 버리고 결국은 형식적으로 거점으로, 지역의대는 그렇게 형식적인 거점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는 교육부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님, 총리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 지난 21일에 기획예산처와 함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발표하셨습니다. 교육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굉장히 수고에 경의를 표하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54년을 이어 온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어떤 면에서는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급하게 처리된 것이예요. 이를테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당사자들의 이런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전체의 의견수렴을 못 했지만……

○강경숙 위원 그건 사실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시다시피 7월 8일 날 우리 토론회 때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강경숙 위원 사실은 그 혼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님들이 다 모여서 긴급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너무 배제되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패싱당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 날 이 법안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도 설명을 들었고요. 하루 전에 청와대의 비서관이 20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21일 날, 발표되기 하루 전날 들어 보셨지요, 긴급행동이라고? 긴급행동이 360개가 넘는 교육 시민단체, 연대단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단체는 교사·학부모·학생·교육공무원·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계 전반이 다 망라되어 있는 연대체인데 거기서도, 하루 전에, 21일 날 발표하기 하루 전날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숙의가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대로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고 하는 그 상실감이 있는 것이예요.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2012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4년 동안 오롯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문제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 전부터였습니다.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20년 동안 지난하게 제기되었던 사안이었구요. 특히 우리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야 그동안 진보·보수 정권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돼 왔던 사안 아닙니까?

○강경숙 위원 많이 말씀하셔서 나름 논리가 있으신 표현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육부와 충분히 의견 협의를 해 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거시적인 방향이 있었어요. 나름의 담론도 있었는데 주로는 국민의힘 같이 이렇게 보수 정권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실은 거시적인 담론이나 방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인 어떤 모델이 나온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는 제가 장관돼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강경숙 위원 잠깐, 답변할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어제 오후에 예고되었는데 예고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보통 행정절차법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40일 이상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5일 이내로까지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예고가 되었던데 이렇게 부수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회 패싱 아닙니까,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차피 국회에서 심사하실 것 아닙니까?

○강경숙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9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연속 4년 동안을 교육위를 하셨습니다. 박홍근 장관님께서 사실 4년을 교육위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육재정은 경직성 경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인건비는 60% 이상이고요. 여기에 학교 운영비까지 확장해서 보면 80%가 넘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지요. 그림 보시면, 교육재정에서 시설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서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공사비 단가도 매년 오르구요. 노후 학교시설들이 많아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장관님의 지역구이신 중랑구 학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하지요.

○강경숙 위원 예, 당연합니다.

또 계속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내용대로 하면 교부금 개편 이후에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3.2조 원이 증가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3.2조 원이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상승분이 2024년 결산에서 1년 사이에 전년도보다 2.3조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가면 인건비 상승이, 2.3조 원이 저절로 그냥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3.2조 원이 증가해도 일단 2.3조 원이 빠집니다. 그런데다가 담배소비세가 지방교육세로 전입하는 지방세법 조항이 올해로 일몰돼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1.7조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에서 2.3조 원 빠졌지요. 거기에 지금 1.7조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4조가 되어요. 그런데 올해보다 3.2조 원 증가한다고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3.2조 원이 증가해 봤자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일몰되면서 오히려 8000억 원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경직성 경비에서 지출을 줄일 수는 없을 테니까 고스란히 이것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예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 운영, 학생이 줄었는데 왜 교원이 계속 늘어나느냐, 방만한 재정 운영 아니냐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잠깐 PPP 보시지요.

박홍근 장관님께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셨던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입니다. 너무나 좋은 취지입니다. 보십시오. 방과후에 학교를 잘 운영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그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굉장히 따뜻한 법안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 법안대로 매년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가 당시 매년 600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총 예상 소요액은 약 3300억 원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기초학력 보장법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사려가 깊으신 법이었어요. 20대에서 발의하셨고 이것이 5년 동안 거의 5조 가까운 비용이 드는 법안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것이, 이렇게 발의하신 법안들이 국가재정을 좀먹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지는 법……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좀 답변해도 됩니까?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돌봄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모두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 많이 줄어도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법안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혹시 지난 5년 동안 학교에 인력이 얼마나 증원되는지, 교사가 아닌 교사 외의 인력이 얼마나 증원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경숙 위원 그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강경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좋습니다. 우선 그동안 교육재정은 불안정성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국세 연동구조로 인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더 안정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번째, 지금보다 교육재정을 줄이지 않겠다, 해마다 그동안 평균 20년 동안 추세가 있는데 그 정도는 거의 보장하겠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강경숙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관님, 3.2조 원이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3000억 원입니다. 아니, 8000억 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은 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더구나 저희가 두 가지 장치를 더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전년도보다 교부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내국세가 아주 악화됐을 때는 오히려 핑크가 났었지요. 불용을 했지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는 장치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돕겠다,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강경숙 위원 장관님,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 외에도 원래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마는 또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향후에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강경숙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재정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러셨지만요. 거기에는 칸막이가 나뉘어 있습니다, 4개로. 그런데 거기에 교육·인재 계정 그 어카운트에서는 국가 정책상 시급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요건이 까다로운지 그 실효성을 저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지금 기금으로 묶어 두셨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운용재량에 따라서 집행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옮겨 갈아타야 하는 텐트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부금 보십시오. 그동안 2005년도부터 20년 동안 10% 이상 급증한 게 5번인데요, 전년 대비 감소한 게 6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안정성을 유지하실 겁니까?

그리고 내년도 교부금 규모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올해가 75.7로 잡는다면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78.9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부터 보시면 84.3, 90.1, 92.7로 계속 올라갑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고정 재정이 교육에서는 엄청 많아요.

장관님한테 제가 시간관계상……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감들이 무슨 펀드 만들어 준다 이런 방만한 집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국민도 감사원도 이것은 다 고쳐야 한단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국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강경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크지가 않아요. 대다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감들이 그런 것이지 전체 예산에서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이주배경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든지, 이를테면 이주배경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3만 3000명으로 전년도보다 20%나 증가해 버렸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학생들도 굉장히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준다 그래서 학교 수나 학급 수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폐쇄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는 그 기조에는 굉장히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금에다가 의존하게 되면 이것을 통째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침에, 오전 11시에 교육감님들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이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부금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교육청으로. 지금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건비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해서 사실은 학령인구 감소분의 0.4만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플러스 0.5 부분까지 다 감안하여서 5%까지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해외에 나가셨는데 교육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듣는다, 우리나라 부존자원도 부족하지만 사람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K-컬처, K-푸드 이렇게 유명한데 세계적인데 이제 K-교육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생 수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전체 학생 숫자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789만 명입니다. 유치중등 학생들 555만 명이고요, 대학생은 234만 명입니다. 그래서 789만 명인데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51만의 유치중고 교원들 그리고 23만 교수들이 있습니다. 교육계 가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4년 동안 이어 온 제도를 몇 개월 만에 똑딱 처리하는 것, 국민주권정부라고 보기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께서 교육을 망가뜨린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평가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AI 국가전략, 인재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AI 경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의 모델, 독과모 지금 3개 기업까지 하셨는데 그게 모델을 잘 만드는가로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AI 경쟁은 어떤 면에서는 모델 성능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스템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데이터, 모델,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보는 풀스택 AI를 내세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모델, 칩,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3대 강국에 드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저희가 3대 강국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기술력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분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2025 글로벌 AI 인덱스를 보시면 종합순위가 5위입니다. 그런데 인재전략은 13위예요. 인재전략 저 점수 밑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20점이었는데 25년에 12점으로 점수가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부 투자는 크게 늘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 지원예산은—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7000억 원에서 1조 4000억까지 두 배가 늘고요, AI 지원예산은 3조 3000억에서 9조 9000억 원으로 늘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AI 전체 지원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프라에 비해서 사람과 인재를 키우는 부분이 소외되지 않는지 살펴 봐야 될 건데요.

8월 6일 자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면 글로벌 AI 허브 구상 공염불이 된다는 내용의 칼럼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 2026(인공지능의 약속)에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 AI 산업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AI 핵심 인재가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핵심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서 2011~2024년 동안 1716명이 순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재가 이렇게 유출되고 인재 양성이 되지 않는데 AI 3국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또 지속가능성 있을까요? 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총리님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재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하고 또 AI 인재 육성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말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인재라고 하는 인력 규모 자체가 워낙 적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모두 다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들을 쓰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과기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예 현지에 나가서 찾아오거나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 주신 것들 잘 듣고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교부금 관련해서 주신 말씀들은 초등 부분 그리고 중고등 부분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특별하게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은 과기부에도 있고 또 여러 부처들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군위원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총리님을 비롯한 각 국무위원님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님, 두 번째로 국방부장관, 세 번째로 기획예산처장관, 네 번째로 재정경제부장관,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과 민공항은 법적이나 회계적으로나 별도 사업이지만 동일 부지에 건설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부지 조성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편성한 예산·결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 대비 집행액이든 아니면…… 집행액은 거의 없고, 물론 올해도 아마 마찬가지로 겹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군공항 사업이 진척돼야 민공항 사업도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대식 위원 단독 예산 집행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국토위에서나 직접 또 TK 신공항 이전부지에 찾아오셔서 TK 신공항을 위한 TF 팀을 만들겠다 또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장관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재원 확보라든지 전담 TF가 정말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대식 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TK 신공항 문제는 저희 국토부 주관해서 민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군공항 관련해서 기부대양여로 되어 있는 이 점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지금까지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는 성과도 없고 할 의지가 그냥 거의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총 16단계인데요. 사실 13단계까지 와서 지금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 문제에서 딱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지만 10년 이상의 사업과 10조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 기부대양여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에는 굉장히 난관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대식 위원 그러나 대구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동안 지금 광주도 완전 속도전을 넘어 가지고 전격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해서 일거에 해결을 했고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마당이고.

장관님께서 TK 신공항 사업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위대한 도전이라고까지 2025년 9월 7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대한 도전을 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을 비롯한 타 지역의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그 민항에 대해서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군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대양여로 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풀어나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이 대구신공항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토부장관으로서의 답변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관부처는 국방부이지만 국토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때까지 장관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봤을 때에는 말씀만 그리하셨지 크게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월 11일 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면 5국 3특 중심의 지방 국토 성장을 언급하면서 TK 신공항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까지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TK 신공항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지금 선도를 하고 있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균형발전을 아예 포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제대로 공정하게 정부의 행정이 국가에 골고루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국방부장관님, 아마 국방부도 지금 국토부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장관님, 제가 인사청문회 때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 때라든지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께 강조를 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은, 장애요인이 이전사업비 확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부대양여 사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공감하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주관 부서로서의 성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도 대구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자기금 용자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또 그런 방책이 없는가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기부대양여가 원칙인데 만약에 기부대양여가 원칙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하면 국가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강대식 위원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방법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강대식 위원 제가 광주하고 대구의 지금 나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지금 광주는 예비후보 지정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이고, 이미……

○강대식 위원 됐습니다. 좀 더 들어 보시고 뒤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께서 애를 안 썼다, 노력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토록 수많은 시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지금 체감되는 것은 성과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문제의식만 계속적으로 양산해 냈다,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위원님……

○강대식 위원 대구는 악착스럽게도, 억척스럽게도 정상적인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의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고 광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변칙적인 예외와 특혜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뒷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광주 군공항의 종전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다음에 잘 알기 위해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기 착공을 위해 가지고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선양여를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만 하면 대구공항이든 수원공항이든 광주공항이든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독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 딱 짚어서 선양여 혜택을 받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사업의 특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도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당연히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식 위원 아니아니,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 한 곳만 손을 대면 되는데, 지금 그것만 하면 대구, 수원, 죽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강대식 위원 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 딱 짚어 가지고 선양여를 하겠다,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은 이전 자체가 성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게 먼저 선양여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도 있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광주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대구도 대구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하나만 손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구도 적용이 되고 수원도 적용이 되고 광주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유독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 꼭 집어서 개정안을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광주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충주로 임시 분산배치 한다고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전비용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분산배치입니다, 분산배치.

○강대식 위원 분산배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전비용 추계를 한번 내 봤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추계는 냈지만 이건 군사 보안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입니다.

○강대식 위원 제한적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재산이 약 한 8조 4000억 규모이고 그 비용의 한 20%만 하더라도 약 1조 7000억입니다. 물론 임시이전 하는 데는 활주로 비용은 아무래도 제외

되겠지요.

임시이전 비용이 제한된다고 이래 했는데 말 못 하는 이유는 뭘니까,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 게 다 드러날 건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계산 방법하고 우리 군에서 합참이나 공군에서 책정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임시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는 서산·예천·중원 비행장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이글루랄지 여러 가지……

○강대식 위원 그러면 임시이전 예산은 내년부터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2027년도의 정부 예산안에 넘어오겠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부안에 아마 일부 탑재될 겁니다.

○강대식 위원 아직까지 총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기부재산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 단위의 매몰비용이 아마 소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매몰이 아니라요 그것을 재활용하고 또 기존에……

○강대식 위원 뒤에,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왜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양여를 하게 되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원형지로 LH에 판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맞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기부재산이 약 8조 4000억인데 현재 선양여로 양여재산이 관계 기관인 국방부라든지 LH에서 약 4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4조 4000억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니까, 어떤 돈이 투입되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안보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게 왜 안보사항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내용 자체가 보안사항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게 전부 세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세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민의 알권리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안사항이다? 아니, 우리가……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위원님도 국방위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강대식 위원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비밀사항이고 국가의 보안사항 이런 것 같으면 이 자체를 몇 조다, 몇 조다 이런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겠지요, 제가.

○국방부장관 안규백 양해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추산이 그렇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갔었을 때 종전부지 개발비를 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이 예산이 약 한 2조 4000억이 넘는데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더라도 LH가 떠안게 되고 LH는 다시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는 2조 4000억의 비용을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 되면……

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전 후보지 무안군에 지급해야 할 국가재정이 수천억인 것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렇다면 개발부담금 3500억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이를 총합해 보면 광주는 지금 최소한, 본 위원이 그냥 아우트라인, 큰 틀에서만 이야기해도 약 7조 원이 혜택이 가게 되는 겁니다. 특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시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 말의 흐름이 쭉 온 걸 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가는 거 보면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공군하고, 시간이 없어서, 공군 공동운영기지가 있지요, 광주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COB.

○강대식 위원 이것을 그러면 만약 분산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측과 그 분야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또 현안에 대해서는 만나서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제가 볼 때는 포괄 협정은 잠정중단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제가 지지난주도 콘퍼런스 갔다 왔고요. 소통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광주 군공항 내의 미군 공여구역 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협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협상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한미 간 합의라는 것이 미군 공여구역 이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군공항이 건설되기까지 임시폐쇄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임시입니다, 임시.

○강대식 위원 임시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는 32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다시……

○강대식 위원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될 텐데 현재 광주 군공항 내의 미군 공여구역을 이전할 곳이 없어 아마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관께서 물으면 또 이거 국가 보안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못 하겠다가 아니고요.

○강대식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분산……

○강대식 위원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분산배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대식 위원 그러면 미군 공여구역 폐쇄에 대해서 미군도 동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타임라인까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무안에 건설될 새로운 군공항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32년 12월 달까지 완공이고요. 32년 12월 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식 위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개항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32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지금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러는 마당에서 이것도 제대로 우리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예상대로, 로드맵으로 못 갔을 때는 굉장한 공백도 우려가 되고 국방 공백도 우려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사료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지금 26년도 아십니까? 26년도이기 때문에 32년 12월 달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그러면 마저 답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강대식 위원님, 박홍근 장관님 이야기하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앞서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알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일반군사시설이 지방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30년 동안 모든 시설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법에 의무화돼 있고요, 기부대양여가. 다만 진행 단계와 개발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가 먼저 출발했지요. 그래서 대구는 이미 이전 후보지도 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합의각서도 체결돼서 대구시가 사업시행 주체로 딱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SPC를 구성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서 지금 몇 가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는 이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새 국가적 차원에서 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 상황 변경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군 전력도 임시 이전하고 그러면서 기부대양여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시와의 협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임시 이전을 하더라도 국방부하고는 당연히 그 이전시설들을 국가재정을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좀 전에 우리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 잉여재산가치 하락,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면 훨씬 더 자산가치가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가치가 하락합니다,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이걸 결국은 광주시의 뜻보다는 국가적 산단을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다 보니 그러면 그 가치 하락에 따른 초과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법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걸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대구 군공항 문제는 이거하고 이런 진행 단계나 개발 여건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광주가 그렇게 법 개정이 되었을 때 대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단계에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겠다라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계속 저희가 상의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번에는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광주 군공항은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보면 파주 LCD도 결국은 군부대였습니다. 부산의 센텀시티도 결국 군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광주 군공항이 250만 평인데 결국 삼성하고 이런 반도체가 들어서려면 신속한 결정으로 평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구 군공항도 약 500만 평쯤 됩니다. 원주의 1군사 부지도, 1군사 부지가 떠난 게 보통 한 210만 평 이상 됩니다. 원주의 1군사 부지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보니까 그게 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성 여부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부대양여 방식을 그대로 고집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군부대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령 태릉선수촌 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례라는 것도 결국은 군부대였기 때문에 신도시를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군부대의 문제, 군의 토지 문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건가를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으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읍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芝源 위원** 반갑습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위원입니다.

총리님,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장이셔서 더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朴芝源 위원** 조만간에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성안이 돼서 위원회에 상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들 의견 최대한 많이 수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대응기금 얘기가 어제오늘 많습시다. 어쨌든 반도체 호황 그리고 주식거래 활성화 덕분에 세수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 재정 여력을 네 가지 분야로 청년 그다음에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이렇게 네 가지 계정을 만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호황의 결실을 단기적으로 또 일회성으로 소모하지 않고 장기 경쟁력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그중에는 일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수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저 또한 몇 개 나오는 우려들을 같이 전달드리고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분야 그리고 농어촌 분야에서는 미래에 대응을 하겠다고 현재를 깎아 먹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분야 관련해서요, 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가는데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면 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빼고 나서 19.24%를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조가 늘어나면 2조 가까이 교부세가 줄어들고 50조가 전입이 되면 10조 가까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지방이라는 계정 항목을 넣으시니까 어차피 지방에 들어가는 재원은 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당연히 지방정부에서는 포괄 재원이나 일반 재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정해서 주면 그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지방 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니까 순감 방지를 명문화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방교부금의 경우에는 지방 전체 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감 방지 원칙을 법안에 명문화하실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장관님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부금과 교부세 모두 지난 20년을 봤을 때 불안정성, 급등락, 내국세와 연동되면서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의 경우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점이 있습니다.

교부세의 경우는 사실 제가 향후 기금 적립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교부금과 달리 교부세는 실제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기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호황에 의한 증대 세수가 초과 또는 추가 세수가 많을 때의 초기 단

계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지방은 지방대로 물론 그것까지 다, 호환 일 때도 다 연동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실제 내년은 물론 당연히 올해보다 올라갑니다마는 그 이후, 내후년과 그 이후 단계는 매우 상황이 괜찮습니다, 지방의 교부세도요. 그다음에 그걸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우대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이 좀 더 멀수록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 계정이라고……

○**朴芝源** 위원 총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포괄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특회계 안에 포괄 계정이라고 있는데요, 포괄 보조사업들을 넣는 자율 계정 이걸 통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지방이 많은 사업들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소위 지방 계정을 미리 기금 안에 두는데, 그리고 지방 계정 안에서도 저희가 일반 재원 성격, 교부세와 같은 겁니다. 그것도 내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액을 저희가 넣어서 행안부를 통해서 교부세처럼 그렇게 교부를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알겠습니다.

현행 교부세 산식 대비해서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전체 지방 재원이 줄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가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지역,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굉장히 낮는데 국비 주겠다고 해서 보조사업 해 버리면 지방비 매칭시키느라 여력이 없는 곳은 사실 국비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도 매칭할 지방비가 없어서 국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역설,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전년도 보건복지 결산 내역 같은 걸 봐도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포기하는 것, 예산 불용되는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로 저희 지역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저희 새만금 수변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2028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할 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입주할 때 필요한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려면 총사업비 한 450억 정도가 드나 봐요. 그러면 사실 원래는 이걸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조성하는 신도시 기반시설이니까 저는 국비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방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부담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자체의 세입이 일년에 1000억도 안 되는데 총사업비 450억짜리 건물을 50%가량 매칭해서 부담하라고 하면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김제뿐만 아니고 전국 전역에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지방우대지수 이런 게 저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해서 가령 보조율을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지 아니면 공모에 어떻게 가점을 주겠다는지 이런 산식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게 보이지를 않아서 조금 급조된 아이디어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명문화된

지침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지 이런 검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행안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행안부장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芝源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또 도시화된 정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전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법령으로 정리를 해서 누구나 그 기준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방우대지수가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차등 적용이 명문화가 되고 적용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 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공개 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개 산식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리해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산식을 적용해서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아마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즈음에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朴芝源 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행안부로부터 전해 받은 우대지수에 의거하여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라는 내년에는 우대지수를 적용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깎아 먹지 말라라는 분야가 지방 중에서도 사실은 농어촌 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기본소득 말고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농어촌 분야에 관련되는 활용처는 전혀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요. 사실 지금 반도체 호황도 그렇고 어떤 개방경제, 수출을 하면서 그 편익은 우리 국가 전체가 누리고 있는 건데 십수 년 이상 FTA나 이런 것에 의한 피해를 농어촌에서는 오롯이 감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어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같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보니까 전년 대비 6조 이상, 거의 1.5배 이상 더 걷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추경에 보면 목적세인 농특세 순증액이 6조가 되는데 농업예산은 한 3000억밖에 안 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거래를 많이 해서 농특세가 많이, 몇 조씩 걷힌다는데 농어민들이 ‘왜 이렇게 우리 예산은 돈이 없다고 안 주느냐’ 이런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미래대응기금에서 또 가져가서 쓴다더라라고 하니 농어민들은 이것을 그냥 회계 계정과목 간의 전출·전입을 통해서 어떤 일반재정의 대체 재원으로 우리

농특세를 써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원칙 먼저 확인하고 가면 목적세가 건렸으면 당연히 그 순증액은 농어촌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농특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농어업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정 당시에 전망치인 농특세가 있을 텐데 그 상회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적인 농어촌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같은 것을 세우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의 수치 이런 것은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공개할 겁니다마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난 것처럼 농특세 중에는 농어촌기본소득으로 기본적으로 활용할 정도로 미래기금과 연계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농어업 분야의 랜드마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혁신하거나 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런 빈번한 적자로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는 여러 농업 관련된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 간에 여러 가지 전출 이런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 등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상생협력기금은 아까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별도로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아까 지방도 마찬가지로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방 전체 재원을 줄이지 말아 달라라는 얘기처럼 농특세가 순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일반회계의 농어촌 예산을 줄이지 말아 달라 이 얘기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내년도 농업 분야, 농림 분야에 대한 총지출을 하여튼 제가 잘 살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개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미래대응기금 계정 중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반도체, 퍼지컬AI 그리고 AIDC 이렇게 있는데 사실 반도체만 굉장히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고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퍼지컬AI는 특히 많이 소외되는 것 같고 AI데이터센터도 그다음으로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부지, 전력 계획, 용수 계획, 예산, 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퍼지컬AI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또 AI데이터센터도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공장 규모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사실 투자액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회사의 높은 주식이나 여러 요소들 때문에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퍼지컬AI나 AIDC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새만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퍼지컬AI 관련된 부분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전북의 퍼지컬AI 관련된 센터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기부와 산업부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 데이터 포맷이나 모으는 작업들을 피지컬AI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 넣는 그런 과제들이 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C는 관련된 부분의 지역에서의, 이미 어느 지역에 AIDC를 넣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영역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수백조 이렇게 너무 큰 단위의 금액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芝源 위원** 총리님 말씀대로 새만금 지역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준비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9조를 투자하면서 거기에 AI데이터센터 짓고 그다음에 1년에 3만 대가량의 로봇 부품·제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고 그것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전력과 용수 이런 인프라 계획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 관련한 것 아니면 새만금에 들어갈 AIDC 관련해서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 부분은 지금 총리실에서 사실 새만금 관련된 별도 TF 가지고 현대차와 이야기하고 이미 그 부분은 전체 타임라인과 계획표 일정들이 좀 나와 있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보일 때 좀 덜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의원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9년에 완공해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얼마며 그때까지 한전에서 얼마큼 계통 연결을 시켜 줄 수 있으며 ESS는 어떻게 붙일 것이며 PPA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비상전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리고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 계획표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朴芝源 위원** MP 변경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사실 RE100 산단을 조성하기 굉장히 적합한 지역인데요. 정부에서는 RE100 산단 조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고 선도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산지소형 산업 구조인가요 그것을 구축하는 데 저는 새만금이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MP 변경안에 그런 RE100 산단 조성과 관련된 연관 산업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포함해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RE100 산단 지정 관련해서는 지금 근거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이 마련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새만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안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말씀드렸는데 쓰는 돈이 누수 없이, 예산 낭비 없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수 낭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총리님, 투수블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냥 자료…… 처음 들어 봅니다.

○朴芝源 위원 저도 최근에 사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비가 오면 보도블록의 물이 안 빠지면 도시에서는 침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빗물을 블록으로 빠지게 해서 밑의 흙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도 방지하고 열섬도 방지하는 일종의 기후대응시설입니다. 이게 물순환이나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도 그렇고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수거를 해 봤어요. 시공 직후의 현장 세 군데를 가서 다 다른 현장의 블록을 수거해서 성능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조달청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납품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아예 미달하는 못 쓰는 정도 수준이 나왔고, 사실은 이걸 당장 교체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한 달밖에 안 쓴 블록인데, 원래 5년을 써야 되는데 한 달밖에 못 쓰고 바로 교체해야 되는 수준으로 등급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에서 전부 이렇게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블록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 부실이라고 보이는 게 저희가 어떤 투수블록 관련된 예산, 정부나 지자체에 관련된 예산내역, 집행내역을 달라고 해도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자료를 못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처럼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투수블록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보도블록 설치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서울시가 조사를 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조실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 부분의 조사에 대한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朴芝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朴芝源 위원 이게 납품 절차를 보면 조달청에 등록을 할 때 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등급이 올라가고 등록이 되고 나면 당연히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등급이 다르게 나온 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원래의 시제품, 조달청에 등록할 때의 시제품과는 다른 불량제품을 시공을 했다,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사실 더 나쁜 경우로는 공인 시험검사기관과 유착이 있어서 등급을 허위로 기재했다든지 검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겠으나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다면 조달비리에 대한 감찰도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芝源**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기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경제실이 지방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다루고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투수블록은 재난 대비를, 재난에 대비한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감찰 기능과 그리고 지방계약의 적정성을 따지는 두 부서로 하여금 전국에 시공돼 있는 곳들을 조사해서 총리실에도 보고를 하고 의원실에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아까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희 국토부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행안부에서 조사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국토부에서 직할해서 하는 곳은 저희 국토부가 조사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총리님께 보고드리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또 국토부가 하고 있는 그 투수블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총리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감사합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입니다.

투수블록 같은 경우에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달청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의원실에 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숙 총리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투수블록 얘기하니까 행안부장관님이 즉시 조사한다고 그리고 국토부장관님도 즉시 조사한다고 그리고 조달청장님도…… 팀워크가 좋은 정부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동작울의 나경원 위원님 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보임이 됐는데 출장 일정이 있어서 미리 사전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 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예결위 위원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라가 거덜 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재정파탄 선언을 하셨는데 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 이것 대한민국 국가부도 선언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렇게 재정이 파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국가채무가 결국…… 우리 2차 추경 해서 결국 국가채무가 21조 늘고 그리고 단 5개월에 이자비용만 2885억 인가요 이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차별하게 빚내기 하면 나라 거덜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가 아니라 ‘미운 놈 정말 죽여 버리자’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작년에 검찰 특활비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 갖고,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미운 부처라든지 이런 쪽을 혼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결국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있으면서 법을 민주당이 너무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제 예산마저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갈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어도 재정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한번 파탄 나거나 적자가 계속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정부의 국가의 채무 또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불가역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미 시간이 시작이 됐군요. 장미란 사건의 피해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명복을 빌고 또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통영시 폭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조금 선포는 하셨지만 조속히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지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정성호 장관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려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앞으로 책임은,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판사님도 수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보신 분들 많으시지요?

정성호 장관의 이 영상의 말씀, 결국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 결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 걱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저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반대하시는 분들, 사법체계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무위원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개별적으로 물어 주십시오. 전체에게 다 질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제가 찬반을 여쭙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게 여쭙보시면 안 되지요. 일문일답입니다. 국회법을 한번 보십시오.

○**나경원 위원** 일문일답인데요. 일문일답인데 일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장관님, 찬성하십니까,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최종적인 말씀까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회가 결정하면 본인은 수용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나경원 위원**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손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 굉장히 거북해하시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러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금 이미 우리가 드러난 장미란 실종 사건

같은 것을 이렇게 유아무야시킨다든지 또는 돈 1000만 원 받고서 참고인으로 피의자를 둔갑시킨다든지 또는 경찰의 아들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쾅쾅 숨기려고 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온 사건은 고 채단비 양 사건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또 무혐의 종결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리님,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들어 보면 모든 문제가 다 경찰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나경원 **위원** 아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성숙** 저희가 경청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부분들은 검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돼 오고 있던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정치에 관여가 없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총리님, 문제는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씀 아시지요? 보완수사권 부분은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산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총리실 밑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나경원 **위원**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8500만 원 투입해 갖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것도 예비비로 긴급하게 투입해 갖고 전문가 의견 수렴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보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거기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나 전문가 의견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 의견의 대체적인 의견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겠지요. 다수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차 보완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차차 입법하겠다. 국민이 실험 도구입니까? 그러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 뭐 8대 사건인지 7대 사건은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해 입은 국민들, 그동안 이렇게 죽음까지 이른 국민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검찰이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발언 반대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전부 동의하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각자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말 건의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킨 여러분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영상 다 녹화 된 줄 알고 저렇게 나와서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총리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헌법상 제도와 헌법상 가치에서 삼권분립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법부를 한마디로 법으로 협박하고, 저는 거리의 조롱거리로 삼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으로 사법을 협박한다는 것은, 법왜곡죄 신설된 것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 올 4월, 이제 시행된 지 약 한 4개월 됐습니다.

일선 판사들 몇 명이나 고발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몇 명이나 고발됐는지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경원 위원 529명의 판사들이 고발됐습니다. 판사 숫자가 3248명이니까요 판사 6명 중에 1명씩 고발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법왜곡죄는 역시 대한민국을 고소·고발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법왜곡죄가 신설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발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호 고발된 1호 피고발인? 잘 모르시나요? 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나경원 위원 어디 계시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뒤에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기관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요구받은 적?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왜곡죄 같은 것이 신설돼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정부가 사법을 법으로 협박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대법관 제청으로 크게 충돌되었습니다. 제청권의 의미가 뭘까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계속 설명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지 자꾸 설명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리의 답변을, 일문일답을 듣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들을 올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청권 관련해서.

○나경원 위원 이게 반드시 사전 조율하라고 헌법에 써 있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오늘 위원님들 주고받으신 것들에 대해서 본다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위원님들마다 다르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나경원 위원 아니,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헌법에 사전 조율하라고 돼 있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렇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 받으셔서……

○나경원 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요. 싫으시면 거부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데요 저는 관행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은 이야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관행을 싸그리 다 망가트리고 마음대로 법 만든 게 이재명 정권인데 무슨 관행을 지금 얘기합니까?

저는 대법원장 사퇴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이번 이 일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실은 작년에 보면 김민석 당대표의 형이 이끄는—김민웅 씨지요—촛불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현수막이 지난해 추석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가장 처음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삼권분립의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대법원장을 끌어내겠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또 이 말을 하셨어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나경원 위원 당대표 말씀 말고 대통령 말씀. 기억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냥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가 심각하다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합니다.

○나경원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한성숙 전체적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최근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저는 여권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어라 하고 지금 협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니 그 전 3월에 발효하는 대법관 4명 제청권에 올해 2명, 6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협의 안 하고 제청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104조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 해석의 문제다? 답은 못 하겠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탄핵은……

○나경원 위원 104조를 해석해도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헌법 위반이 있습니까? 법률 위반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 온 신문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이다. 결국 이 재판을 갖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건데요. 저는 대통령 재판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대통령 재판을 중단했을 때 헌법 84조를 구체적으로 든 재판부도 있었고 헌법 84조 언급 없이 취지로 헌법 84조를 언급한 그런 재판부가 있었는데요, 결국 불소추특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 7월 9일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소추특권은 축소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소추특권은 소추를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하면서 수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 수사가 되면 반대로 재판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모두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가 이렇게 지나친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사법부로서는 최근 7월 9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각급 법원 판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재판의 진행 여부는 소송지휘권의 문제로서 각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소추특권을 소추 부분에 한정해서 해야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대법원 판결은 수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읽으면 불소추특권은 소추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한히 연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의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우선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야간에 작업하다가 사망했던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종로구에서 있었고요 대전 동구에서 야간에 혼자 일하시다가, 영천에서는 새벽에 세 분이나 사고가 났습니다.

통계를 좀 봤더니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망자 수가 최근에 5~6년 사이에 백칠십여 분이나 돼요. 이게 왜 이런가 봤습니다. 언뜻 봐서는 위험한 일이니까 낮에 해야 되고 3인 1조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세 곳을 봤습니다, 종로구·대전·영천. 다 조례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살펴봤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앞으로 다시 가지요. 주간작업 원칙을 절반 정도 준수하지 않고 있고요. 3인 1조 작업 원칙은 또 미준수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행안부장관님, 조례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바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조례까지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시는데 최근에 임금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맨 아래 보시면 임금조차도 과소반영, 과소지급한 경우가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임금현황을 언론에 나온 걸 찾아봤더니 11년 차 환경미화원 임금이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장관분들, 국회의원들 1억 5000~60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총리는 더 많으시고 또 대기업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정질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정받는 그 내용에 관한 질서가 과연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냐, 우리가 K-컬처, K-푸드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K-인정질서는 어떻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인정받는 게 돈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나가면 또 우정, 연애, 결혼 등등 있는데 한 영역에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몰려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골고루 나눠져 있지 않지 좋은 사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법원에 목숨 걸고 재판한다는 판사님이 계셨습니다.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산업재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일종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에 송구한 말씀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목숨은커녕 영혼이나 염치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복지부동 행정, 무책임한 정치, 먹튀 사업 등을 얘기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중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분을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장관님, 차관님도 마찬가지겠지요. 대기업 회장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환경미화원분들 한 달 파업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운전해 주시는 분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분들이 한 달 파업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회가 마비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 차례나 탄핵소추돼 가지고 직무정지 수 개월 당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국무위원도 장관이 직무정지됐는데 차관이 잘 알아서 하시지요. 지금도 많이 자리 비어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장외 투쟁하느라고도 일 안 하고 원구성 안 된다고 일 안 하고 그래도 나라가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재벌들도 수조 원대 이혼 재판을 하니 마니 해도 회사는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인정질서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선진 외국에 나가서 물어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문직들을 선망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사회에서 연애를 하거나 우정을 나누거나 결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이나 성적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리님, 객관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지위와 고하에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최근 들어서 목숨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 행정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최기상 위원** 질문 세 가지를 저는 던져 봤습니다.

근거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고 동시에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근거가 있나? 그리고 수많은 재벌가에서 연봉 얼마에 성과급 얼마 해서 수백억씩 받았다고 하는데 늘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만한 계산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정질서를 자랑할 만한가, 대한민국이? 세계 3등 국가가 되겠다는 나라에서 자랑할 만합니까? 그리고 이런 질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무총리 한성숙**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저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봉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훨씬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나 위치나 하는 것들이 좀 더 무게로 느껴져야 하고 이것이 가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금 더 자제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기상 위원**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신규 판사를 뽑는데 법원장이나 검사장 자녀들이 판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 자제들이 판사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지요, ‘판사를 30년 하니까 좋으신가요?’. 좋다고 하시면 ‘그 좋은 것을 왜 본인 자녀한테 세습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지요’.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힘든 걸 왜 자식을 시키세요?’. 그런데 여전히 판사의 자리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 영향권에 있는 친구들이 판사가 되곤 하지요.

우리 국회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좋으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시려고 다들 그렇게 애쓰고 있고 당내 정치나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사실이어서 민망할 상황이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이런 상황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장관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서비스업입니다. 귀천이 따로 있지 않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필요하신 분들이라 그것에 적절하게 맞는 규율과 안전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고 안전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기후부 내에서 대책을 좀 세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부장관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 문제, 남자와 여성의 임금 격차 문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장관님이면 이런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덤벼들어야 되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실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이중구조 해소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건 없으시고요?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외국 나가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는, 혹시 충북 영동에 있는 노근리평화공원에 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저는 한 번 방문을 해서 말씀도 잘 듣고 평화공원이 어떻게 잘 관리되

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영동군에서 중간에 끼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동군의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계약 체결 지연 등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인데 사업 집행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군청과 군의회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관련한 비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직 얘기를 못 들어 보셨으면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담당하는 분들이, 행안부에서도 약간 곤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대한 존중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이 노면 관련 사건은 우리 정부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결을 잘 지어야 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관련해서 좀 알아보셔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님하고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 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두 분께.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사고를 당한 여성들 숫자가 여전히 많아요. 경찰청 통계를 봤더니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신고 건수도 증가했구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가정·교제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들에 폭력이 붙다니요. 남녀 간에 교제하는 데서 스토킹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폭력과 살인.

경찰청장직무대행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최기상 위원** 그 사건의 문제라고 하면 나름의 조치는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조금 개선한 바가 있으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와 우리 112 연계 시스템을 지금 연계하는 그런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연말 목표로 해서 이렇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기상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도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니까 7월에 개발 착수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2월에 완료하실 수 있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지금 대상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그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와 경찰의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매월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최기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단 한 명의 여성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지요. 그 정도 목표는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충실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 나라,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해야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지 다른 자유나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성평등가족부도 과거에 목표 중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최기상 위원** 법무부나 경찰청도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올해 그 예산이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런 범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어땠습니까? 경찰관 증원이나 관련해서 어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따져 보지 못했는데 인력 증원은 확실하게 증원이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인력을 79명 증원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인사 때 120명을 추가로 이렇게 증원해서 피해자, 관계성 범죄에 의한 사건들을 면밀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꼼꼼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경찰서가 몇 개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262개입니다.

○**최기상 위원** 거기에 한 분씩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해도 260명인데,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데 어때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늘려 왔는데 여전히 다른 분야 경찰관 소요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늘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결국은 행안부장관님께 여쭙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경찰의 증원 문제나 예산 문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산은 경찰청에서 직접 편성을 하고 있고요.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경찰 내의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이 한 140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올 하반기에 120명을 추가하기로 한 얘기는 지금 청장한테 들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여성청소년안전국과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정기 직제로 신설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그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꼭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기상 위원** 외교부장관님하고 재외동포청장께 관련해서, 가령 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한 몇십만 명 정도 되시나요, 아니면……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몇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최기상 위원 몇만 명?

○외교부장관 조현 몇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최기상 위원 5만 명이 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있습니까, 재외동포청장님?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나라 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5만 명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행안부장관님? 그래도 조 단위까지 가나요? 아니면 시군구에는, 시군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군구 단위의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최기상 위원 가령 어느 시, 어느 군인데 인구가 5만이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 삼사천……

○최기상 위원 삼사천 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기상 위원 그 나라의 재외동포 숫자가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습시다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재외동포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장을 해 온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이 단기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적절한지 한번 살펴 주시고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하는 영사가 파견돼야 하는데 2, 3년 넘게 파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사인데 왜 안 되고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필요한 곳에는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외동포청의 직원이 영사로 파견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기상 위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직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기상 위원 재외동포청장님 어떻습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과거 동포청이 설립하기 이전에 재외동포재단 시절에 주요 동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곱 군데 파견 동포 전담 영사가 나가 있었는데요 동포청이 설립하면서 실제로 이게 제도가 다 폐지됐지요. 그리고 나서 금년부터 다시 동포 전담 영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LA와 북경 두 군데는 새롭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포 주요 밀집 지역에는 기존에 재외공관의 영사가 동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데 동포 밀집 지역에는 업무가 대단히 과중해서 동포 민원 처리나 소통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밀집 지역에는 실제로 동포 전담 영사가 파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

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나 행안부랑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최기상 위원님 묵직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 서울 관악을 정태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정태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행복한가 늘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을 던져 본 적 계신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개인적으로는. 전체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던져 본 적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덜 행복한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웃음소리)

○정태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많이 보는 데이터지요. OECD 38개국의 행복도 비교해 봤는데 보면 한국은 38개국 중에서 33위, 늘 바닥에 놓여 있지요.

다음 것을 한번 보실까요?

국가데이터처…… 통계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외로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38.2%가 ‘외로움을 느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지요. 거의 40%, 10명 중에 4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OECD에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20% 가까이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을 텐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하고 선진국 비교해 보면 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그런 어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거지요.

실제로 제가 관악구인데 어떤 청년이 청년지원센터를 찾아왔는데 밥을 좀 사달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일 동안 굶었대요. 굶었는데 이유가 뭐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는 거지요.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지도조차도 이제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한 대한민국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행한 국민들. 그런데 너무 비참하니까 성공한 대한민국의 덜 행복한 국민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얻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또다시 양극화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유엔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총리님께서 어저께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답은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그 답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제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이미 스물아홉 번째,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그리고 그것은 주관인 국무조정실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80차 유엔총회에 가셔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 공동의 약속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신다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유엔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발전 평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31위, 24년 33위, 25·26 34위입니다. 국제과급 효과는 124, 128, 129, 140위. 정말 형편없지요. 이런 평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19년에 18위였던 게 지금 대한민국이 34위까지 떨어졌어요, 지속가능발전지수에서.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에 있어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빈곤, 그러니까 사회적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빈곤, 불평등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순위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포용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대통령님께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지만 기후정상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가셔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최근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발전위원회 소속이 대통령 소속인데 그것

총리 소속으로 변경한 걸로 결정하는데 알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관련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저는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또 세계적 의제가 대통령께서 딱 힘을 가지고 그림을 쥐고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총리님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결정했다면 총리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동안 회의조차도 안 되고 아마 9월 달쯤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 또 임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준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옮긴 것에 관련해서 보고받으면서 들었던 것은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랑 추진단이 지금 현재, 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 있고 그리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 있어서 추진단과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해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들이 어떤 부분이 낮고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봤는데요. 성평등이나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해양생태계, 육상 생태계 관련된 부분 또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표를 점검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도 대단히 느슨하고요. 심지어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조차도 아주 모호하게 돼 있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도, 추진단은 있는데 그거는 국무조정실 소속이고 위원회를 위한 사무국도 없고 여러 가지 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 위 소관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결국 이제 재정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인데 이론상으로 재정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와 경제안정 및 성장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재정은 결국은, 저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그냥 하나 쉽게 정리하면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재정이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득분배 재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 대단히 안 좋은 평가입니다.

23년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다. 시장소득 부분에서 재정이 들어가서 재분배되는 걸 개선할

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29개국 중에서 28위입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데는 48.4%로 나오고 바로 우리 위에는 20.9%인데 우리는 1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재정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례적인, 정기적인 평가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장관님, 재정의 소득분배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로서는 그런 자료나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정부가 재정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우리 재정이 제대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조차도 안 해 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드리는데 소득재분배인지예산 이런 용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부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이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리는데 예산처장관님,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계실 때 사실은 마지막 123대, 원래 122개로 그칠 뻔했던 것을 마지막에 제안도 해 주시고 제가 밖의 얘기를 들어서 넣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평등 부분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생겼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부가 그동안 별도로 존재하면서 거버넌스로서의 위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만큼 저희들도 혹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소득재분배인지예산 등 저는 불평등인지예산이건 또는 소득재분배인지예산이건 검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회 일각에서 이제 우리가 GDP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서 행복지수, 행복총량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입법도, 아마 윤호중 장관님이 당시 그 모임을 이끌면서도 내신 바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의원분 중에는 소득재분배인지예산 제도라는 거를, 그런 개념으로 법을 냈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날의 소득불평등이 사실은 대단히 복합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리는데, 2013년에 소득 하위 20%의 암검진을 그러니까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인데 2013년의 경우에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암검진율이 약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2023년에는 이게 18.9%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암검진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건강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돈이 없었을까, 조사를 해 보니, 사실 이 자료

는 그저께인가 나온 자료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검진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확보해 주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면 그 재검진 비용을 대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장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 대책은 제5차 암 예방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주로 홍보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런 불평등 구조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소득불평등이 자산, 교육, 주거, 건강으로 일종의 연쇄 악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요.

정부는, 아까 기획예산처장관 말씀하셨는데 불평등과 관련된 업무가 각 부처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어, 현재의 불평등 구조는 대개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부처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통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정부 부처는 이렇게 개별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따라서 통합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측정과 총괄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는 2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나라 그다음에 국민소득은 4만 불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옛날에 한 1000불 시대, 2000불 시대보다는 불만족도…… 행복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특히 AI 시대로 가면서 더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감 이런 쪽에, 또 자산 격차 이런 쪽에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원님 발의해 주신 불평등 완화 기본법, 완화가 아니고 저는 불평등은 아예 그냥 진짜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라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 세 번의 민주당을 거쳐서 지금 네 번째 민주당에 있었고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라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60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서울에 10개 대학교를 가고 그 10개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를 다 차지한다. 부의 세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부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민주당이 경제성장, 특히 IT와 그리고 지금 AI까지 그러면서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 이 모든 것에서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또 젊은 세대에게 부의 세습 구조를 넘겨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말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서 청년

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묵직한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법원행정처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추천에 대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굉장히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장의 사실관계 파악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손봉기 후보를 말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손봉기 후보는 누구의 후임입니까? 노태악 대법관이지요. 노태악 대법관은 3월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우리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언제 열렸습니까? 아마 그 전에 열렸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1월쯤 열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1월에 열렸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4명의 후보가 대법원장에 추천이 됐지요? 그중에 손봉기 후보도 들어가 있고 김민기 후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러고 나면 대법원에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후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때 민정수석실이 주요 소통창구입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서로 소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당시에는 제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어서 아마도……

○유상범 위원 있지는 않았지만 소통을 해 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손봉기 후보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를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한 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그마치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용구 대법관이 임기 만료되기 직전에 또다시 김성수 후보가 추천됐지만 이 당시 손봉기 후보 추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정수석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대법원장의 입장을 다 전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법원행정처장 계실 때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유상범 위원** 대법원장의 추천하겠다는 제청권의 행사를 위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에 대한 반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헌법적인 검토를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뭐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결국 합의가 없는 제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 논란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체입니다.

총리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합의 없는 제청권을 수용하지 않겠다, 즉 임명권의 침해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제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로 이해되느냐 하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돌하고 있지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제청을 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제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4개월여, 5개월여 이상을 서로 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협의를 계속 이루어 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대법원장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임명권과 관련된 부분과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렵지요.

저는 이 사안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사법부 장악에 있어서 12명의 대법관을 그 당시에 차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독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대법원은 거의 20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후보를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청권을 형해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사실관계를……

○유상범 위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협의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70년간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사법과동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금까지 잘 진행이 돼 왔어요. 지금 사실은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제청과 임명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즉 사전조율이나 이와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관행이지요.

그러면 이 관행이 법률의 위에 있습니까? 모 언론에서는 관행이 법률의 위에 있다는, 우위에 있다는 그런 황당한 기사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법률에 있는 절차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관행이 발생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국회가 그동안 지켜 온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관행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관행이 깨지면서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법대로 하자’, ‘국회법대로 한다’. 소위에서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소위에서조차.

즉 관행이 법률의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진짜 독재로 갈 수 있느냐, 즉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닦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러면 제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정책펀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를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책펀드는 어떤 내용의 펀드입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벤처나 신사업, 스타트업 또는 바이오나 농식품에서 마중물을 마련해 주고 유망한 기업을 키우면 거기서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 재투자하는 순환형 펀드가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펀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6년도 16개 부처에서 3조 54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해 보니까 40개의 정책펀드와 1257개의 자펀드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써 이 펀드를 만들 때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수조 원의 세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또 회수한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고 저희 당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자료이니 이것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어 보시고…… 세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펀드니 창업펀드니 하면서 많은 펀드가 만들어졌습시다만 펀드 10개 중 6개는 실제 정책 목적에 얼마나 투자됐는지 각 부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책펀드의 56%에 달하는 704개의 펀드, 금액으로는 19조 4608억 원어치가 국가가 정해 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고 있는지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투자비율은 각 펀드마다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유상범 위원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중기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직무대행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직무대행 1차관입니다.

○유상범 위원 중기부는 673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1.6%만이 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됐고 교육부는 47개, 우주항공청은 3개…… 이거는 전체 펀드의 세부 실적 자체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재산처도 54개 중 44개가 깜깜이입니다. 의무투자비율에 대해서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각 기업에서 회수된 세금이 어디로 다시 투자 들어가는지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2025년 한 해에 4903억 원의 회수재원을 다시 출자했다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문제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신규 예산과 섞여 있어서 어느 자펀드에 회수금이 들어갔는지 구분할 수 없다’.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회수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가는 명백히 재정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처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세 번째, 기존재원이 수천억씩 남아 있는데 매년 또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가용재원이 1649억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출자액 550억 원을 또 넣었어요. 즉 신규 출자액의 3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위의 혁신성장펀드도 가용재원이 4888억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중기부의 모태펀드 3000억 원 부분입니다. 중기부의 출자대기재원이나 회수 잔액을 보면 남아 있는 돈이, 6926억 원의 가용재원이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신규 조성한 펀드가 넥스트 유니콘펀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2005년 당해 기업 투자는 제로입니다, 기업 투자액 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25년 말……

○유상범 위원 2025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나 2026년 3월까지 낸 게 63억 원에 불과합니다.

추경으로 모태펀드 3000억을 냈다는 것은 그해 그것을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유상범 위원 아니,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우리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 대안을, 이미 언론 보도를 낸 것 잘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말씀 듣고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유상범 위원 첫째는 신규 출자 전 기존 가용재원이 우선 소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칙은 예산안 편성 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각각 운영 중인 운영기관 중 주목적 투자 실적의 정기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 맡겨 놓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셋째는 적어도 신규 예산과 회수재원을 분리 계리해서 그 내용이 적어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본회의 심의 전까지 통합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예결위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광범위한 정책펀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그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정책펀드가 한꺼번에 다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방치하는 재원들은 아니고요.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보통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고 회수하고 재투자하고 이런 반복되는 구조를 밟으면서 투자처 중에서 우수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재정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의무투자 이행 여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성된 목적에 따른 의무지출, 의무투자를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관리보수 삭감한다든가 이런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시점에는 투자 전망은 맞습니다, 2025년 말. 그런데 2026년 1월에 펀드 결성이 완료됐습니다, 1월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청산 완료된 펀드의 경우에 의무투자비율을 제가 봤더니 9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오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님, 중기부에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요, 그건 다음에 하고. 다음 부별 질의 때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단서로 우리가 받은 자료를 판단해서 분석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질의가 남아 있는데 간단히……

감사원장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에 사용하는 거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실제 수행자에게 활동비가 지급돼야 됩니다. 맞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기밀 유지성이 낮은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그걸 쓸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유상범 위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제출 내역을 잠깐 보여 줄까요?

감사원 특수활동비 여기서 보면, 감사원 과거에 특수활동비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적절히 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필요한 동향을 청취한다든가 정보 제공자를 면담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과거에 감사원이 특수활동비를 일반 전 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일괄 배분하던 양식은 다 없어졌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유상범 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 보실래요? 2025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한번 봐 보시지요. 취약계층 대국민 격려 한번 봐 보세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위로, 격려, 위로.

감사원장님, 감사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적절한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

정한 특수활동비 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원장 김호철** 제목이 그리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정보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유상범 위원** 아니요, 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무슨 정보활동을 합니까? 아무리 답변이 애매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지적하신 거 맞아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또 내년 예산까지 지속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서부터 위로, 격려에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다른 기관은 제대로 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원장 김호철** 저희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는 14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내부통제체계와 집행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통해서 집행비를 사용하는지 그런 체계들을 보았고 그런 체계와 지침의 구비 같은 것들은 문제없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글썄요, 감사원장님, 저런 내용을 가지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영혼이 없는 답변 아니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장님, 죄송한데 중기부 1분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투자 실적 관리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산펀드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투자 목적, 투자 종료 펀드까지 포함 시에는 전체 95%, 투자 목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추경 펀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 벤처투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넥스트 유니콘 펀드를 조성하게 됐고 이런 정부 투자를 통해 민간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금년 상반기 8.9조 원, 역대 최대 투자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회수재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회에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청산펀드만 제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 아니에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했으면 이런 논란이 발생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청산펀드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기벤처부는 유상범 의원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위원님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국무총리님 또 복지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또 검찰총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었으나 총리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백선희 위원 8월 5일에 천안에서 11살 장애아동이 학대로 인해서 숨진 사망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망하기 전에 이틀 연속 이 아이가 경찰에 가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며칠 뒤 고열과 또 의식 저하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3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이 아이는 국가 보호체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에 대한 주무부서인데요. 이 아이는 21년과 2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에 이 일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특히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다.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는 이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를 했냐면 가해자인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또 아동학대 피의자로 구속 송치된 교회 목사에게 아이가 안전하냐고 묻는,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멍이 든 채 경찰서로 달려가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아이를 위해서 법원에 분리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다. 그런데 경찰은 이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았습다.

법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는 반복된 학대 신고가 있었고 아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아이인데 그런데 외할머니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 피해 아동에 대한 별도 보호조치 하지 않았습다.

지자체, 지자체는 이러한 아동보호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천안시는 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쉼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동수당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급여를 받는데, 이렇게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급여만, 현금만 주었지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돌봐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피의자로 구속 송치된 그 목사가 바로 이 아이를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하는 복지당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국가 보호체계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각 주체는 각자 자기 역할을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위험신호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위험의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봐 주지 않았고 누구도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이는 대한민국 우리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향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만 우리들은, 우리 국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무총리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무총리께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부처에서 갖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을 해야 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동보호체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아이를 한 명도……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님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복합 위험신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대 경험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말씀 듣고 내용도 보고받으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 속에 그리고 우리의 정책 속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정책이 굉장히 분절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면 교육부가 담당하고 다시 귀가하면 또 어디가 담당하고 어디가 담당하고 계속 주무부처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요즘 굉장히 많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각 부처들은 해당된 굉장히 많은 현안 속에 있고 또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도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되고요.

국무총리실에도 오늘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국무총리 담당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니 법적인 위원회만 67개가 있고 또 매일같이 새로운 TF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순간에도 또 만들어지고 하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50일 동안 TF 하나씩만 보고받아도 못 받을 정도의 양들인데요.

그 과정에 왜 이렇게 국무총리실에 요즘 TF가 많아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라는 요구들이 있고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들은 챙겨서 우선 이 건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돌봄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성평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할까라는 논의를 세 부처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수성구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박홍근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측에서 굉장히 많은 불안과 말씀이 많을 텐데 그때는 최고진 장관님이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은 하시되 이제는 교육현장에 넘어간 문제는 최고진 장관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당연합니다.

○이인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윤호중 장관님,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보니까 지방우대지수 그 산식을 잘하셔서, 지금 지역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인선 위원 윤호중 장관님, 교육위 상임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교육을 떠나서 반도체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팍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까 한숨 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완벽하게 준비했던 행정통합이 결국은 전남·광주가 먼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구·경북은 조금 박탈감이 있는데다가 반도체가 너무 급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하였고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1차 패키지를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65만t의 용수와 6.3GW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총리님, 7월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들으셨겠네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이인선 **위원** 그러면 이제 보고를 들으셨는데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책의 최초의 입안자가 대통령님이다, 국무위원이다, 여당 국회의원이었다, 기업 회장이었다, 아니면 모르는 비선실세다,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장관이 상임위에서 답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김정관 장관님 지금 안 계시지요? 차관님 계시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산업부차관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8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김정관 장관님이 정부가 반도체 공장부지를 제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됐는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압박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호남을 최적 입지로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환 장관님 나오셨지요?

짧게 묻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인선 **위원** 결국은 여기에 전력과 물이 문제가 되고 인재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전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력이 말하는, 간헐 문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문제가 되지요? 신재생에너지로 이걸 다 메울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입니다.

○이인선 **위원**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

○이인선 **위원** 재생에너지로 다 문제가 되나요?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호남에는……

○이인선 **위원**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호남에는 영광에 한빛원전 6기가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호남에 있는 전력을 다 모으더라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ESS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한빛원전과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합하면 호남에 지어질 반도체 4개에 대한 전력 공급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데요.

장관님께서서는 평소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지금도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쓰는 게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에너지믹스를 얘기했잖아요. 원자력, 수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은 그때 국회의원일 때는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장관 되시고는 지금 이제 동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력·용수, 용수 문제도 장관님께서 용수에 대한 발표를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인선 위원 그때 발표를 하시면서, 7월 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댐의 물과 결국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까지 끌어들여서 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쨌든 호남 반도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력·용수·인재 다 끌어와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급조된 임시방편의 계획들이 과연 2029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전력·용수·인재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지방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지방 중에도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공장이 들어가게 됐고 그곳의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전력과 용수 때문에 반도체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영덕의 원전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지금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이광재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관성 있게 점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늦은 밤까지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26년, 올해지요? 올해 1월 29일 날 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기억이 있으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정혜경 위원**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맞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를 정부가 알아주는구나,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정부가 알아주는구나라고 하는 그 오래된 상처와 한 이런 것들이 그날 진짜 봄눈 녹듯이 녹은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회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함께하셨던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그날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서 수많은 감동을 느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정혜경 위원** 그리고 정말 아주 어렵게 서로 서로 타협하여서 당시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행령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정혜경 위원** 그래서 시행령이 당초에는 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27년 7월까지로 연기를 했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7월.

○**정혜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행령이 27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정말로 7월 1일부터 우리 학교 현장의 노동강도가 바뀔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고 혹시 미뤄지는 건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실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우려가 좀 보였어요. 염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시행령이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원래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학교현장에 곧바로 배치기준이 하향 조정이 되어서 업무의 노동강도가 저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합의되었던 정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되는 것으로 보면 교육부는 28년도에 시행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배치기준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함께 합의했었던 그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이것을 그대로 27년 7월 1일 자로, 아니면 진짜 조금 더 하더라도 사실 2학기 개학 때부터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는 효능감 있게 그 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노동강도가 완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9월 1일 개학이 될 때부터라도 사실 이것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날 급식법을 통과시켜 주셨을 때 급식노동자들도 우리 교육공동체의 아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배치 기준, 배치 기준 연구를 올 11월 끝나는 걸로, 11월까지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대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 기준하고, 이것 적정 배치 기준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노조나 그 단체의 연구가 완성되기 전에……

○**정혜경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도 그 시행령대로 학교 현장에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도교육청까지 이 준비가 완료되고 예산까지도 반영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유념하셔서 예산편성과 실제로 시·도교육청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저희는 시행령 마련을 7월 1일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준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취지고 실제로 학교급식법 통과와 취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6개월이 다시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스란히 또 누가 받는가라고 하는 데서 저는 정말 말로 이재명 정부가 산업안전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김영훈 장관님도 매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산업안전,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 바라보는 것에서 사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 합의 정신, 정말 오래된 숙원 아닙니까, 이것? 그것을 교육부가 능장 행정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되거나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같은 마음이고요.

○**정혜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도교육청까지 지도하셔서 가지고 반드시, 올해입니까? 내년 하반기네요. 내년 하반기에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개정사항이 내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예산도 확보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늦어지더라도 2학기, 9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군위원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질의한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예결산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여태껏 군부대 이전 문제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주로 육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 범위가 1조 원 내외로 이루어졌고 거의 다 군부대가, 도심지 안에 있었던 군부대가 외곽지로 나가면서 기부하고 양여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기부대양여 방식이었습니다.

예산처장관님, 지난 8월 21일에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브리핑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확한 규모는 언론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며칠 후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재정부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근거하여 저희가……

○**강대식 위원** 보통 언론에서는 100조 플러스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정도 추측을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광주통합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재원을 활용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특별시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 혹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은 네 가지 분야, 성장엔진, 지방이 아마 해당될 텐데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만 성장엔진 3대 메가프로젝트일지라도 법령이 정하는 인프라 구축 등에 저희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산단 조성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교통, 진입도로, 전력, 용수와 관련된 부분이 해당된다면 저희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구윤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2026년도 예산안 통과할 때 TK신공항법에 관해서 여야 합의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만들었던 부대의견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강대식 위원**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장관님, 이 부대의견은 전혀 실천을 지금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이게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구·경북이 진짜 주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대식 위원** 그래서 3000억 규모의 공자기금도 신청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 정부는 지금 묵묵부답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공자기금 신청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전하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진짜 대기업을 좀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강대식 위원** 그것을 지자체에서 노력을 안 한다고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그런 게 좀 약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지요.

조금 더 하시는……

○강대식 위원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과연 12.5조나 되는 기여의 재정 규모를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께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이게 출발점은 대구·경북 모든 사람들이 뽕뽕 뽕뽕 가지고 거기에 있는 꼭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또 지방정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이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도 논의가 좀 따라야지만 이게 동력을 받습니다.

○강대식 위원 여태껏 대구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의도 하고 좀 부탁도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부대의견까지 줌…… 부대의견이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조금 달렸고 이런 데 이 부분까지 아직 묵묵부답이다 하면 장관님께서 너무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안타깝고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진짜 저도 많이 하고……

○강대식 위원 고민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뭐 하나라도 가시적인 게 보이지를 않는 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손뼉이 마주쳐져야 됩니다.

○강대식 위원 총리님!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강대식 위원 ‘이재명은 합니까’라는 구호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강대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나올 때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은 참 구호는 좋았는데 정말로 아무런, 대구·경북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기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만 총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종합정책질의까지 첫째,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사업비 확보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광주 군공항에 적용되는 모든 방안 중 대구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방안 셋째,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로드맵 등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보셔서 이 부분 11월까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재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총리님, 어제 국가채무 국가부채 때문에 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재

명 정부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국 지금 나라 빚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 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연 120만 원씩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 기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나경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1인당 120만 원, 그래서 대상이 증손자녀까지 723명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이런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임진왜란 유공자도 만들지’.

보훈부장관님, 6·25 참전 유공자 1년에 얼마 드립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월 49만 원씩 나갑니다.

○나경원 위원 월 49만 원씩이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나경원 위원 저는 6·25 참전 유공자, 제1·2 연평해전, 우리 많은 유공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학농민혁명 후손 증손자에게 주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전라북도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획예산처장관이 아실까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방비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나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앞에서는 국가채무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아니, 제가 나라 빚도 이런데 지방 빚도 이렇게 되고, 결국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23.32%입니다. 그러면 나랏돈 들어가지요, 전라북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부세를 통해서 가는 교부 단체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저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돈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가채무 관련해서 아까부터 도입 부분도 그렇고 좀 전에도 그런데 채무를 맡고 있는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나경원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기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사실관계가 뭐가 다른니까?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라 빚도 늘어나는데 지방정부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

린 거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늘어난다고 하십니까만 마치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우 잘못된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발언 이십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뭐가 매우 잘못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재** 그렇게 하세요. 나경원 위원님, 국가부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기획예 산처장관님……

○**나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 빚이 증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광재** 예,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먼저 나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나라 빚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광재** 제가 드릴 테니까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국방부장관님,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일부……

○**나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난 6월 하순경으로 기억됩니다.

○**나경원 위원** 6월 하순경?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부터 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발표 난……

○**나경원 위원**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회의 하기 전에 시작을 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그 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 는 데……

○**나경원 위원** 그러면 발표가 먼저 되고 이렇게 후에 한다면 결국 협의하는 게 좀 어 렵지 않겠습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부장관께서는 물 문제나 용수 문제 나 전력 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의 조건도 성취되기 어려운데 또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실질적 으로 보면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 제7공군 박살 내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호남 전당대회 앞두고, 광주 전당대회 앞두고서 민주당의 핵심 시민단체 에서 제7공군 박살 내자, 주한미군 철수 끌어내고, 철수 나오고 대통령은 속도전 전격전 지시하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도대체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주한미군 철수가 본심인지 호남 반도체가 본심인지 저희가 걱정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장관께서는 합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 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장관께서 사관학교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자꾸 뒤에서는 서로 소리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 부분은 우리 민주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광재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협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이 괜히 또 주한미군 철수나 반미로 간다면 안 그래도 한미 관계가 지금 안 좋고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한미 간에 더 이상의 파탄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부채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국방부장관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님부터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하나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는 국가채무의 속도만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지출이 효율적이나 또 GDP는 성장하고 있느냐, 이자 지출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채 규모는 어떠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부채의 절대 수준 또는 상환 능력 이런 것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국가채무만을 절대시 여기면서, 최우선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던 윤석열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축의 악순환을 명징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채무 관리를 우선시 두고 경기 둔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무려 100조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것은 결국은 재원을 불용 또는 집행을 지연하게 하면서 성장률을 하락시켰고 수지·채무를 악화시켰습니다. 불과 우리가 2년 전에 똑똑히 봤던 그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GDP 대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자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정도 수준입니다. 주요국 대비 결코 높지 않습니다. 5년간 증가 폭도 낮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정확히는 0.46%p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0.8, 일본이 0.9, 미국이 1.2% 정도입니다.

세 번째, 부채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요 절대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GDP 대비, IMF가 발표한 겁니다. 2026년도 올해 한국이 54.4로 얘기를 했는데 G7이 123.8, G20이 83.6, OECD가 71.3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있었

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난 정부 3년 동안 감세와 세수결손에 기인한 부분이 큼니다.

저희는,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이 공개될 텐데 저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소위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적극재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바로 성과, 즉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이 선순환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전 정부와 비교할 정도로 저희가 확연히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윤석열 정부, 그 전 어떤 정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25조의 재량지출과 2조의 최초의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조정도, 그래서 지출 조정도 동시에 꺾하고 있는 역대 정부 최초의 그런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기획예산처장관 말씀하셨는데 어제 박수영 위원님께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D1·D2, 그러니까 국제표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야가 바뀌게 되면 국가부채의 기준을 달리하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기획예산처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하실 말씀 계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신중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우리가 국회에서 서로 날카롭게 질문하고 방어도 하고 혼도 나고 서로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상북도 김천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국가채무에 대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말씀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OECD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굉장히 낮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냐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늘 그것을 많이 지적합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장관님,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국가채무는 별도로 취급하는 게 그동안의 국제관례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지금 속해 있고 그중에서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이 문제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다 오케이되고 다 괜찮다 하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만간에 발표할 예산안에 그 속도 또한 다시 어떻게 재조정 되는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송언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이 또 시간 많이 드릴 거예요, 아마.

총리께 하나 여쭙볼게요.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게 총리실에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몇 차례나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와서 회의를, 제가 왔을 때는 자문위원회가……

○송언석 위원 전부 스물일곱 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열네 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라는 게 확인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언석 위원 그리고 18차 회의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을 해 가지고 이걸 심각한 문제가 있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그때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냐고 물어보셨……

○송언석 위원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내가 겪었던 안 겪었던, 총리님 조선시대 살았어요? 안 살았지만 우리 역사로 알잖아요.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송언석 위원 총리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선조로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위원님, 그럴 때의 기억은 다른 것 아닙니까?

○송언석 위원 총리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오늘 총리님 하루 종일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진중하게 국가 대사에 대해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안 보여요. ‘이것 잘 모르겠다, 내가 없을 때 이야기다’, 총리님 왜 앉아 있습니까, 거기?

○국무총리 한성숙 ‘제가 없을 때 이야기다’는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언석 위원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든 밤새 공부를 하든 이해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없을 때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그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송언석 위원 그러면 총리가 근무할 때 이야기를 해 볼까요? 모두의 창업인가 개인정보 유출한 것,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총리가 장관 할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노출이 되고—정부 말로는 요새 노출이라고 하데—유출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국무총리 한성숙 설명……

○송언석 위원 거기에 사업 아이디어를 낸 청년들은요 평생을 갈고닦아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아니라 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다 노출돼 가지고 다 도용을 당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정리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총리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 본체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내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제화한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하나의 건물도 지상에 짓지 말라’,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 기억하세요? 몰라요?

○국무총리 한성숙 ……

○송언석 위원 용산공원 특별법 4조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성숙 예, 말씀……

○송언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용산공원을 다 헐어 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성숙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끝나고 난 뒤에 답변 좀……

○위원장 이광재 예, 그러시지요.

○송언석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부총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세액공제, 비과세, 세금감면 등 16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이것 이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17개 과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언석 위원 예산처장관님,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들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4조 정도를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넘겨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오히려 더 거기에 추가해서 한 1.9조까지 반영할 예정입니다.

○송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송언석 위원 내일 질문 다시 드릴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하실 말씀 계시나요?

○국무총리 한성숙 예, 하나씩 다 답변드리기는 시간도 길고 하나씩이요.

오늘의 자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새겨들겠습니다. 제 자세가 그렇게 보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밤을 새우지는 못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모두의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의 창업을 통해서 저희가 유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들을 정확히 했고 그리고 관계 부처와 경찰의 조사도 했고 관련 업체나 그리고 저도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떨어져…… 창업 관련해서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관련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재산처와 함께 특허 관련된 부분들을 보호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끝까지 보호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에 재도전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현재 5000명 정도가 추가하고 있고요. 지금 2기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도 몇천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우려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잘 새겨들고 모두의 창업 청년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 드려야 될지 진심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말씀 주신 부분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건 당연히 제가 듣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이 사용하신 ‘기억’이라는 단어와 제가 사용하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의 기억의 의미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는 링컨 대통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침에 김교홍 위원이 오늘 질의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우리 곁을 떠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이게 오늘의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자살로서 1만 4000명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1만 4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40명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2만 건이 실종이 일어나고 있고 실종자 사망이 1294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500명이면 엄청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상 위원님은 환경미화원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밖의 아이들은 무려 1년에 5만 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 하고 그냥 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국민들은 울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정태호 위원님이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되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세계 최초로 질병보호법을 만든 사람,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법을 만든 사람,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법을 만든 사람, 복지의 기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탄압했던 독일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우리 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러나 그 성장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 길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30초 자료 요구만……

○위원장 이광재 잠깐, 제가 끝내고 하시지요.

질의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선배님.

○송언석 위원 아니, 질의 아니고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광재 자료 요구?

○송언석 위원 예,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재 그러시지요. 말씀하십시오.

○송언석 위원 재정부 부총리께서는 지금 17개 사업이 보니까 세법에서 비과세나 세액 공제를 없애고 재정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사라지는 세액공제나 비과세의 열일곱 가지의 각각 과거 한 5년 치 정도 비과세나 세액감면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내일 질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이광재 지금 산회 시까지 참석한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회의를 마지막까지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늘 마지막에 의례적인 인사 말고 서로 박수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42인)

강경숙 강대식 권향엽 김교홍 김남근 김남준 김선교 김 현 나경원 박상웅
 박수영 박용갑 박정하 朴芝源 배준영 백선희 서지영 송언석 송재봉 어기구
 엄태영 유상범 윤용근 윤재옥 이건태 이광재 이기현 이연희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호선 정준호 정태호 정혜경 조배숙 조인철 최기상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출장 위원(2인)

김성희 전진숙

○청가 위원(1인)

이준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윤국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고용진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한성숙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사회수석비서관 김정자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감사원

원장 김호철

기획조정실장 이윤재

국무조정실

실장 임기근

국무2차장 김용수

국정운영실장 심종섭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채이배

정무실장 서은숙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정책기획관 전영수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외교부
장관 조현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차관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정책기획관 이지성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정책기획관 황의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정책기획관 이준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산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정책기획관 정상용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현수엽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조용범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획조정관 이형석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법제처

처장 조원철

차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안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기획조정관 우영택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기획조정관 양순필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 박현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기획조정관 유재준

관세청

청장 이종욱

심사국장 하유정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기획조정관 장홍태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재정담당관 이창원

병무청

청장 홍소영

차장 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인환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영철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소방청
 청장 최용철
 기획조정관 김재홍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기획조정관 채수희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임영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획조정관 장호연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이정환
 기획조정관 김동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문성요
 기획조정관 정인권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기획조정관 조영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기획조정관 성종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기획조정관 김문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사무처장 신진창
기획조정관 손주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사무처장 양청삼
기획조정관 서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획조정관 김기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사무처장 최수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운영지원담당관 지만석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사무처장 박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기획조정실장 옥미선